



OECD KOREA Policy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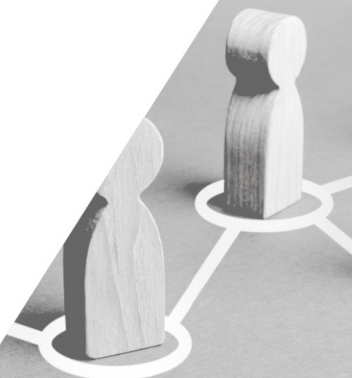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SOCIETY AT A GLANCE

OECD 사회지표 추이 분석

2020. 12.



책임연구자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공동연구진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미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김가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원

이상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남보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연구보조원

모수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주임

「Society at a Glance」 OECD 사회지표 추이 분석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서상목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소 (04195)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전화 02) 2077-3970~3976

홈페이지 <http://knsw.bokji.net>

I S B N 978-89-90381-84-2 93330 (비매품)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제 출 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Society at a Glance」 OECD 사회지표 추이 분석”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서 상 목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제2장	OECD 사회지표 분석: OECD 평균을 중심으로	7
	1. 일반 지표	9
	2. 자활 지표	27
	3. 형평성 지표	46
	4. 사회통합 지표	62
제3장	한국의 사회지표별 분석 및 향후 과제	83
	1. 일반 지표	85
	2. 자활 지표	90
	3. 형평성 지표	94
	4. 사회통합 지표	102
제4장	마무리	107
	참고문헌	113



표 차례

[표 1.1] OECD 사회지표 분류	4
[표 1.2] 연구의 사회지표 분석대상	4
[표 3.1] 한국의 일반지표 변화 추이	88
[표 3.2] 한국의 자활지표 변화 추이	92
[표 3.3] 한국의 형평성지표 변화 추이	96
[표 3.4] 한국의 사회통합지표 변화 추이	104



그림 차례

[그림 2.1.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 변화	9
[그림 2.1.2] 유형별 대표국가의 연간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 변화	10
[그림 2.1.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출생률 변화	12
[그림 2.1.4] 유형별 대표국가의 출생률 변화	13
[그림 2.1.5]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평균 초산연령 변화	14
[그림 2.1.6]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외국 출생자 비율	15
[그림 2.1.7] 유형별 대표국가의 외국 출생자 비율 변화	16
[그림 2.1.8]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이민자 고용률	17
[그림 2.1.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혼인율 변화	19
[그림 2.1.10]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이혼율 변화	19
[그림 2.1.1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한부모가정 아동 비율 변화	20
[그림 2.1.1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인구성장률 변화	22
[그림 2.1.13] 유형별 대표국가의 연간 인구성장률 추이	22
[그림 2.1.1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노년부양비 변화	23
[그림 2.1.15] 유형별 대표국가의 노년부양비 추이	24
[그림 2.2.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고용률 변화	28
[그림 2.2.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고용률 변화 유형 구분	29
[그림 2.2.3] 연도별 주요 국가 고용률 변화	29
[그림 2.2.4] 연도별 주요 국가 고용률 변화: 성별 비교	30
[그림 2.2.5]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실업률 변화	32
[그림 2.2.6]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실업률 변화 유형 구분	33
[그림 2.2.7] 연도별 주요 국가 실업률 변화	33
[그림 2.2.8] 연도별 주요 국가 청년 실업률 변화	34
[그림 2.2.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교육비 변화	36
[그림 2.2.10]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교육비 변화 유형 구분	36
[그림 2.2.11] 연도별 주요 국가 교육비 변화	37
[그림 2.2.12] 연도별 주요 국가 GDP 대비 교육비 변화	37
[그림 2.2.1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LMP 공공지출 변화	39
[그림 2.2.1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LMP 공공지출 변화 유형 구분	39
[그림 2.2.15] 연도별 주요 국가 LMP 공공지출 변화(2004~2017)	40
[그림 2.2.16]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근속기간 변화	42
[그림 2.2.17]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근속기간 변화 유형 구분	42
[그림 2.2.18] 연도별 주요 국가 근속기간 변화	43



[그림 2.3.1]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기반 지니계수	47
[그림 2.3.2] 지니계수 장기 변화	48
[그림 2.3.3] 한국 연령별 가처분 및 시장소득 지니계수	48
[그림 2.3.4]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기반 상대 빈곤율	50
[그림 2.3.5] 상대 빈곤율 장기 변화	50
[그림 2.3.6] 한국 연령별 가처분소득 기반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51
[그림 2.3.7] 실업 시 유지되는 근로 순소득의 비율(순대체율)	53
[그림 2.3.8] 순대체율 장기 변화	53
[그림 2.3.9] 한국 가족유형별 순대체율 변화	54
[그림 2.3.10] 생산연령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56
[그림 2.3.11] 생산연령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장기 변화	56
[그림 2.3.12] 한국 실업급여 성별 수급자 현황	57
[그림 2.3.13]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액 비율	59
[그림 2.3.14]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액 장기 변화	59
[그림 2.3.15] 한국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세부지표	60
[그림 2.4.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사회적 지지 변화	63
[그림 2.4.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사회적 지지 변화 유형 구분	64
[그림 2.4.3] 연도별 주요 국가의 사회적 지지 변화	65
[그림 2.4.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	67
[그림 2.4.5]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 유형 구분	68
[그림 2.4.6] 연도별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2007~2016)	69
[그림 2.4.7]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성별 임금 격차 변화	71
[그림 2.4.8]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성별 임금 격차 변화 유형 구분	72
[그림 2.4.9] 연도별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변화(2000~2018)	73
[그림 2.4.10]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투표율 변화	74
[그림 2.4.11] 유형별 대표국가의 투표율 추이	75
[그림 2.4.1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인터넷 접속률 변화	76
[그림 2.4.13] 주요 국가의 인터넷 접속률 추이	77
[그림 2.4.14] SNS 접속률 변화(2011년과 2018년 비교)	78
[그림 2.4.15] 주요 국가의 SNS 접속률 추이	79
[그림 2.4.16]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 변화	80
[그림 2.4.17] 유형별 대표국가의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 추이	80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사회지표 보고서 ‘한 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를 2001년 이래 발간하고 있다. OECD는 ‘한 눈에 보는 사회’ 시리즈 발간을 통해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웰빙과 추세 변화 등에 관한 지표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이를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함으로써 한국 독자들의 OECD 자료 활용 가능성을 제고해왔다.

이 연구는 ‘한 눈에 보는 사회’에 포함된 사회지표들의 OECD 가입국 전체 및 각 나라별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08-0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집중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변화를 전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눈에 보는 사회’는 OECD국가의 사회적 상황과 흐름을 다루고 정량적 증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한 눈에 보는 사회’는 사회지표들을 UN이 제시한 “압력-상태-대응” 프레임워크와(UN, 1997) 정책 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표 1.1]과 같이 크게 5개 영역, 즉 일반, 자활, 형평성, 사회통합, 보건으로 분류하였다(OECD, 2019).

일반 지표는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지만 사회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자활은 사회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로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참여를 보장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촉진할 수 있다. 자활 지표에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자활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포함된다. 형평성은 또 다른 공통의 사회정책 목표이다. 형평성 지표는 사회적 변화의 결과 또는 소요된 자원의 규모를 비교하는 것으로 주로 가구소득과 기회의 균등 정도, 개인의 자율을 반영한다. 사회통합은 국가 사회정책의 매우 중요한 목표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서로를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보건은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로 이에 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지표는 OECD 보건통계와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OECD, 2019).

표 1.1. OECD 사회지표 분류

프레임 워크	사회지표 영역 및 하위지표			
압력	일반	가구소득, 출생률, 이민, 가족, 인구 추이		
	정책 분야			
	자활	형평성	사회통합	보건
상태	고용	불평등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실업	빈곤	신뢰	HIV/AIDS
		실업급여	여성 폭력	자살률
	기술	지불가능한 주거비	투표	흡연 및 음주
대응	교육비 지출	사회지출		보건지출
	은퇴 후 기대수명			

주) 색깔 표시된 지표가 이 연구에 포함된 지표임.

위 표에 제시된 하위 지표들은 2019년 보고서 기준이며, ‘한 눈에 보는 사회’는 발간 시기마다 포함된 하위 지표가 조금씩 다르다. 이 연구는 시계열 추이 파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 포함된 지표를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 1.1]에서 색깔 표시된 지표에 더하여 이전 발간된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정책 분야별로 다음의 하위 지표를 추가하였다.

- 자활: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 근속기간
- 형평성: 비경제활동 급여
- 사회통합: 사회적지지, 성별 임금 격차

보건영역은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 포함된 지표들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연구의 사회지표 분석대상

	대분류			
	일반	자활	형평성	사회통합
소분류	가구소득	고용	불평등	사회적 지지
	출생률	실업	빈곤	정부에 대한 신뢰
	이민	교육비	비경제활동 급여	성별 임금 격차
	가족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	실업급여	투표
	인구 추이	근속기간	사회지출	온라인 활동

주) 자세한 지표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해당 지표의 절을 참고.

이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의 분석시점을 “위기 직전-직후-가장 최근”으로 설정하였다. 지표별로, 또 국가별로 구체적인 연도는 다를 수 있다. 전체 OECD 국가에 대하여 모든 지표를 분석하기에는 지면 상 한계가 있어 1) 3개 시점에 대한 추이를 파악한 후, 2) 3개 시점의 변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국가와 한국, OECD 평균값에 한하여 장기간의 추이를 제시하였으며, 3) 해당 지표와 관련된 다른 지표들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정부의 역할 그리고 국가 간 질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혁이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탈세계화와 큰 정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전망이고, ‘탈세계화와 큰 정부’라는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사회에 있어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한국경제연구원, 2020). 코로나 위기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연구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지표별 변화를 집중 분석하여 OECD 가입국들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OECD에서 중요시하는 사회정책 지표들에 대해 우리나라와 OECD 가입국들과의 흐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한국의 사회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OECD 사회지표 분석: OECD 평균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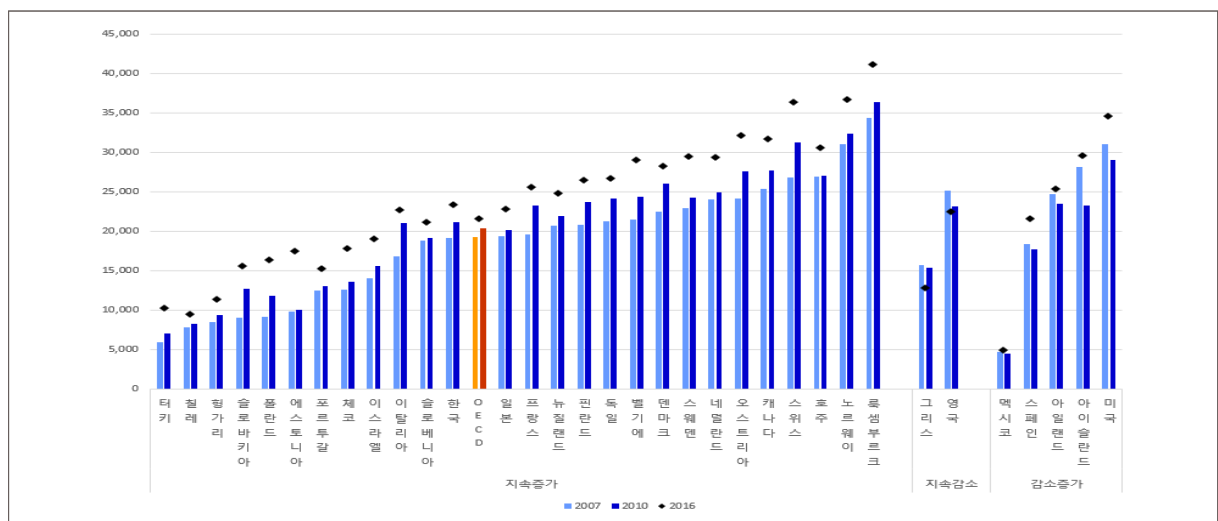
1. 일반 지표

1-1. 가구소득

가처분 가구소득은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에 포함된 각국의 물질적인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이자 빈곤 및 불평등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분석에는 총 39개의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비교를 위해 OECD 평균을 함께 제시하였다. 국제금융위기를 전후한 시기와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비교해(2007-2010-2016년) 각 국가의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유형화한 결과, 지속증가, 지속감소, 감소증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지속증가 유형에는 총 27개국이 포함되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가처분 가구소득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속감소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총 2개국으로 그리스와 영국을 포함하였다. 감소증가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총 5개국으로, 멕시코,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미국이 포함되었다. 한편,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변화 양상은 지속증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그림 2.1.1]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각국의 가처분소득 변화를 유형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1.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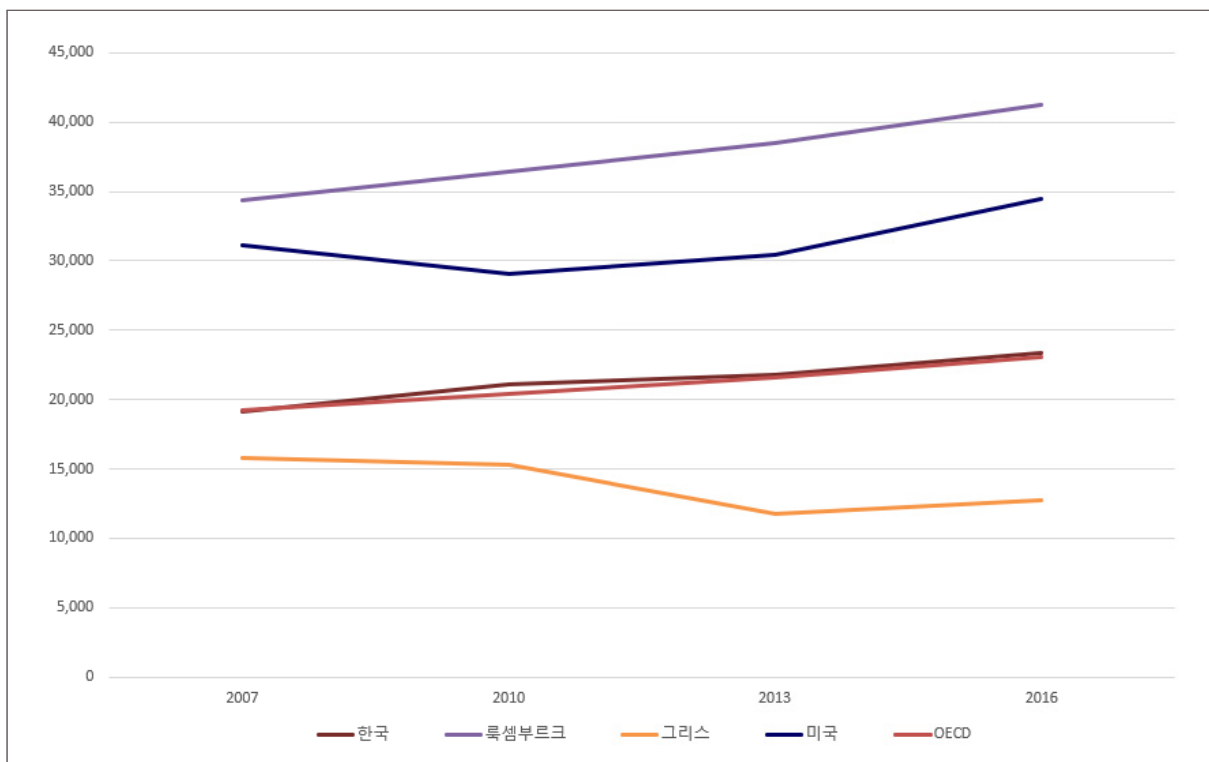


주) 본 그래프는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 사회지표, (2011-2019)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금융위기 전-후-가장 최근 자료인 2007, 2010, 2016년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되었음.

원자료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dc/idd>.

각 유형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의 중위 균등화 가치분소득을 조금 더 넓은 기간에 걸쳐 비교한 결과는 [그림 2.1.2]와 같다. OECD 국가의 중위 균등화 가치분소득은 평균적으로 지속 증가하여 2007년과 2016년 사이 19.8% 상승하였다. 지속증가 패턴을 보인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약 6%p(3년 단위), 총 약 20%p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 역시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2007대비 2016년 총 약 22%p의 중위 균등화 가치분소득의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그리스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중위 균등화 가치분소득이 지속해서 감소했는데,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007년 대비 약 3%p의 감소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2010년 대비 약 24%p라는 큰 폭의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2016년 조사 결과 가치분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금융위기 전인 2007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7-2010년 사이에 약 7%p의 감소세를 경험하였지만, 그 이후 가치분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16년의 경우 2013년 대비 약 13%p 증가해 금융위기 전인 2007년 가치분소득 수준을 초과 회복하였다.

그림 2.1.2. 유형별 대표국가의 연간 중위 균등화 가치분소득 변화



주) 본 그래프는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 사회지표』 (2011-2019)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금융위기 전-후 및 가장 최근 자료인 2007, 2010, 2013, 2016년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되었음.

원자료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dc/idd>.

I 정의 및 측정

연간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한 눈에 보는 사회: OECD 사회지표 (2011-2019 보고서)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되었다. 연도별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는 보고서 발간연도와 차이가 있으며, 본 보고서는 2007(2011 보고서), 2010(2014 보고서), 2013(2016 보고서), 2016년(2019 보고서)에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간 중위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의 원자료는 OECD 소득분포 데이터베이스(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를 출처로 하며, 기존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간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정의와 측정은 아래와 같다.

가처분소득은 공적현금이전 수급 및 직접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후 시장소득(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정부와 민간기관이 가구에 제공한 현물서비스, 소비세, 주택 소유로 인한 귀속임대료 소득 흐름은 배제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 구성원수로 나누었다.

세금을 제하고 복지급여를 더하면 가구소득은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 가구 규모의 제공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눈 균등화 규모로 서로 규모가 다른 가구의 욕구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조정된 후 조정된 소득을 가구 내 각 구성원에게 배정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각국 통화로 표시된 소득 지표를 민간소비환율을 위한 구매력지수를 사용해 미 달러로 변환했다. 이러한 구매력지수는 미국에서 1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것을 각 국가에서 구입하는데 필요한 해당 국가 통화 금액을 나타낸다.

1-2. 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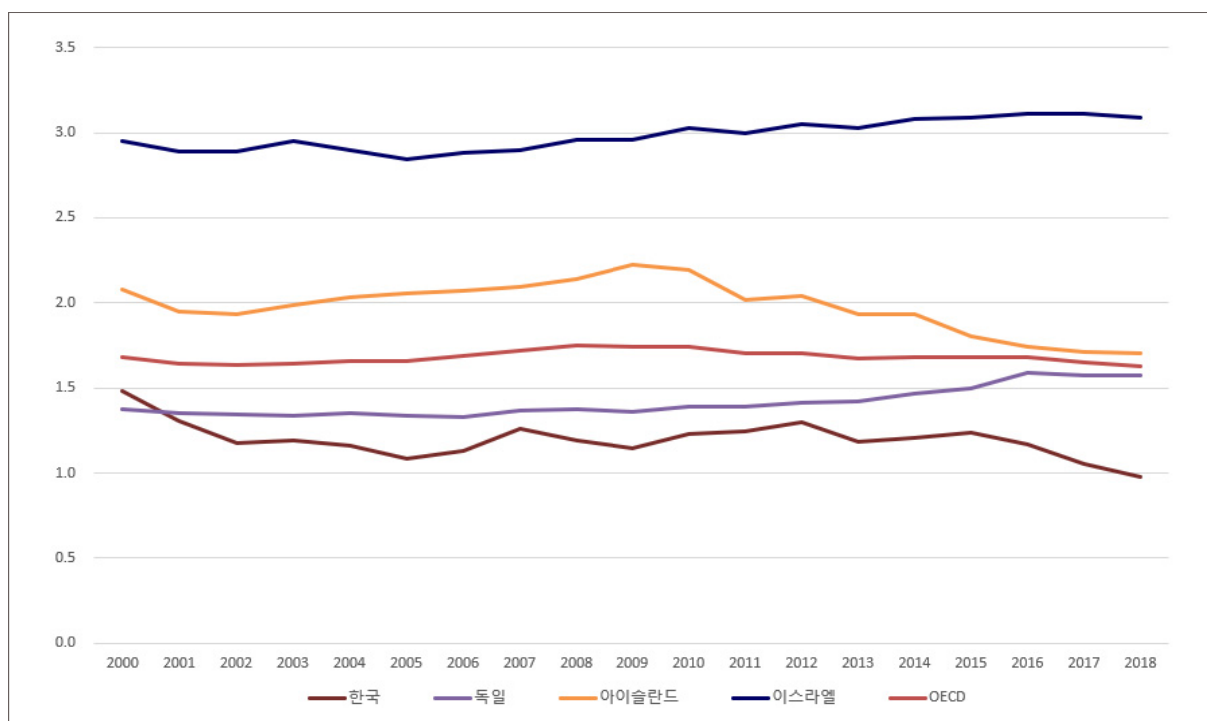
합계출생률은 평균적으로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연령별 출생률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 갖게 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영아기와 아동기의 사망률을 감안했을 때 인구는 합계출생률이 2를 약간 넘어야 유지된다.

국가별 출생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총 52개의 국가를 분석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OECD 평균을 함께 제시하였다. 국제금융위기를 전후한 시기와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비교해(2007-2009-2018년) 각 국가의 출생률 변화를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52개 국가의 출생률 변화는 감소증가, 증가감소, 지속감소, 지속증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감소증가 유형에는 독일과 라트비아의 총 2개국이 포함되었다. 증가감소 유형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이슬란드를 등 총 18개국이 포함되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출생률이 다소 증가했지만 최근 다시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국, 룩셈부르크, 미국 등을 포함하는 총 18개국은 지속감소 유형을 보여, 금융위기 전후로 꾸준한 출생률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007년 대비 약 14%(0.2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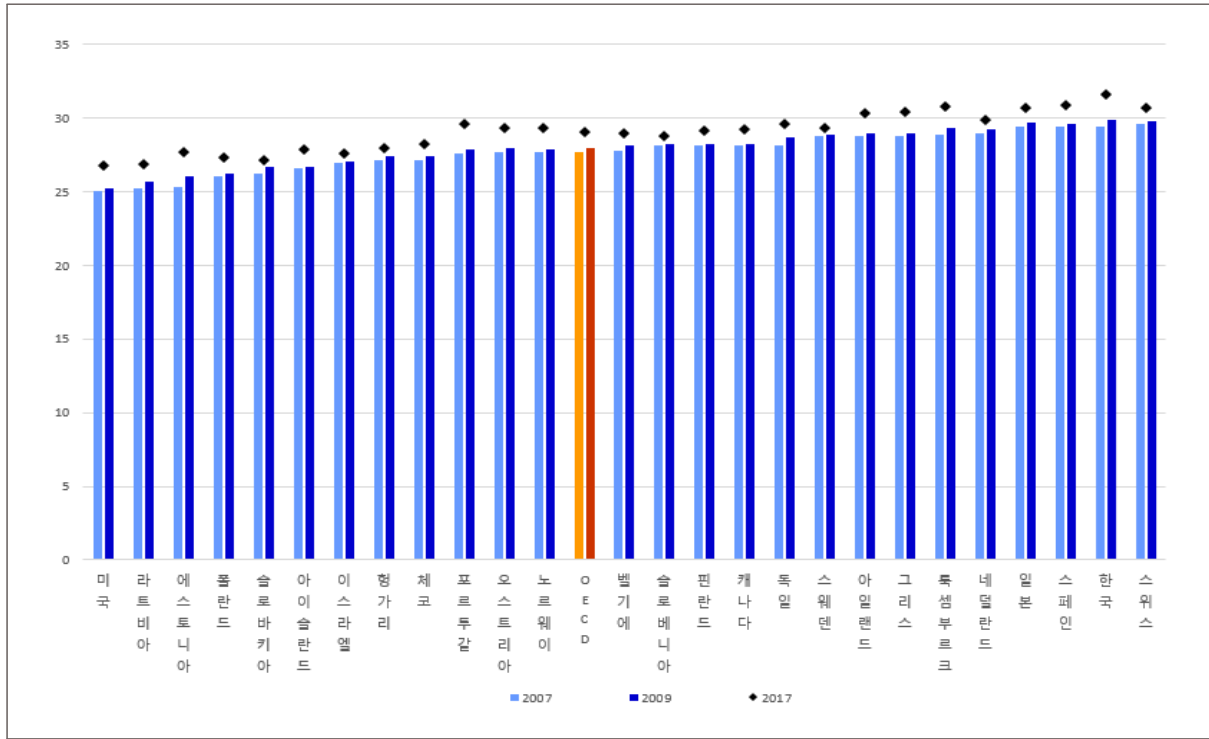
그림 2.1.4. 유형별 대표국가의 출생률 변화



원자료 출처: OECD (2020), "Family Indicators",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국가별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을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해본 결과, 분석에 포함된 총 26개 국가 모두에서 평균 초산연령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초산연령은 2007년에 27.7세에서 2017년 29.1세로 약 1.4세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초산연령은 미국과 일부 동유럽국가(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에서 28세 이하로 가장 낮았고, 유럽(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아시아국가인 일본과 한국에서 30세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서 2017년 사이에 초산 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으로 1.77세 증가했으며, 미국,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역시 초산연령이 평균 1.5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슬로바키아와 스웨덴은 가장 낮은 초산연령 증가를 보여 같은 기간 동안 초산연령이 0.4세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그림 2.1.5.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평균 초산연령 변화



주) 독일은 2007년 대신 2005년 자료, 캐나다는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가 사용됨. 두 개 시점 이상의 데이터가 누락된, Australia, Denmark, Chile, France, Italy, Mexico, New Zealand, Turkey, United Kingdom은 분석에서 제외함. OECD 평균은 분석에 포함된 28개국 자료로 계산됨.
 원자료 출처: OECD (2020), "Family Indicators",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정의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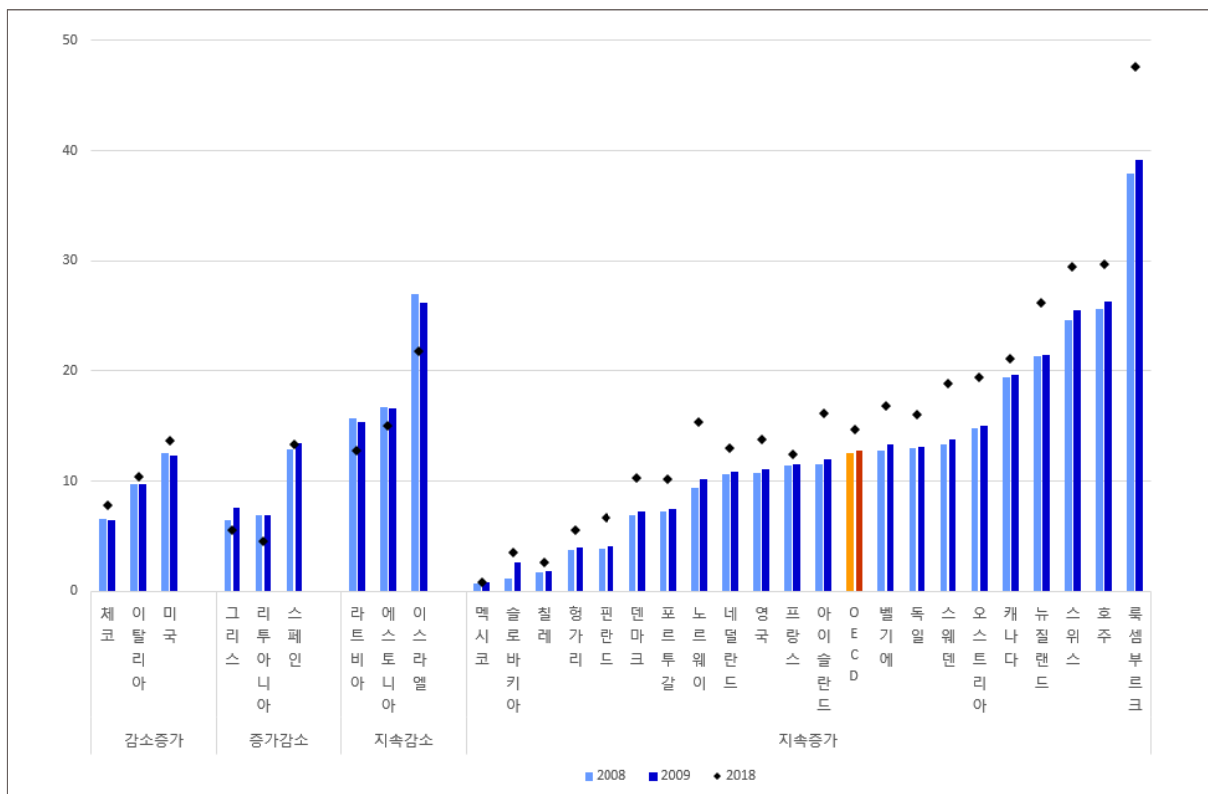
합계출생률은 가임기간 중 여성 한 사람이 갖는 예상 자녀수이다(즉,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현재의 연령별 출생률과 일치한다고 가정). 출생률은 5년의 간격을 두고 정의된 연령별 출생률을 합해서 산출된다. 순이주는 없고 사망률 변화도 없다고 가정하면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생률이 2.1명("대체수준")이면 인구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다. 연령별 출생률은 일정 연도의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 천 명당 출생아 수이다. 여기에서는 5년 단위의 연령집단으로 제시했다. 자료는 UN과 Eurostat 인구 통계 및 각국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OECD Family Database)를 출처로 한다.

1-3. 이민

OECD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외국 출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08년 12.5%에서 2018년 14.7%로 10년간 약 2.2%p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인구 내 외국 출생자 비율은 룩셈부르크,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생자였다. 반면, 멕시코, 칠레,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는 인구 내 외국 출생자 비율이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전후한 인구 내 외국 출생자 비율 변화는 감소증가, 증가감소, 지속감소, 지속증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그림 2.1.6). OECD 평균을 비롯한 대다수의 OECD 국가(21개)에서 인구 내 외국 출생자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들 국가들 중에서도 룩셈부르크가 가장 큰 외국 출생자 비율 증가세를 보였다(9.7%p 증가). 반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의 경우 인구 내 외국 출생자 비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였다. 체코, 이탈리아, 미국의 경우 외국 출생자 비율이

그림 2.1.6.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외국 출생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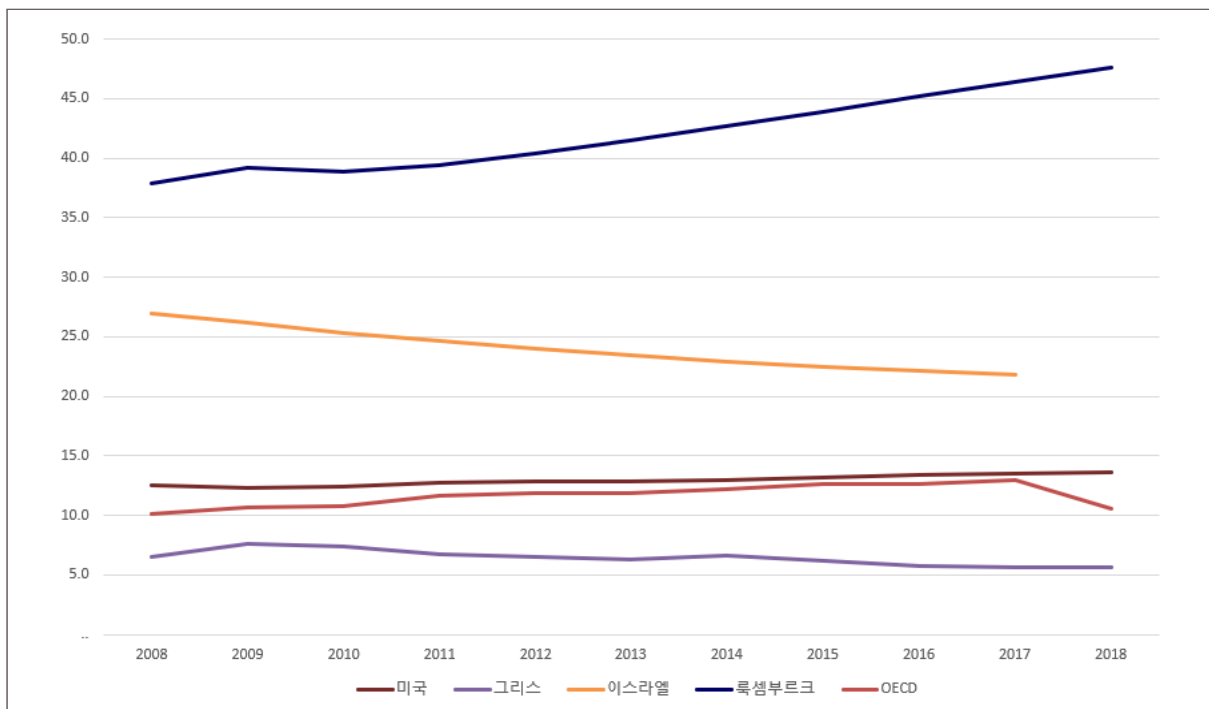
주) 두 시점 이상의 자료가 누락된 Ireland, Korea, Japan, Poland, Russia, Slovenia, Turkey는 분석에서 제외. Italy는 2009, 2010, 2018년 자료 사용. Slovak Republic은 2008, 2010, 2018년 자료 사용. 2018년 자료 대신 Canada, Czech Republic, Israel, New Zealand는 2017년 자료를, Chile, Mexico는 2015년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2020).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https://www.oecd.org/els/mig/keystat.htm>

금융위기 직후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리투아니아, 그리스, 스페인은 2008~2009년 사이에 외국 출생자 비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인구 내 외국 출생자 비율이 많게는 2.4%p(리투아니아), 적게는 약 0.9%p(그리스) 감소했다. 다만, 스페인의 경우 변화폭이 미미해 결과적으로는 2008년 대비 2018년 인구 내 외국 출생자 비율은 약 0.5%p 증가했다.

인구 내 외국 출생자 비율 변화를 유형별 대표 국가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1.7]과 같다. 전반적으로 외국 출생자 비율이 높았던 나라들에서 변화의 폭도 크게 나타났다. 외국 출생자 비율이 높았던 룩셈부르크의 경우 증가 정도가 가장 큰데, 지난 10년간 외국 출생자 비율이 약 9.7%p가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인구 두 명 당 약 한 명 정도가 이민자였다(약 47.6%).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2008년에는 외국 출생자 비율이 27%로 높았으나 2009년 26.2%, 2017년 21.8%로 10년간 약 5.2%p 감소하였다. 감소증가 유형의 대표국가인 미국과 증가감소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인 그리스의 경우, 10년간 변화 정도가 약 1%p 수준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 0.1%p의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고,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다시 외국 출생자 비율이 증가했지만, 그 정도는 약 1%p에 그쳤다. 그리스의 경우 2008년 대비 2009년에 외국 출생자 비율이 약 1.1%p 증가한 7.6%였지만,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09년 대비 약 2%p 감소한 5.6%로 조사되어 금융위기였던 2008년의 6.5%보다 낮은 외국 출생자 비율을 보였다.

그림 2.1.7. 유형별 대표국가의 외국 출생자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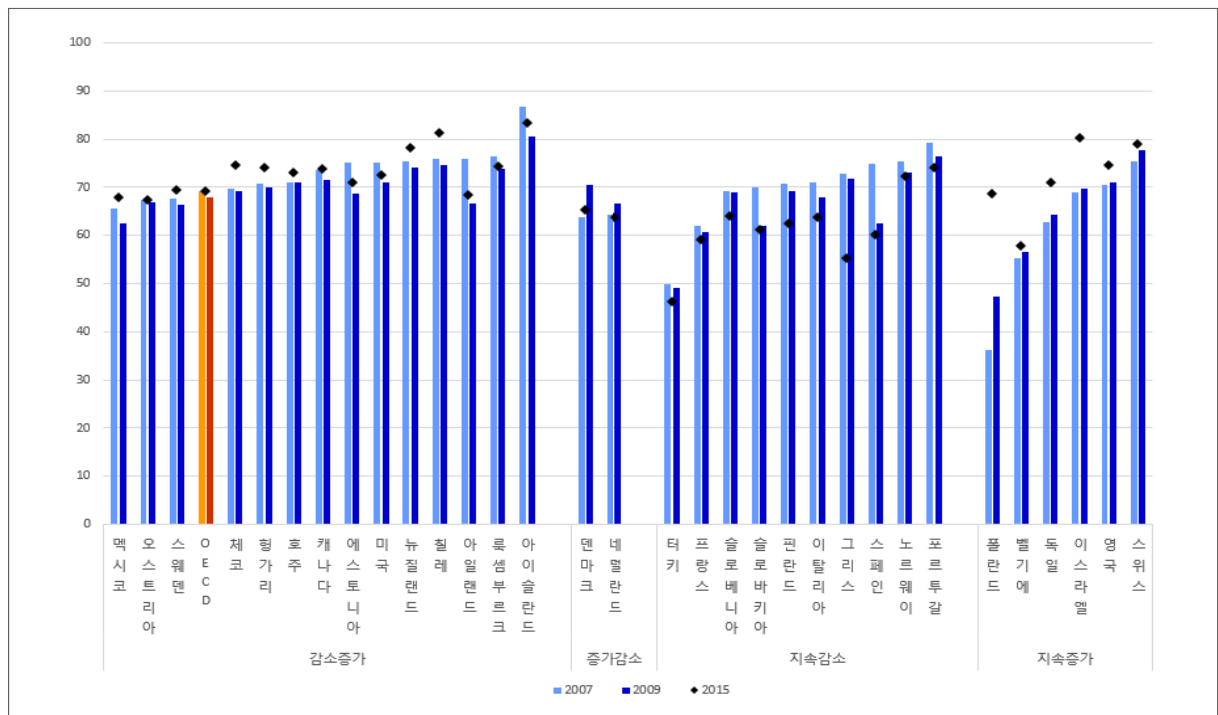


주) Israel은 2018년 자료 누락.

원자료 출처: OECD (2020).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https://www.oecd.org/els/mig/keystat.htm>

금융위기를 전후해 이민자의 고용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감소증가, 증가감소, 지속감소, 지속증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그림 2.1.8). 2007년, 이민자의 고용률은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칠레 등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 이민자 고용률은 75% 이상이였다. 반면 폴란드는 이민자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약 36.3%로 나타났으며, 터기 역시 49.9%로 이민자 두 명 중 한 명만이 고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32개 중 24개 국가)에서 이민자의 고용률이 감소하는데, 가장 감소폭이 큰 나라는 스페인(-12.3%p)이었고, 아일랜드(-9.2%), 슬로바키아(-8.1%p), 에스토니아(-6.5%p), 아이슬란드(-6.3%p)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민자 고용률 감소를 경험했다.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의 경우 이민자 고용률이 2009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스페인과 슬로바키아의 경우 꾸준히 이민자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벨기에, 폴란드, 독일, 영국,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이민자 고용률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폴란드의 경우 2007년-2015년 사이 약 32.3%p의 증가를 보여 2015년에는 약 68.6%의 이민자 고용률을 보였다. OECD 평균의 경우 감소증가 유형으로, 2007년 69.3%에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7.9%로 약 1.4%p 감소했으며, 이후 다시 고용률이 회복되어 2015년에는 금융위기 직전 수준인 69%로 조사되었다.

그림 2.1.8.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이민자 고용률



주) 전체 외국인 중 고용된 비율로 측정.

원자료 출처: OECD (2020). Migration Statistics(Database), <https://stats.oecd.org/>

Ⅰ 정의 및 측정

이민자는 출생 당시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외국 출생 인구가 외국 국적자보다 훨씬 많다. 이민자 고용률(employment rate)은 각 국가의 25세-64세의 노동 인구에 해당하는 이민자(외국 출생자) 중 고용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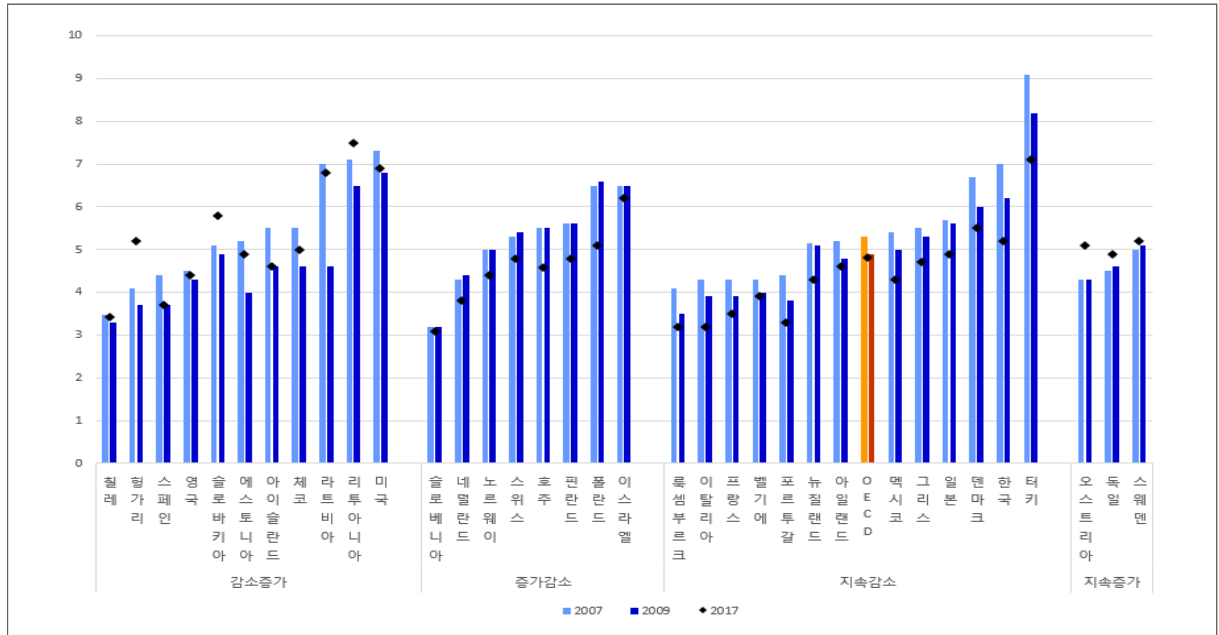
1-4. 가족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OECD 전역에서 결혼 및 이혼율이 평균적으로 감소하여, 혼인율은 2007년 5.3건에서 2017년 4.8건으로, 이혼율은 2007년 2.2건에서 1.9건으로 감소했다.

대략적인 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유형을 나누어본 결과, 감소증가, 증가감소, 지속감소, 지속증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서유럽(스페인, 영국) 및 동유럽(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미국의 경우 혼인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2009-2017년 사이 다시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금융위기 전의 혼인율을 회복하지는 못했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는 2017년 혼인율이 2007년을 넘어섰다. 북유럽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을 포함한 유럽 및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혼인율이 약간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7년 수준을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부 아시아 국가(일본, 한국)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혼인율 하락을 경험한 국가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터키가 가장 감소율이 높아 2007-2018년 사이에 약 2%p가 감소하였고, 한국은 다음으로 높은 약 1.8%p의 혼인율 감소를 보였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혼인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이혼율의 경우에 2007-2017년 사이에 안정되는 경향을 보여, OECD 국가의 평균 이혼율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터키와 스웨덴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 증가한 이혼율이 2017년까지 유지되었다. 유럽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007년 대비 이혼율의 변화가 없다가, 2009년 이후 이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평균(1.9건, 2017년 기준)을 비롯해 대다수의 북서부 유럽국가(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와 미국은 이혼율이 계속 감소하였다. 이들 나라의 이혼율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약 0.44건 감소했다. OECD 국가들의 2007-2009-2017년간의 혼인율과 이혼율 변화를 유형화 한 결과는 [그림 2.1.9] 및 [그림 2.1.10]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2.1.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혼인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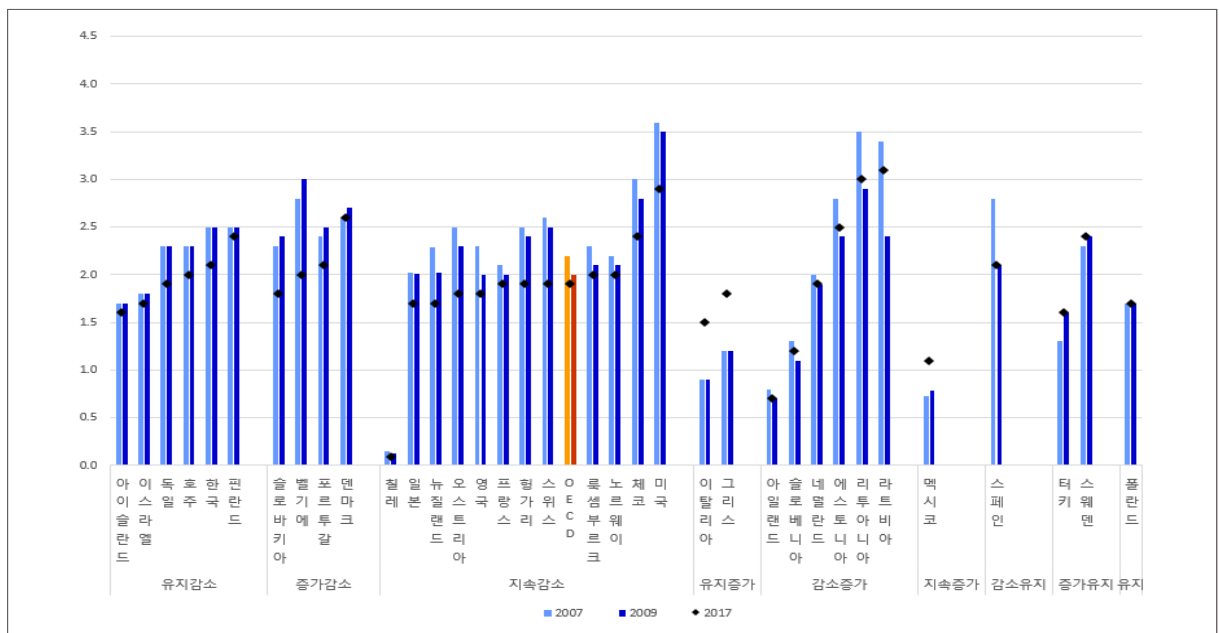


주1) 단위: 천 명당, %

주2) 두 시점 이상의 자료가 누락된 Canada는 분석에서 제외. Sweden은 2007년 대신 2005년 자료 사용. Iceland는 2017년 대신 2011년 자료, Chile, Israel, United Kingdom은 2017년 대신 2016년 자료.

원자료 출처: OECD (2020), "Family Indicators",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 2.1.10.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이혼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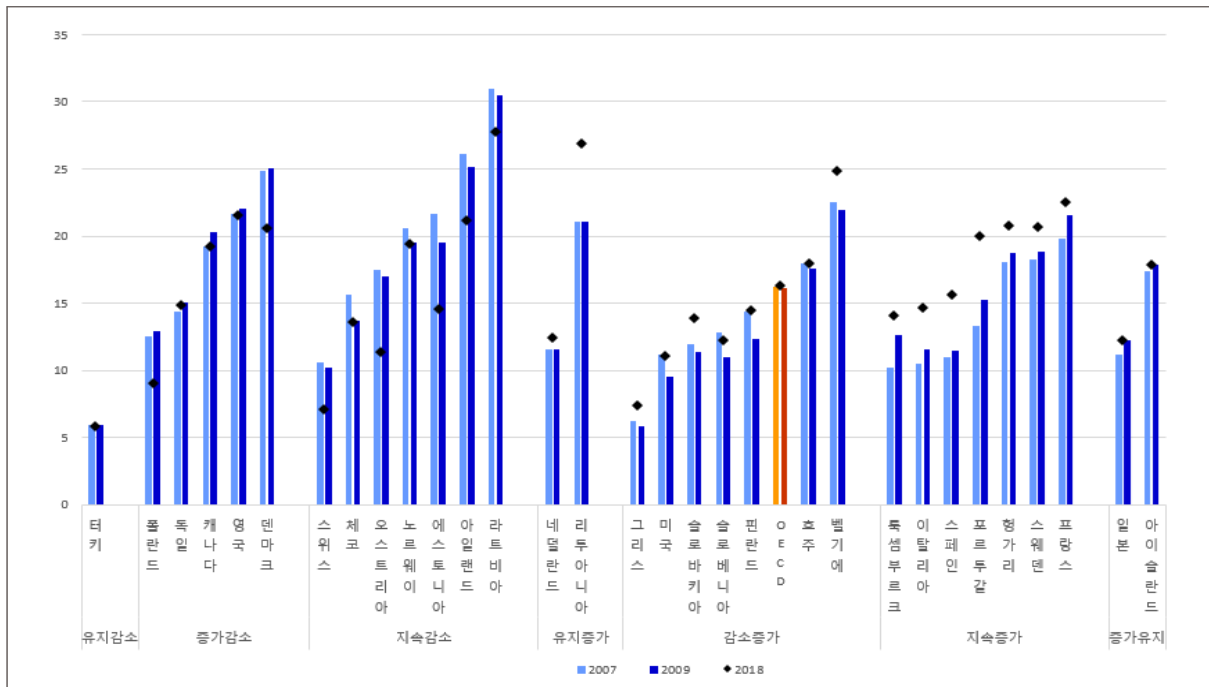
주1) 단위: 천 명당, %

주2) 두 시점 이상의 자료가 누락된 Canada는 분석에서 제외. 2017년 자료가 없는 국가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 분석하여, Chile 2010년, Iceland 2011년, Ireland 2015년 자료를, Israel, France, Mexico, New Zealand, United Kingdom은 2016년 자료를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2020), "Family Indicators",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가족구조 변화는 아동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지만,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높다. 국제금융위기 전후의 한부모가정 아동 비율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OECD 평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경우 2007년 대비 0.1%p 감소했다가, 2018년에는 2009년 대비 0.2%p 증가한 16.3%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한부모가정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동부 및 북부 유럽에 위치한 라트비아(31%), 리투아니아(21.1%), 에스토니아(21.7%), 덴마크(24.9%), 노르웨이(20.6%)를 포함해 서부 유럽인 아일랜드(26.1%)와 영국(21.7%), 벨기에(22.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한부모가정 비율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라트비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한부모가정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덴마크와 영국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한부모가정 비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8년에는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리투아니아는 금융위기 직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09년과 2018년 사이 한부모가정 비율이 약 5.8%p 증가했고, 벨기에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직후 한부모가정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약 3%p 증가하였다. 한편, 서남부 유럽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한부모가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림 2.1.1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한부모가정 아동 비율 변화



주1)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함. 단 일본과 멕시코는 0-14세 아동.

주2) 두 시점 이상의 자료가 누락된 Chile, Mexico, New Zealand는 분석에서 제외. Australia는 2006, 2009, 2012년 자료. Canada는 2006, 2011, 2016년 자료. Japan은 2007, 2010, 2015년 자료. Iceland, Luxembourg는 2018년 대신 2016년 자료. France, Ireland, Slovak Republic, Turkey, Hungary, Switzerland, United Kingdom은 2018년 대신 2017년 자료.

원자료 출처: OECD Family Database, <https://stats.oecd.org/>

I 정의 및 측정

대략적인 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천 명당 연간 동성결혼(legal civil union) 또는 결혼 건수로 정의된다. 대략적인 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천 명당 연간 해제된 동성결혼 또는 결혼 건수로 정의된다.

가구형태에서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 양부모, 및 이혼한 부모 모두를 지칭한다. 한부모가정 아동(children living with a single parent)은 아동과 성인 부모 한 명이 동거하는 경우이다. 일본과 멕시코의 경우 0-14세 아동을 측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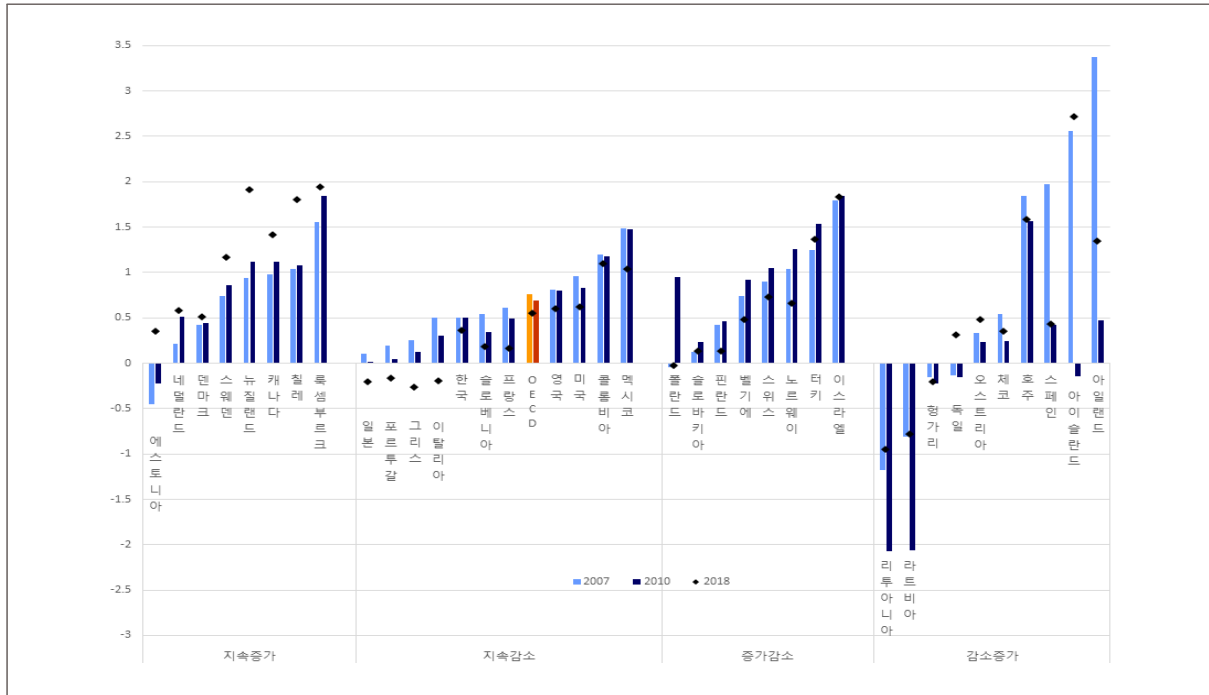
1-5. 인구 추이

다섯 번째 일반 지표는 인구 추이로서 인구성장률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인구 변화율 및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2.1.12]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OECD 국가들의 인구 성장률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국가별 인구성장률을 확인하기 위해 OECD 소속의 총 37개의 국가를 분석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OECD 및 세계 평균을 함께 제시하였다. 시점은 국제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전후 시기(2007-2010년)와 최근의 2018년을 설정하였다.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인구성장률을 지속증가, 지속감소, 증가감소, 감소증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세계와 OECD 국가는 전형적인 지속감소 유형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인구성장률은 2007년 0.76%에서 2010년 0.69%로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인구성장률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2018년의 인구성장률은 0.55%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전반적인 세계의 성장률도 2007년 1.25%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1.23%, 최근 2018년의 1.09%로 감소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지속감소 유형은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11개국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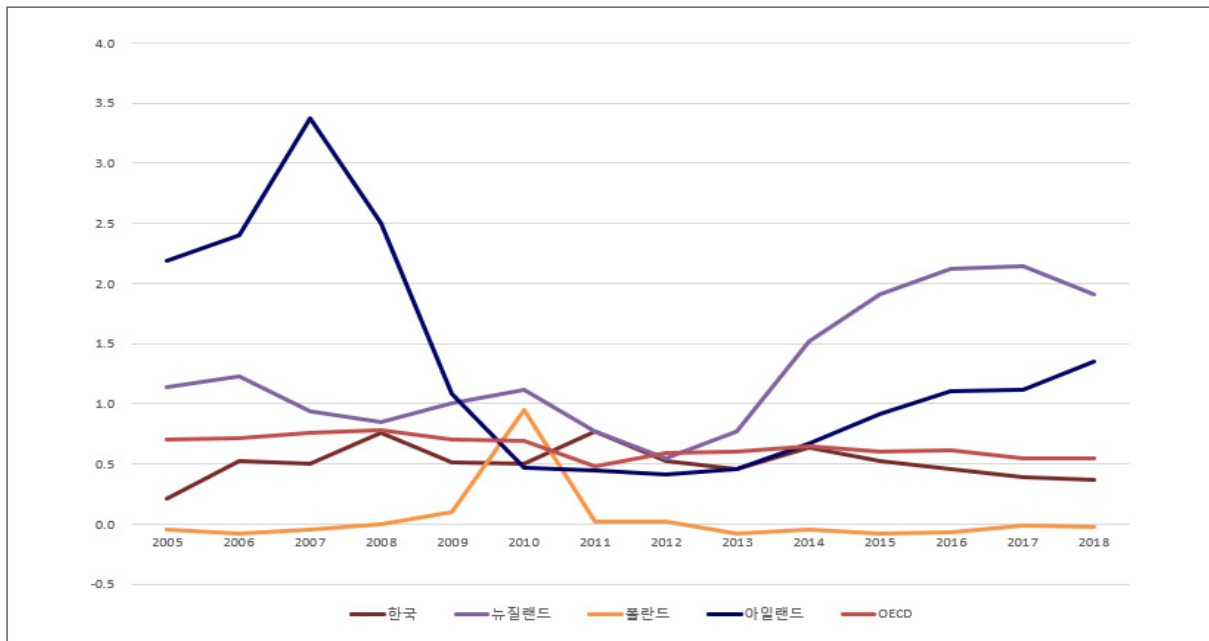
반면에 세계와 OECD 국가의 인구성장률 평균과 반하는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8개국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지속증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벨기에, 핀란드, 폴란드, 이스라엘 등 8개국은 금융위기 이후 인구성장률이 잠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증가감소 유형에 포함되었다. 감소증가 유형에는 호주,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10개국이 포함되어, 금융위기 이후 인구성장률이 다소 감소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2.1.1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인구성장률 변화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7년, 2010년, 2018년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Historical population(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ISTPOP>

그림 2.1.13. 유형별 대표국가의 연간 인구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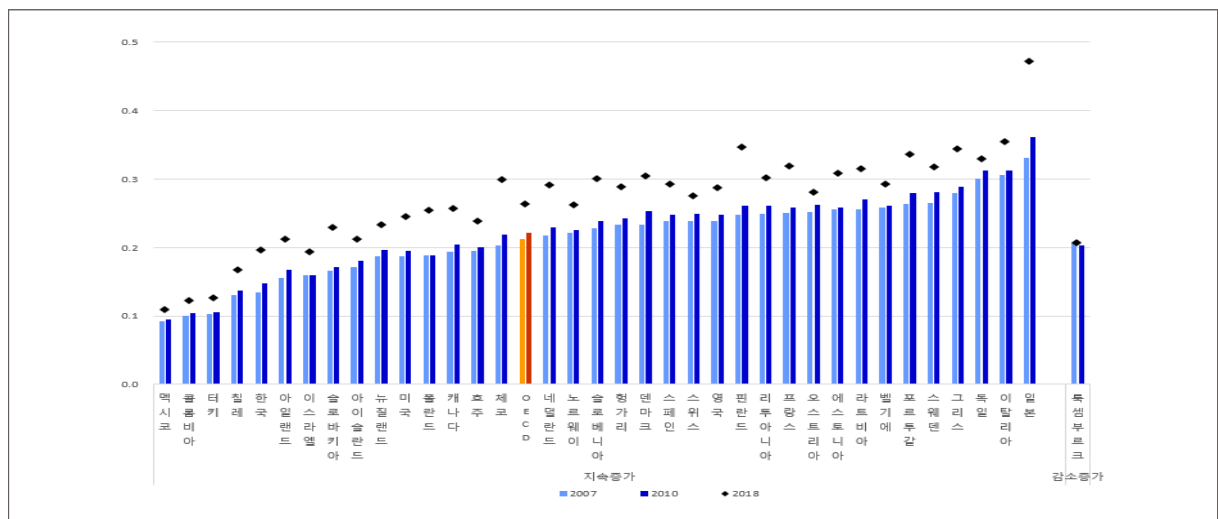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Historical population(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ISTPOP>

위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표국가들의 연간 인구성장률을 연도별(2005-2018년)로 살펴보면 [그림 2.1.13]과 같다. 앞서 특정한 3곳의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바와 유사하게 4가지 유형의 국가들은 그 추이를 보여준다. OECD 국가의 평균 인구성장률은 증가감소의 약간의 변동 폭이 있었으나 2005년 0.7%에서 2018년 0.55%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였다. 대표적인 지속감소 유형 국가인 한국은 금융위기 후였던 2008년(0.76%), 2011년(0.77%)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최근 2018년에는 0.37%까지 감소하였다. 뉴질랜드는 지속증가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2005년 1.14%에서 금융위기 전후로 감소하고 다시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지속적인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연간 인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지만 금융위기 시점 전후로 약간의 반등을 보이면서 증가감소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가파른 인구 성장률의 감소추세를 보이던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이전의 수치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회복세에 있다.

다음으로 연령 부양비 중 노년부양비를 통해 인구의 연령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부양비는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2.1.14]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최근 2018년의 OECD 국가들의 노년부양비를 비교한 결과이다. 국가별 노년부양비를 확인하기 위해 OECD 소속의 총 37개의 국가를 분석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OECD의 평균을 함께 제시하였다. OECD 전체 및 대부분의 국가는 전형적인 지속증가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OECD 국가 가운데 룩셈부르크만이 감소증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2.1.1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노년부양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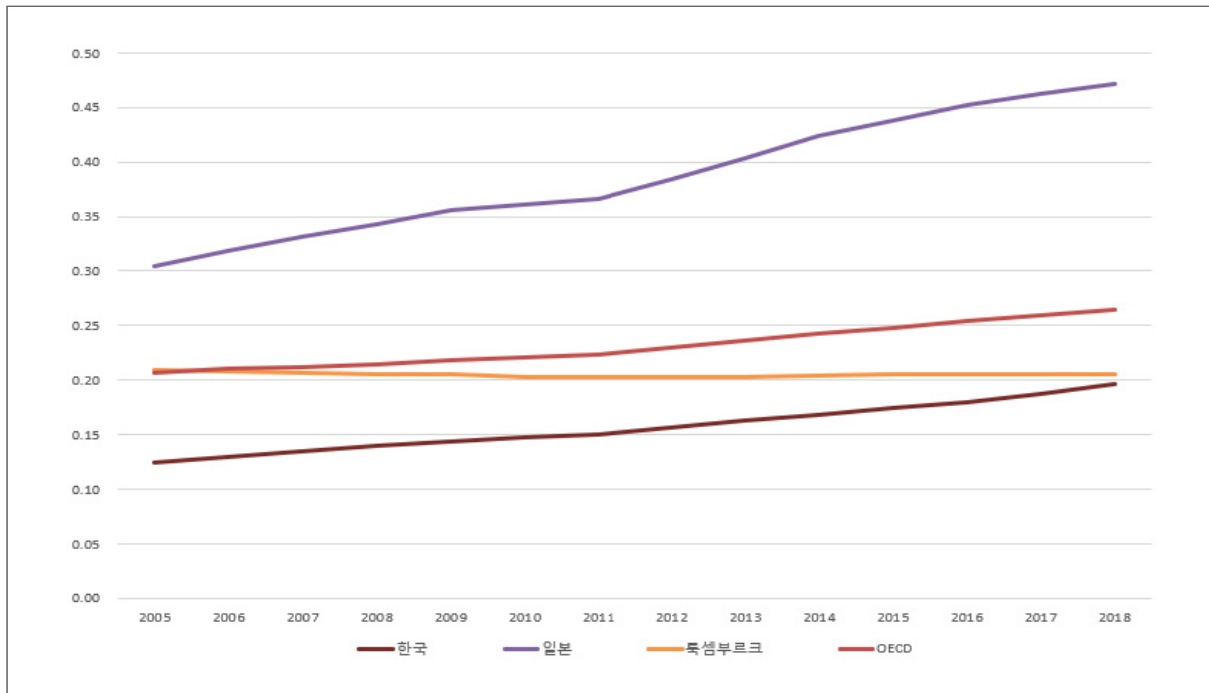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7년, 2010년, 2018년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Historical population(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ISTPOP>

위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표국가들의 노년부양비를 연도별(2005-2018년)로 살펴보면 [그림 2.1.15]와 같다. 앞서 특정한 3곳의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바와 유형 구분의 추이가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OECD의 평균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2005년 0.2%에서 2018년 0.26%까지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가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오히려 금융위기 시점 전후에 다소 노년부양비 증가가 주춤했으나 2010년대 들어서 가파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노년부양비를 나타냈으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노인인구의 부양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에 유일한 감소증가 유형국가인 룩셈부르크는 2007년 0.207%에서 금융위기 이후 2010년 0.203%로 약간 수치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2018년 0.206%로 상승세에 있다.

그림 2.1.15. 유형별 대표국가의 노년부양비 추이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Historical population(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ISTPOP>

Ⅰ 정의 및 측정

연령 부양비(Age-dependency ratio)는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노인이건 청년이건-개인의 수를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개인의 수에 대비하여 나타낸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여기에 사용된 추정치는 가장 최근의 “중위출생률 (medium fertility variant)” 인구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각 인구 구성요소의 수천 건의 예측 귀적의 중위값에 해당한다.

1-6. 소결

이 절에서는 가구소득, 출생률, 가족, 이민자, 인구 추이와 관련된 일반 지표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한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OECD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한국 역시 2007년 약 19,179 USD에서 2016년 23,362 USD로 약 4,183 USD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 회복했고, 그리스,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가처분소득 감소가 나타났다. 연간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한 국가의 물질적인 삶의 질과 빈곤 및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하면(OECD, 2019), 국제금융위기 직후 나타난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 변화의 국가 간 차이는 각국이 가진 재분배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물질적인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측정 지표로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소외 및 복지결핍수준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가 있다(김경혜, 2011; 김안나 외, 2008; Mathieson et al., 2008). 특히 가처분소득은 가구특성에 따른 욕구 및 서비스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결핍의 수준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다(김안나, 2014). 예를 들어, 조손가구의 경우 소득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배제 위험이 높고, 여성 한부모가구 및 장애인의 경우 노동에서의 배제 위험성이 특히 높다(김안나, 2014; 신유리, 2012). 반면 다문화가구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김안나, 2014). 이러한 다차원적 배제와 결핍의 위험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의 배제와 포용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고, 복합적인 차원에서의 박탈과 결핍을 경험하는 집단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과 관련된 지표인 출생률, 결혼 및 이혼율 등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각 국가가 가족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 사회경제적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제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출생률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위기의 영향일 뿐만 아니라, 노동과 돌봄에서 지속된 성불평등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과 돌봄의 역할을 평등하게 수행하는 구조가 정착될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송다영·백경훈, 2020; Ochiai, 2011; Sainsbury,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여성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및 가정에서의 돌봄노동이라는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다(이동선, 2016). 특히 기존의 저출생 대책은 여성이 돌봄노동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과 돌봄의 실질적 책임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분배되며, 가족 구성원 모두의 역할로서 인식되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문화 형성 및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통해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과 같은 가족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금융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세계의 평균 연간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도 감소와 증가의 변화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감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구의 연령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노년부양비 지표에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지속적인 증가추이에 있어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생산연령인구(20-64세)에 의존하는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 일본을 따라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노년부양비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어 미래에 다가올 혼란과 충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함께 전통적으로 가족의 기능으로 담당해오던 노인부양 문제가 복지국가 논의과정 속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이 상당히 변화하였다(박찬희, 2019). 하지만 공적 부양은 국가의 재정 한계가 존재하고 사적 부양은 공적 부양만큼 부양의 영역이 넓지 못하고 책임 회피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각각의 한계가 있다. 결국 국가 혹은 가족이 일방적으로 모든 부양을 담당할 수는 없고 두 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이지원, 2017).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정의 복합체계를 추구하였고 서비스 대상 인원수의 양적 성장은 달성하였지만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황명진, 2020). 노인 개인의 삶과 분리된 욕구충족에 집중한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향점을 갖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가 추진 중이다. 지난 선도사업 추진에서 얻은 보완점을 증장기적 관점에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설계하고 체계를 형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자활 지표

2-1. 고용

첫 번째 자활 지표는 고용이다. [그림 2.2.1]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OECD 국가들의 고용률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생산연령(15-64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2007년 66.2%에서 2010년 64.4%로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고용 수준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018년에는 고용률이 다시 68.3%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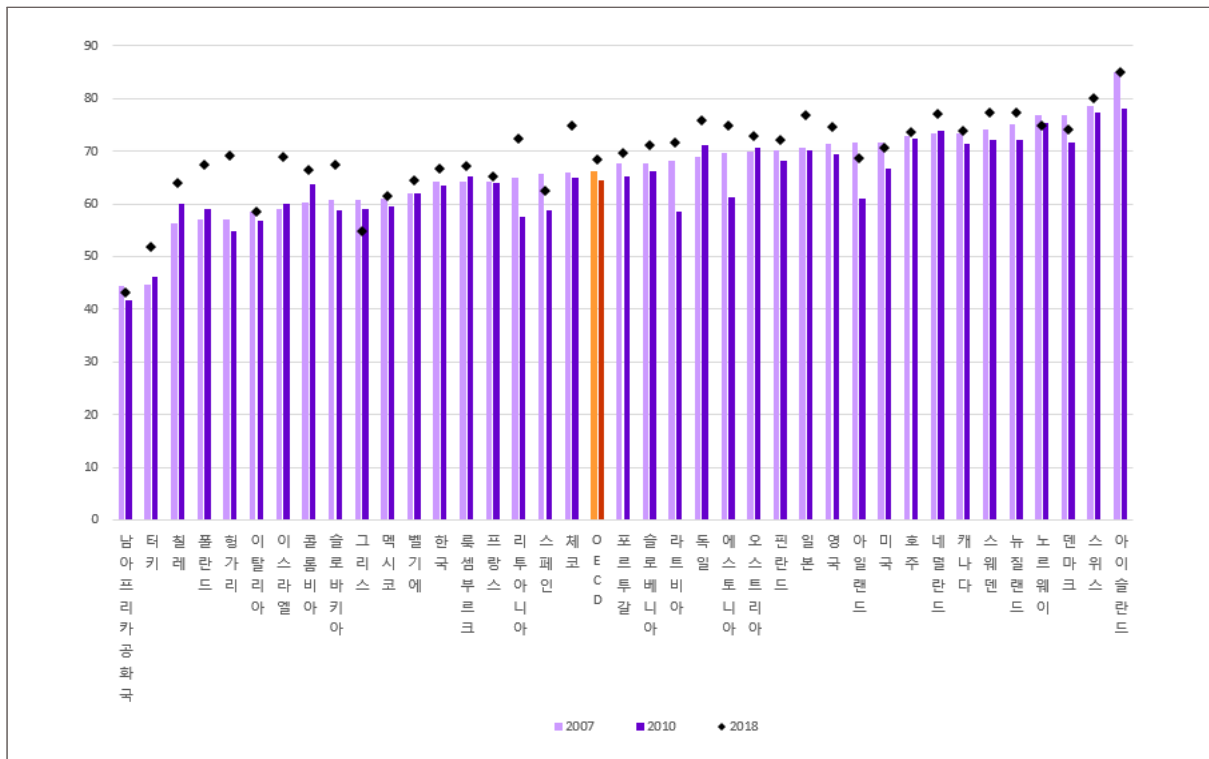
OECD 국가 고용률의 변화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그림 2.2.2]와 같다. 크게 3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OECD 평균을 비롯한 전반적인 가입국이 '감소증가'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이후 OECD 전역의 고용률이 조금씩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 금융위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률이 상승한 '지속증가' 유형도 있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고용률은 7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그리스, 노르웨이는 금융위기를 전후로 고용률이 감소하는 '지속감소' 유형에 해당된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OECD 가입국 중에서도 50% 수준으로 고용률이 가장 낮다.

[그림 2.2.3]은 2001년부터 2018년 동안의 고용률 변화 추이를 각 유형을 대표하는 몇 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지속증가'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는 네덜란드로, 2001년 74.1%에서 2018년 77.2%로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였다. 네덜란드의 전반적인 고용률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OECD 평균과 같은 '감소증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002년 63.4%,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3.0%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0년부터는 다시 63.4%에서 2018년 66.6%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2007년 66.2%에서 2010년 64.4%까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고용률 회복이 이루어졌다. '지속감소' 유형에 해당하는 그리스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60.9%로

시작해 2013년 48.8%까지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4년부터는 회복세에 접어들어 2018년 기준 54.9%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2.4]에서는 추가로 OECD 가입국의 고용률 변화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 위 [그림 2.2.3]에 제시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고용률 수준이 높은 네덜란드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모두 높았다. 다만 남성 고용률은 시간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성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증가율의 기울기 역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75%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아래에 위치했다. 다만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고용률 수준은 51.0%에서 5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인 고용률이 낮은 그리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특히 남성 고용률은 2001년 71.3%에서 2018년 64.8%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여성 역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40% 내외의 고용률로 나타났다.

그림 2.2.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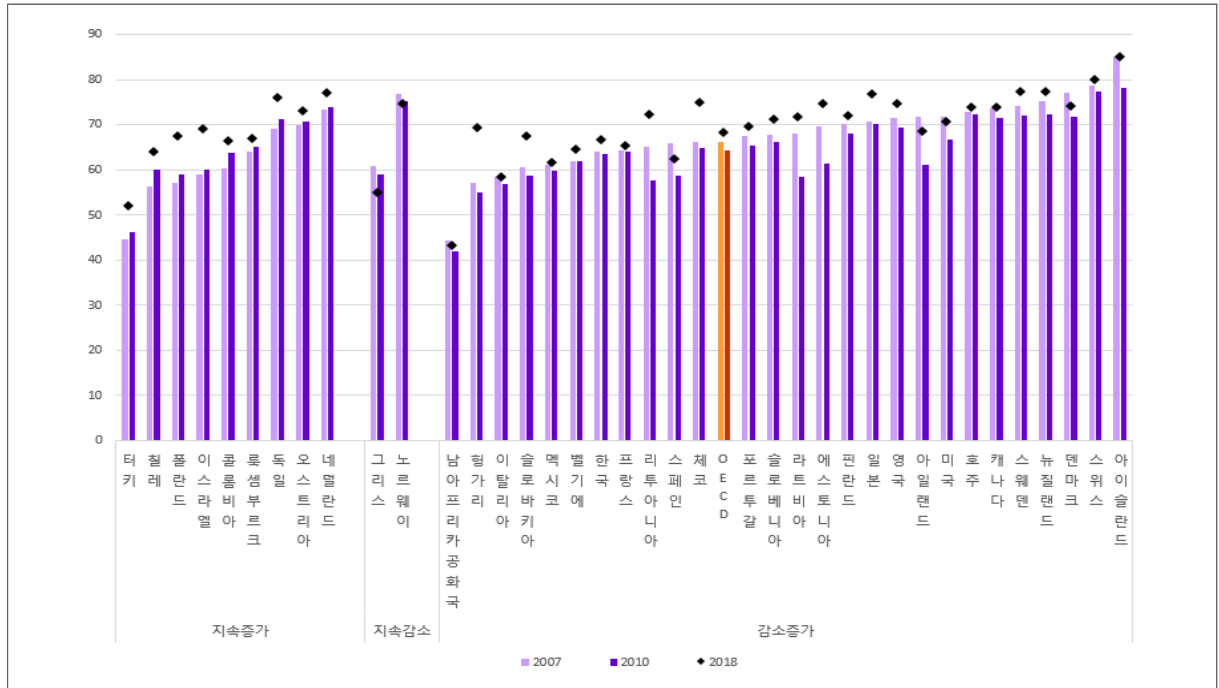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STLABOUR&lang=en>

그림 2.2.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고용률 변화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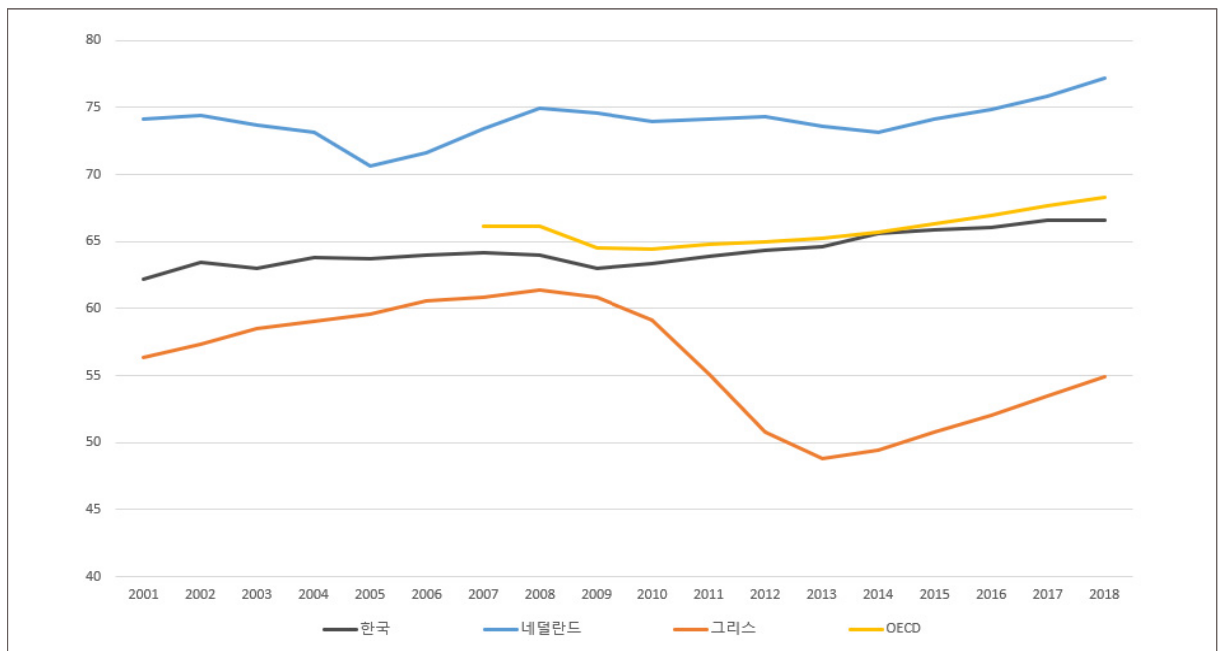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STLABOUR&lang=en>

그림 2.2.3. 연도별 주요 국가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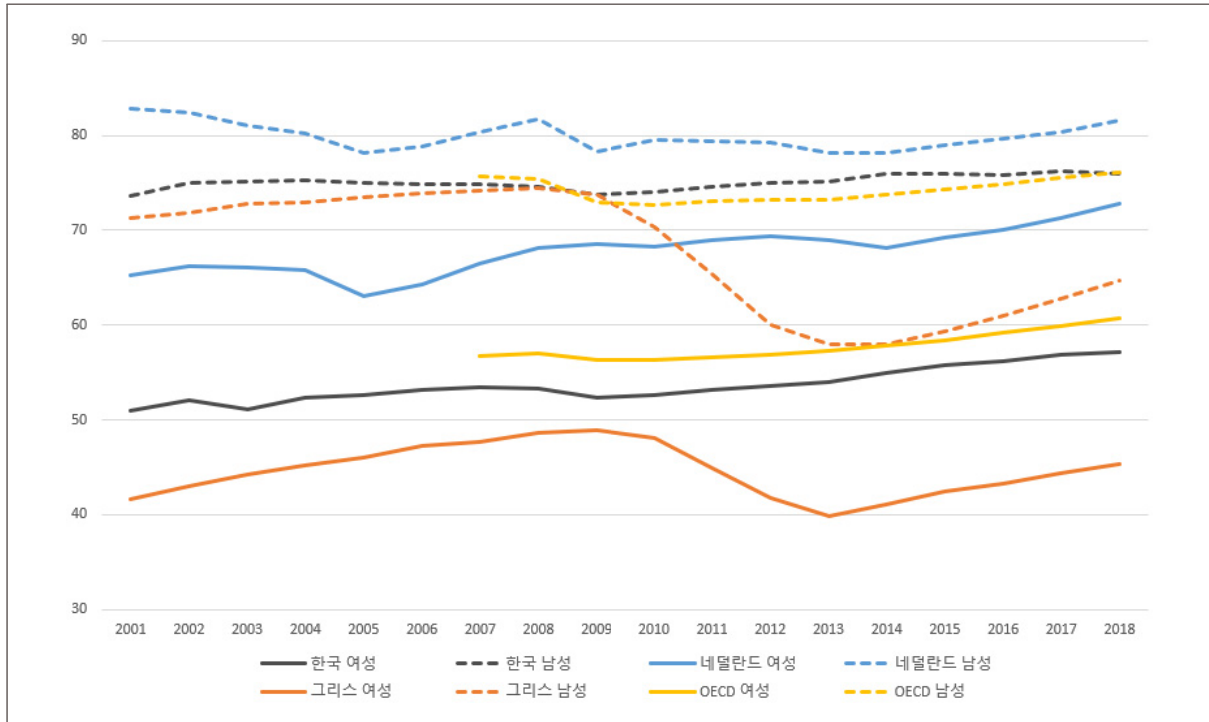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STLABOUR&lang=en>

그림 2.2.4. 연도별 주요 국가 고용률 변화: 성별 비교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STLABOUR&lang=en>

정의 및 측정

고용의 기초 지표는 고용 상태인 15-64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국가의 노동력 조사 자료는 주당 최소 한 시간씩 급여, 수익 또는 가구의 소득을 위해 근로하는 경우라면 질병, 휴가, 산업 분쟁으로 임시 휴업 중이라 해도 고용상태인 것으로 본다(OECD, 2016).

2-2. 실업

두 번째 자활 지표는 실업이다. 실업은 개인의 자활의지 및 가구의 경제적 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2.5]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그리고 최근의 OECD 국가 실업률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OECD 가입국 전반에서 급격한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 국가가 2007년 실업률에 비해 2010년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오직 독일(8.7% → 7.0%), 이스라엘(7.3% → 6.6%), 오스트리아(4.9% → 4.8%) 3개국만이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첫 번째 자활 지표로 분석한 고용률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고용률이 나타난 그리스의 경우, 실업률은 반대로 크게 증가하였다(8.4% → 12.7%).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2007년 당시 높은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1.0% →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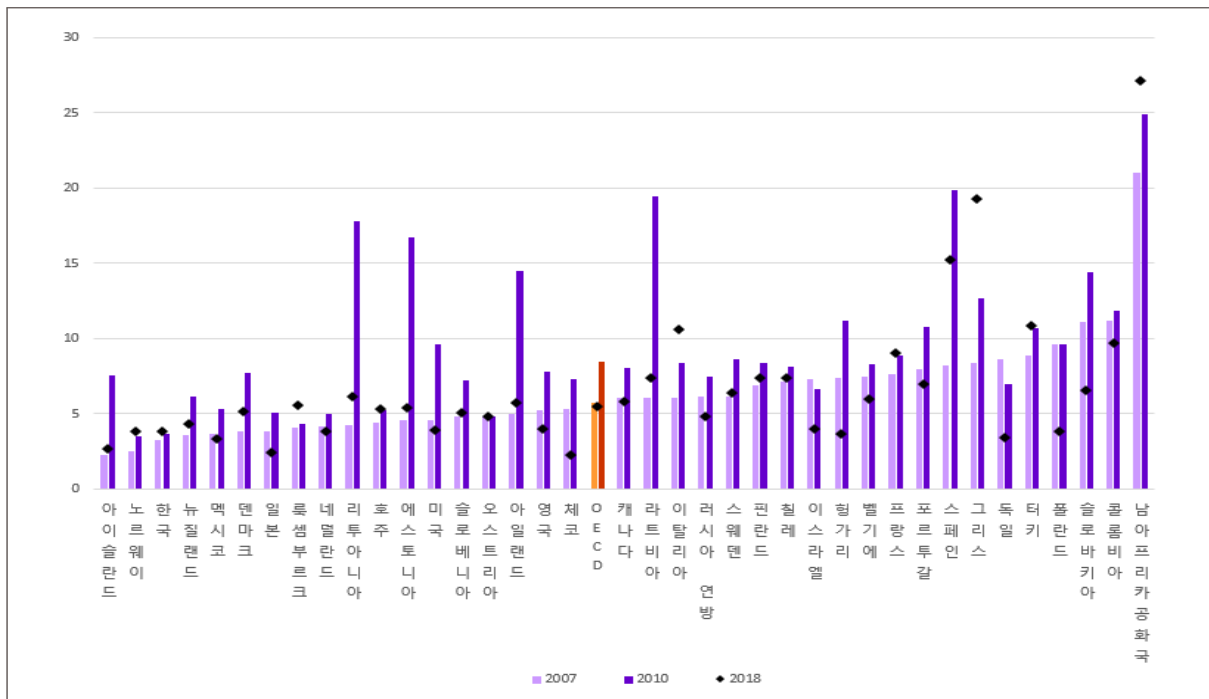
2007년과 2010년, 2018년 국가별 실업률 변화를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지속증가’, ‘지속감소’, ‘증가감소’, ‘감소증가’의 네 가지 집단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OECD 평균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다가, 2018년에 와서 다시 감소하는 ‘증가감소’ 집단에 해당된다. OECD 평균 실업률은 2007년 5.8%에서 2010년 8.4%로 증가했다가 2018년 다시 5.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전반적인 실업률 수준이 높은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은 2010년 이후 2018년에도 실업률이 상승한 ‘지속증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3.3%, 2010년 3.7%, 2018년 3.8%로 연도별 실업률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독일, 이스라엘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한 ‘지속감소’ 유형에 해당된다. 두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각각 7.0%, 6.6%로 2007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2018년 역시 3.4%, 4.0%의 낮은 실업률 수준을 나타냈다. 마지막 오스트리아는 ‘감소증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실업률 수치는 2007년 4.9%, 2010년 4.8%, 2018년 4.8%로 각 연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2.2.7]은 앞서 살펴본 유형별 주요 국가의 실업률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앞서 ‘지속증가’ 유형으로 구분한 한국의 실업률 수준은 지난 18년 동안 큰 변화 없이 3~4%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반면 그리스는 2001년 10.8%에서 2013년 27.5%까지 급격히 치솟다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금씩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OECD 평균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증가했다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01년 4.7%에서 2010년 9.6%까지 2배가량 증가하였고, 2011년 9.0%, 2018년 3.9%로 기존의 실업률 수준을 회복하였다.

독일의 경우 앞서 고용률 지표에서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실업률 역시 지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다(3.4%).

마지막 [그림 2.2.8]은 주요 국가의 청년(15-24세) 실업률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청년의 경우 대체로 비정규직 등 임시직 근로에 종사하거나 학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률 수준이 높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일자리 손실에 큰 타격을 받은 집단으로 분석된다(OECD, 2016). 따라서 전체 생산인구(15세 이상)의 실업률이 5~8%인 반면, 평균 청년 실업률은 12~17%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01년부터 2018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다(2001년 10.2% → 2018년 10.5%). 반면, 그리스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0% 수준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다가 2018년 기준 39.9% 수준까지 하락했다. 다만 여기서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이 50%라는 것은 15-24세 전체 청년 중 50%가 실업상태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의 전체 청년 중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의 절반이 실업상태라는 의미이다(OECD, 2016). 한편 독일과 같이 전체 실업률이 지속 감소한 이스라엘의 청년 실업률은 2000년대 초반 20%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차츰 감소하여 2018년에는 7.1%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OECD 국가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5.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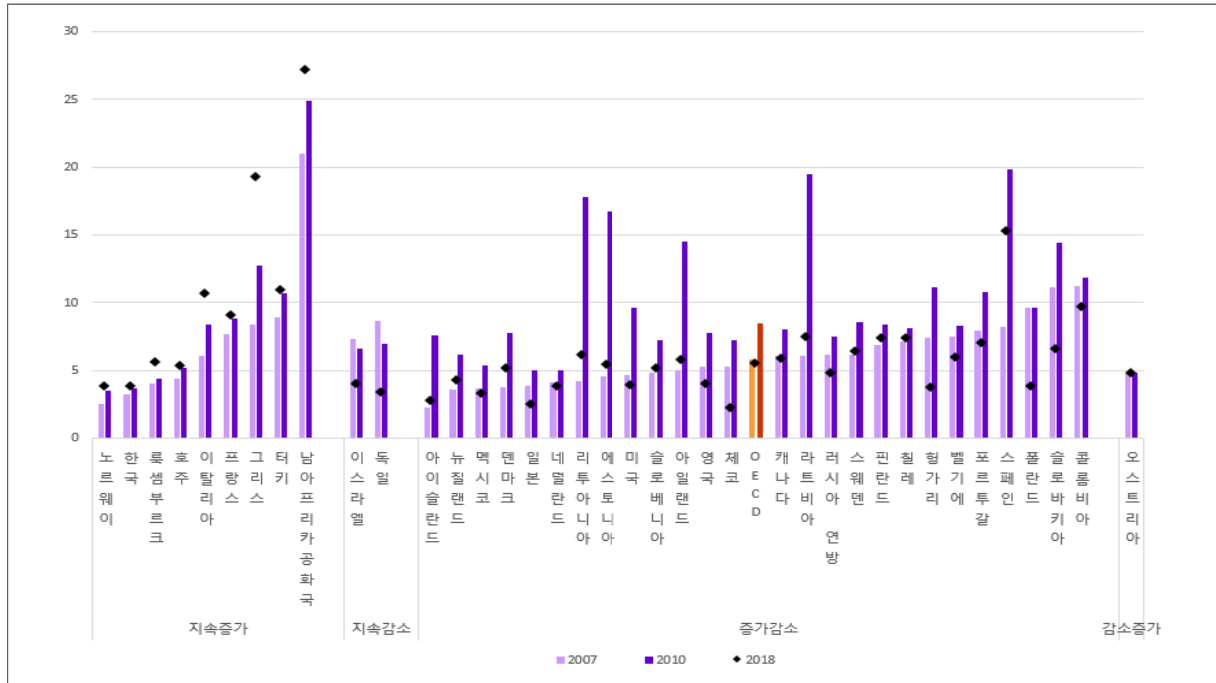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

그림 2.2.6.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실업률 변화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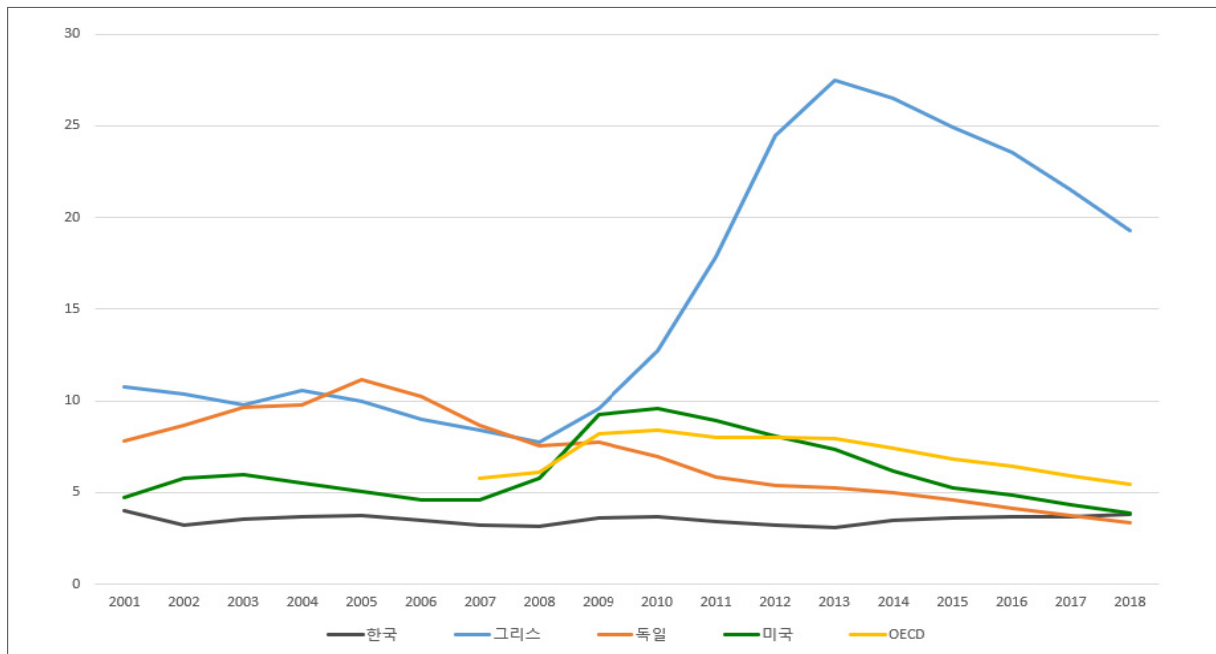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

그림 2.2.7. 연도별 주요 국가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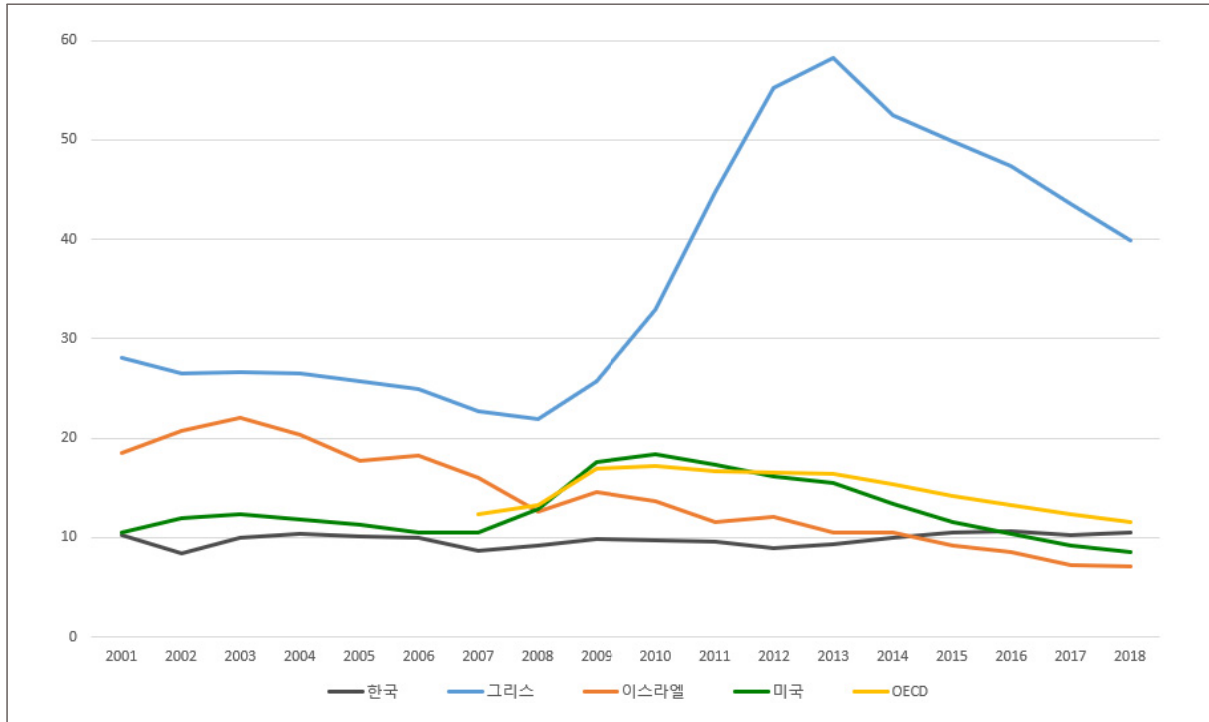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

그림 2.2.8. 연도별 주요 국가 청년 실업률 변화



주1) 단위: %

주2) OECD 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 사용, 독일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가 부재하여 이스라엘 자료를 사용

원자료 출처: OECD Short-term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

정의 및 측정

실업률은 재직 중이거나 적극적 구직 상태인 생산연령 인구 대비 실직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이들의 비율 (15세 이상)이다. 청년 실업률은 OECD 실업 관련 지표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15-24세)을 적용하였다.

2-3. 교육비

세 번째 자활 지표는 교육비 지출이다. [그림 2.2.9]는 학생 1인당 각 국가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지출 규모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시점과 가장 최근 시점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교육비 관련 OECD 자료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OECD 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는 2005년 6,200달러, 2010년 8,268달러, 2015년 9,214달러 수준이다. 교육비 지출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의 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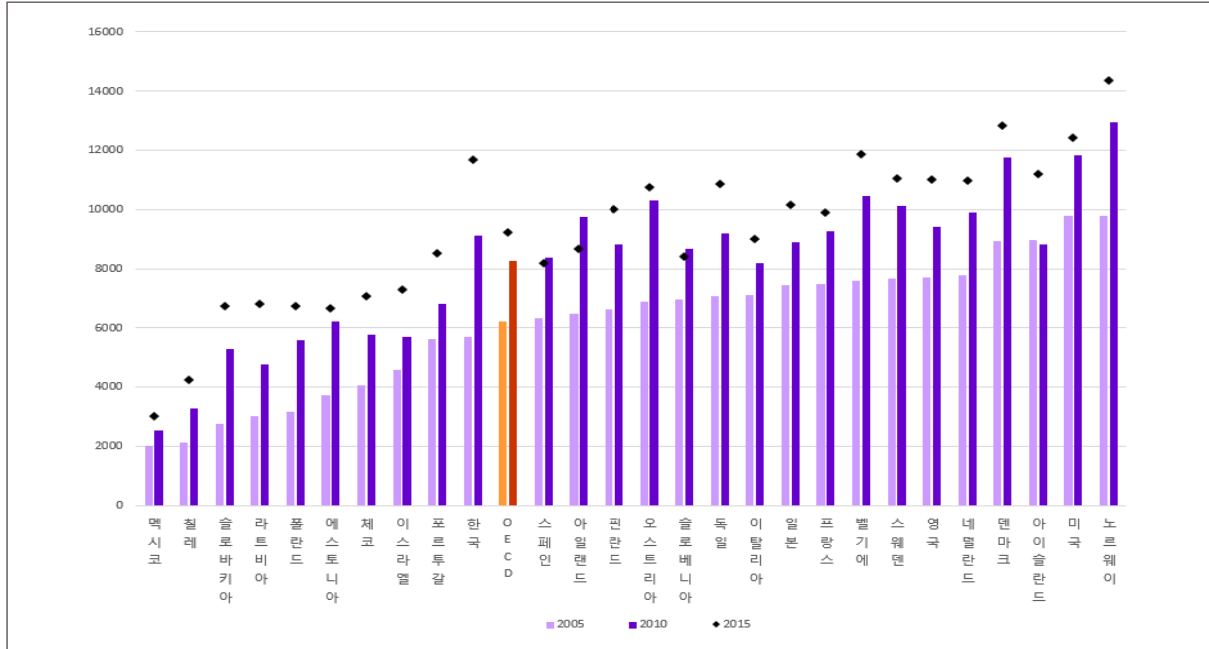
지출 규모가 가장 높았다(2005년 9,793달러, 2010년 12,945달러, 2015년 14,353달러). 한국 역시 금융위기 전후로 교육비 지출이 상승하였고, 2010년(9,123달러)과 2015년(11,688달러)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그림 2.2.10]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교육비 변화 유형을 구분하였다. 대다수의 가입국이 시점별로 교육비 지출 규모가 상승하는 ‘지속증가’ 유형에 해당하였다.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비 지출 규모가 높았고, 미국의 교육비 지출 규모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증가감소’ 유형에는 슬로베니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5년 6,481달러에서 2010년 9,751달러로 증가했다가, 2015년 8,671달러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뿐이다. 아이슬란드는 2005년 8,962달러에서 2010년 8,806달러로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11,207달러로 증가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가의 교육비 변화 추이를 연도별(2005-2015년)로 살펴보면 [그림 2.2.11]과 같이 대체로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2005년부터 2015년의 약 10년간 교육비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은 2009년 이후부터 OECD 평균과 격차를 키워 가파르게 증가하는 편이다. 반면 ‘증가감소’ 유형의 스페인은 2010년(8,371달러)부터 2012년(7,963달러) 동안 교육비 지출 규모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위기에 따른 재정건전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OECD, 2016). 마지막 ‘감소증가’ 유형에 해당되는 아이슬란드 역시 2009년(9,755달러)과 2010년(8,806달러) 연속 감소하였으나 이후 차츰 회복하여 OECD 평균보다 높은 지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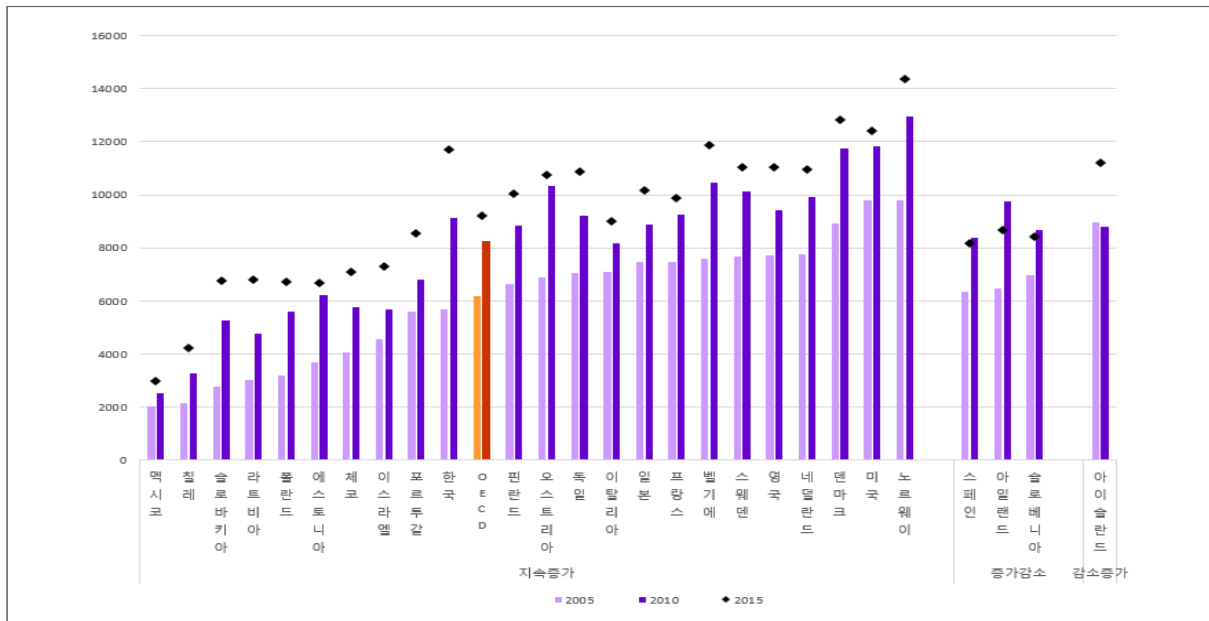
마지막 [그림 2.2.12]는 시간 흐름에 따른 유형별 주요 국가의 교육비 변화를 GDP 대비 교육비 공공지출 비중으로 살펴본 것이다. 앞서 전반적인 교육비 지출의 절댓값은 OECD 국가 대다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GDP 대비 교육비 공공지출 비중은 ‘증가감소’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OECD 평균은 2009년 3.51%에서 2010년 3.43%, 2011년 3.32%, 2012년 3.31%로 감소했다. 한국 역시 ‘증가감소’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후가 아닌 2013년(3.60%)부터 2015년(3.47%)까지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국가 중 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벨기에는 2005년 3.9%에서 2015년 4.1% 수준으로 조금 상승하거나 유지하였다. 폴란드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꾸준히 GDP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여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2.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교육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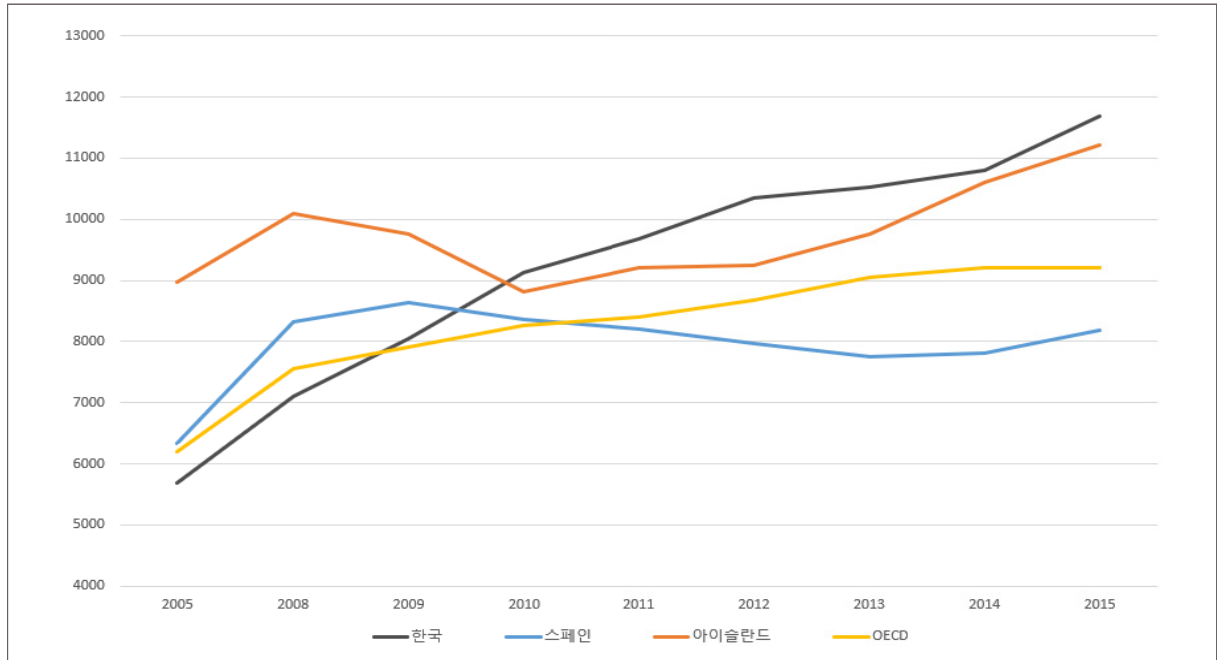
주1) 포르투갈은 2009년 자료, 이스라엘 및 덴마크는 2014년 자료
 주2) OECD 평균값 자료는 원자료에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연도별 28개국 자료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함
 주3) 단위: US dollars/student
 원자료 출처: OECD Education spending, <https://data.oecd.org/eduresource/education-spending.htm>

그림 2.2.10.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교육비 변화 유형 구분



주1) 포르투갈은 2009년 자료, 이스라엘 및 덴마크는 2014년 자료
 주2) OECD 평균값 자료는 원자료에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연도별 28개국 자료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함
 주3) 단위: US dollars/student
 원자료 출처: OECD Education spending, <https://data.oecd.org/eduresource/education-spending.htm>

그림 2.2.11. 연도별 주요 국가 교육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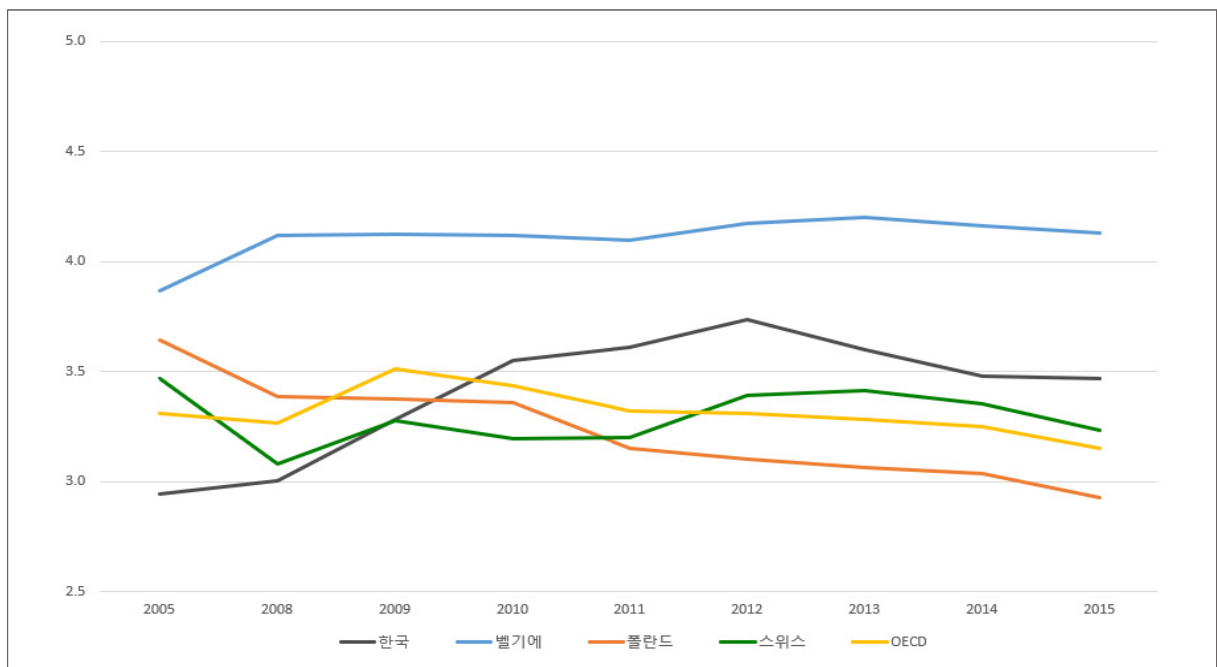


주1) 단위: US dollars/student

주2) OECD 평균값 자료는 원자료에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연도별 28개국 자료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함

원자료 출처: OECD Education spending, <https://data.oecd.org/eduresource/education-spending.htm>

그림 2.2.12. 연도별 주요 국가 GDP 대비 교육비 변화



주1) 단위: % of GDP

주2) OECD 평균값 자료는 원자료에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연도별 28개국 자료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함

원자료 출처: OECD Education spending, <https://data.oecd.org/eduresource/public-spending-on-education.htm#indicator-chart>

Ⅰ 정의 및 측정

교육비 지출 규모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Primary to post-secondary non-tertiary)까지 총 연 지출액을 사용해 산출한다. 공공 지출액과 민간 지출액을 합한 것이며 개별 연도에 대한 구매력 지수를 바탕으로 미 달러로 보고된 것이다. GDP 중 교육비 공공지출 비중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학교, 대학 및 기타 공립 및 사립 기관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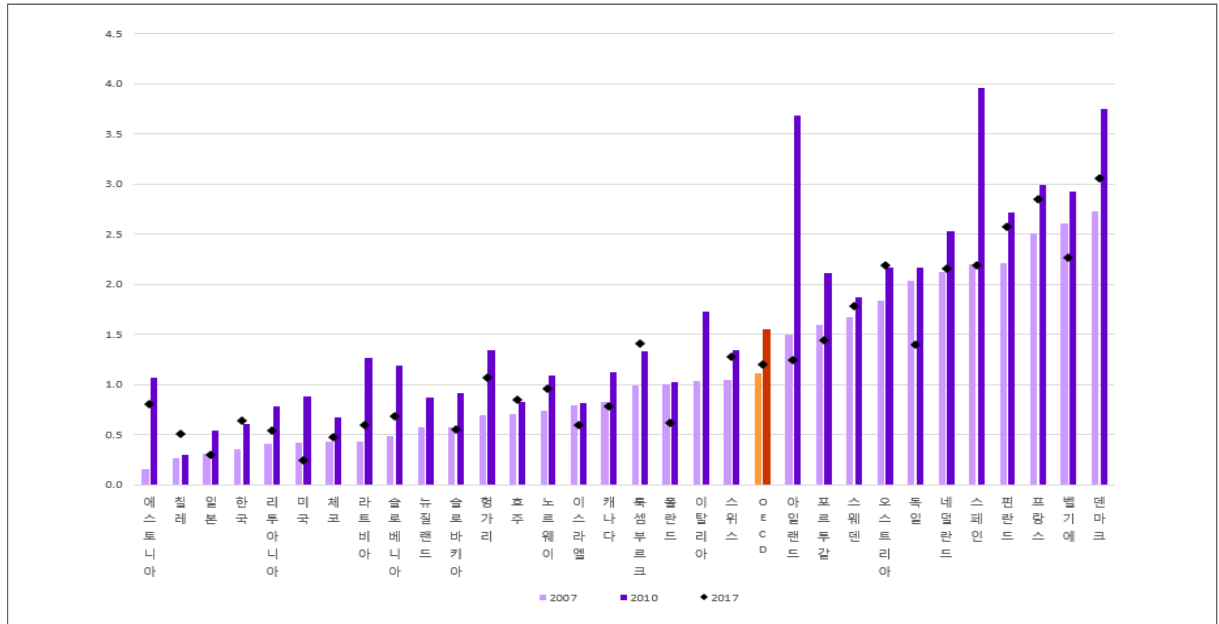
2-4.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

네 번째는 각 국가에서 지출하는 노동시장 정책(Labour Market Programmes; LMP)의 변화이다. [그림 2.2.13]에서는 전반적인 OECD 국가의 LMP 공공지출 비율이 1%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LMP 공공지출 비율이 2007년 1.11%에서 2010년 1.55%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2.14]는 OECD 국가의 LMP 공공지출 변화를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OECD 국가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LMP 공공지출 비율이 증가하였다가 2017년으로 오면서 다시 감소하는 ‘증가감소’의 특성을 나타낸다. 덴마크(2007년 2.73%, 2010년 3.75%, 2017년 3.05%), 아일랜드(2007년 1.49%, 2010년 3.68%, 2017년 1.24%), 스페인(2007년 2.20%, 2010년 3.96%, 2017년 2.19%) 등이 대표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지출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실업률 변화 유형은 ‘증가감소’에 해당된다([그림 2.2.14] 참조).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LMP 공공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지속증가’ 유형에 포함된다(2007년 0.35%, 2010년 0.61%, 2017년 0.64%). 이는 한국의 LMP 공공지출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1% 미만이라는 점, 2001년부터 2018년 동안의 실업률이 ‘지속증가’한 유형이라는 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그림 2.2.14] 참조).

마지막으로 연도별 주요 국가의 LMP 공공지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2.15]). 2004년부터 2017년 동안의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은 1.0~1.5% 수준에서 특정 시기(2008년)를 기점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조금씩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GDP 대비 LMP 공공지출 규모가 많은 아일랜드는 OECD 평균과 유사하지만, 증감의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실업률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LMP 공공지출 비율 역시 완만하게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LMP 공공지출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다.

그림 2.2.1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LMP 공공지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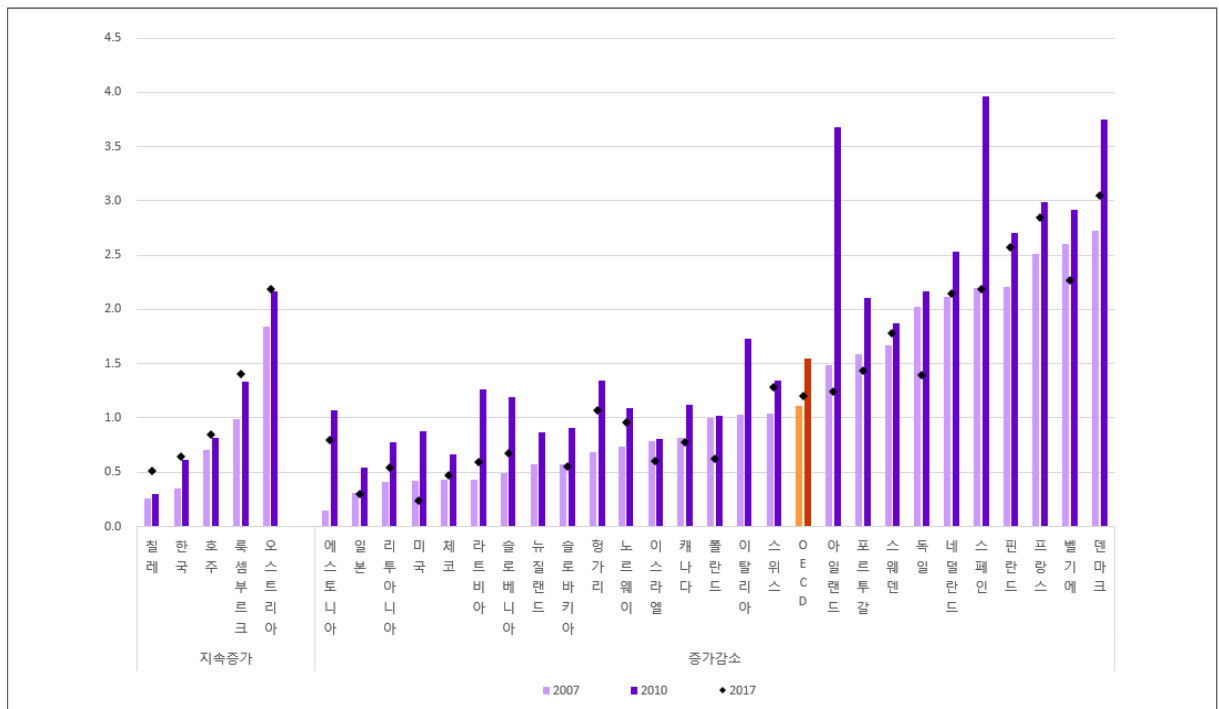


주1) 칠레는 2008년 자료 사용, 이탈리아는 2015년 자료까지, 뉴질랜드는 2016년 자료까지 사용

주2) 단위: % of GDP

원자료 출처: OECD.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

그림 2.2.1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LMP 공공지출 변화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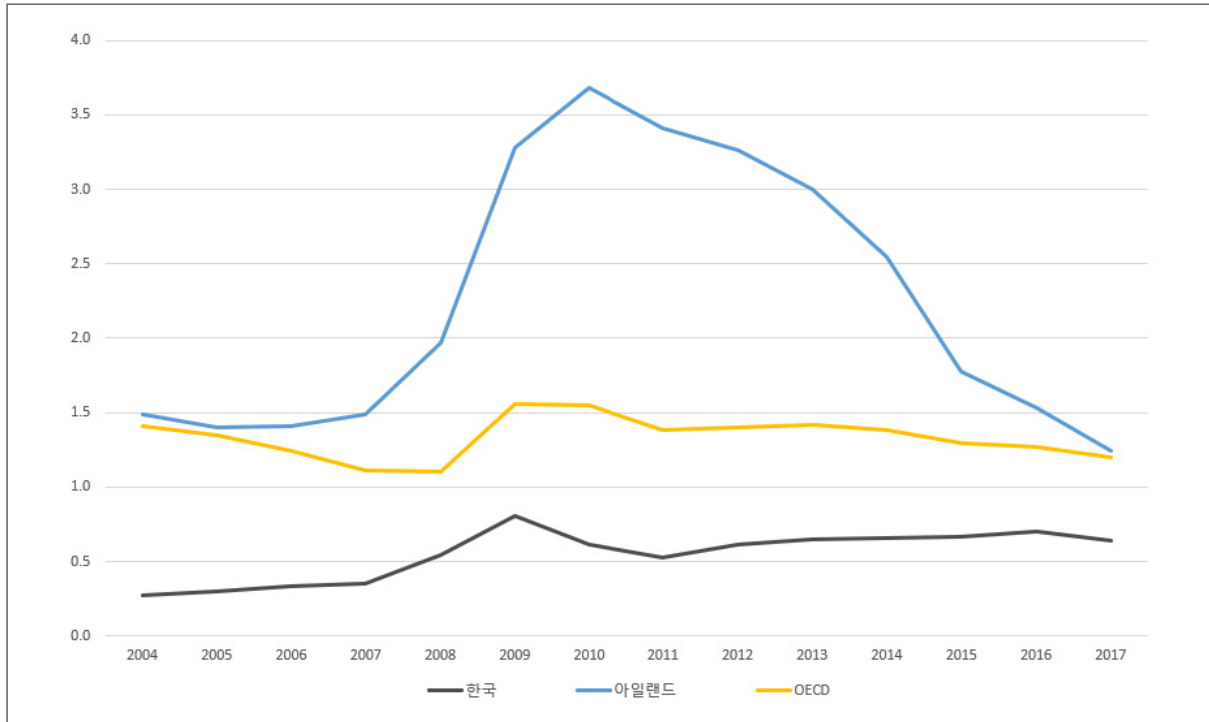


주1) 칠레는 2008년 자료 사용, 이탈리아는 2015년 자료까지, 뉴질랜드는 2016년 자료까지 사용

주2) 단위: % of GDP

원자료 출처: OECD.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

그림 2.2.15. 연도별 주요 국가 LMP 공공지출 변화(2004~2017)



주) 단위: % of GDP

원자료 출처: OECD.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

Ⅰ 정의 및 측정

노동시장 정책(Labour Market Programmes; LMP) 공공지출 비율은 GDP 중 국가가 노동시장 정책에 투입한 재정의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unemployment assistance), 직업훈련(training),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자립을 위한 모든 정책에 지출한 내용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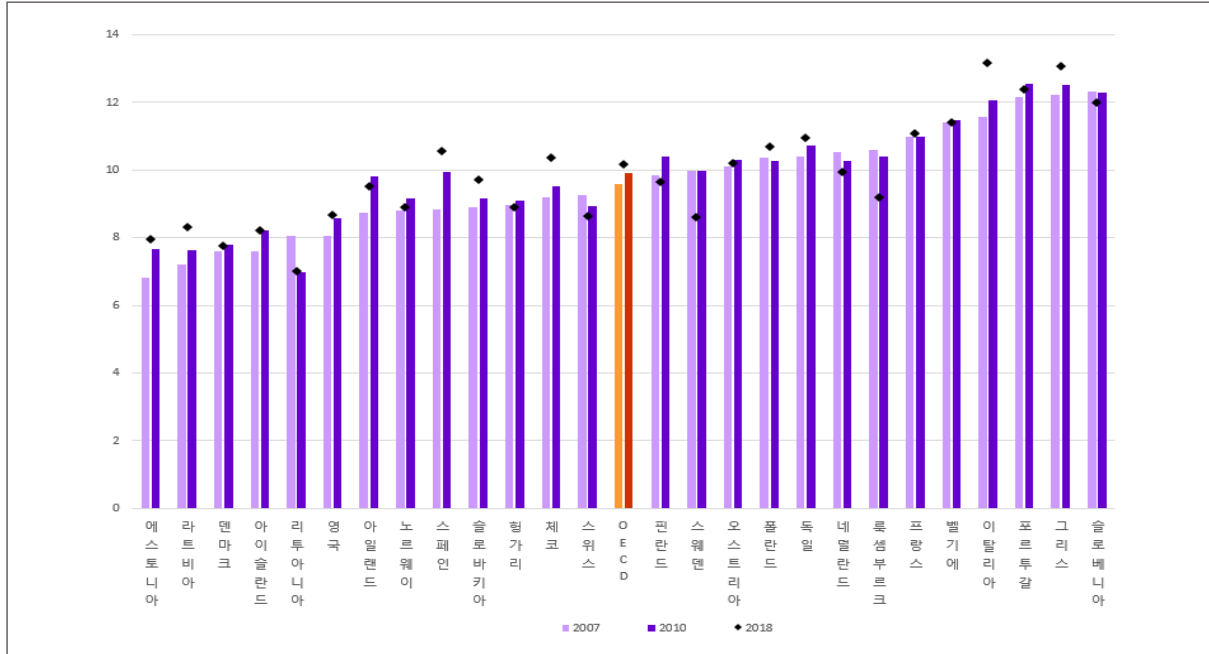
2-5. 근속기간(노동 시장 유동성)

마지막 자활 지표는 노동 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보여주는 근속기간(job tenure)이다. 현재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노동 시장의 유동성 수준이 높고 이직 등이 빠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된 OECD 국가들의 평균 근속기간 현황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OECD의 경우 평균적으로 2007년 9.59년, 2010년 9.89년, 2018년 10.15년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전체 중에서 가장 근속기간이 긴 국가는 이탈리아(2005년 11.57년, 2007년 12.06년, 2018년 13.16년)와 그리스(2007년 12.21년, 2010년 12.50년, 2018년 13.05년) 등 남부 유럽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발틱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2018년 7.96년), 라트비아(2018년 8.32년), 리투아니아(2018년 7.02년) 등 동유럽 국가의 근속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노동 시장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의 전통이 강한 영국 역시 2007년 8.07년, 2010년 8.56년, 2018년 8.6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근속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 근속기간 변화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비롯한 OECD 국가 평균은 ‘지속증가’ 유형에 해당된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최근까지도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꾸준히 증가하는 안정적인 노동 시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근속기간이 증가했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노동 시장이 다시 유연화 되는 ‘증가감소’ 유형에 해당된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근속기간이 감소하는 ‘지속감소’, 프랑스,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2008년 이후 근속기간이 감소했다가 최근 시점에는 다시 근속기간이 증가하는 ‘감소증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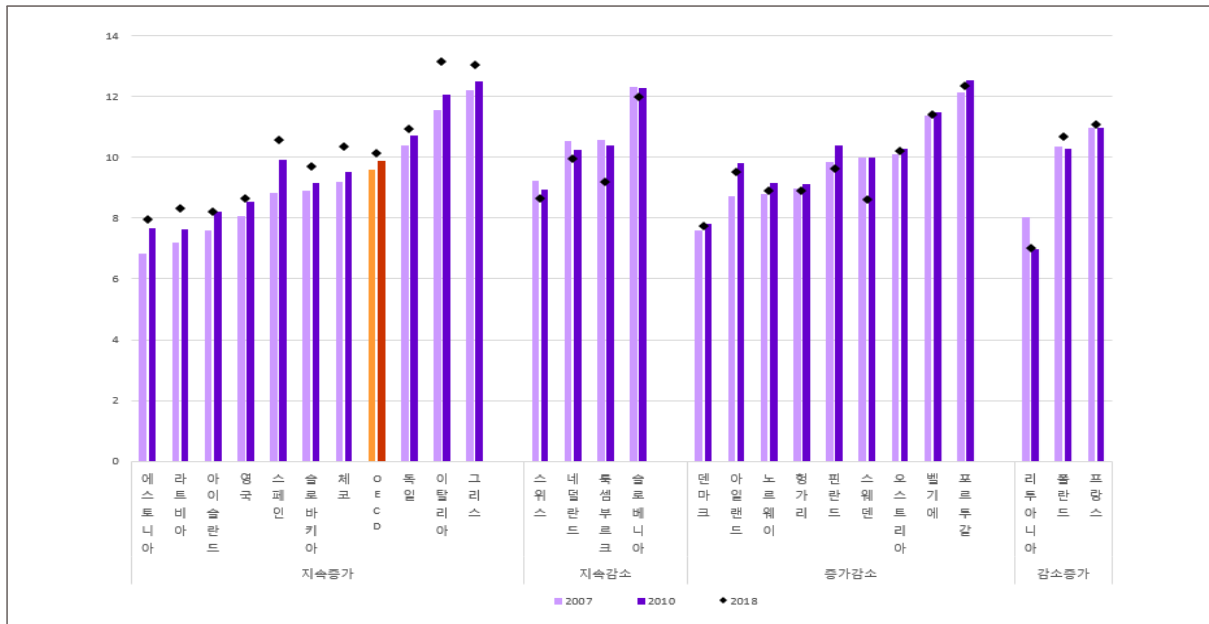
유형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8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2.18). 연도별 근속기간 유형이 ‘지속증가’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의 평균 근속기간이 11~13년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안정된 노동 시장을 지향하는 집단 유형의 평균 근속기간 수준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 전체 그림 상의 비교 국가 중에서 평균 8~9년의 가장 낮은 근속기간 수준을 보이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북유럽의 핀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0년의 근속기간을 나타냈으나, 2017년부터는 평균 9년대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동유럽의 폴란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근속기간이 감소하다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는 오히려 안정된 노동 시장을 지향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림 2.2.16.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근속기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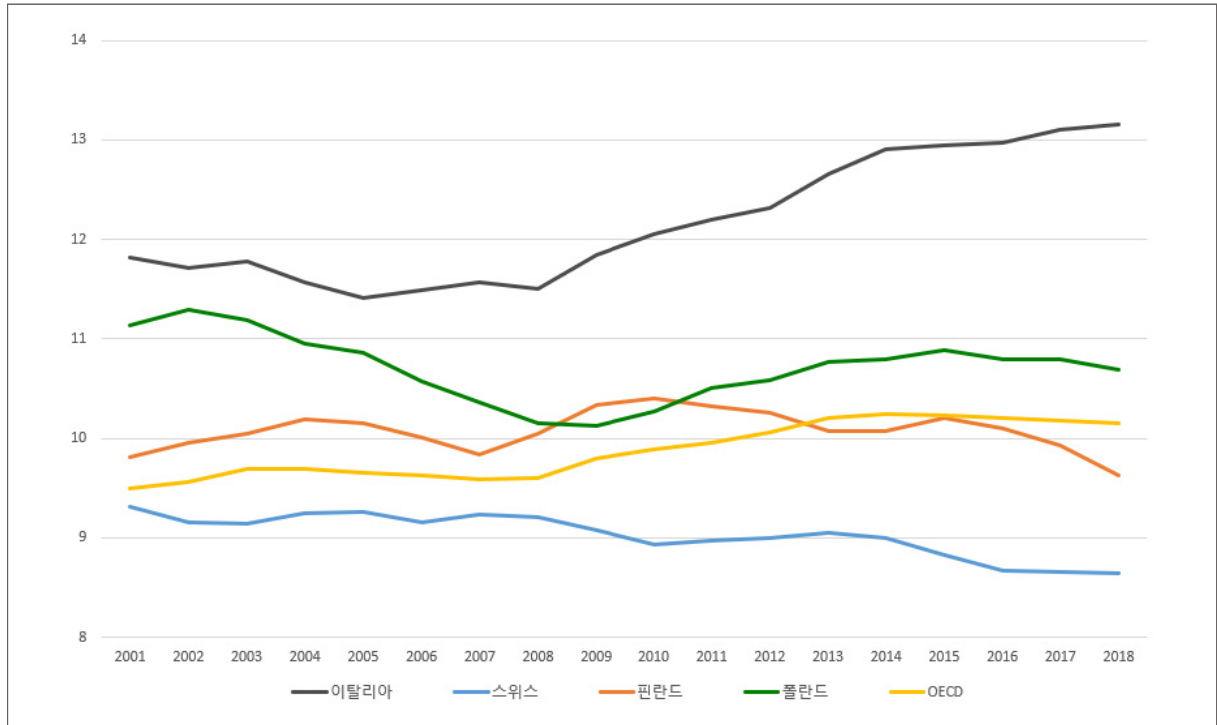
주1) 아이슬란드는 2017년 자료
 주2) 한국은 OECD 원자료 상에 누락되어 분석에 제외되었음
 주3) 단위: 년(year)
 원자료 출처: OECD. Employment by job tenure interval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

그림 2.2.17.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근속기간 변화 유형 구분



주1) 아이슬란드는 2017년 자료
 주2) 한국은 OECD 원자료 상에 누락되어 분석에 제외되었음
 주3) 단위: 년(year)
 원자료 출처: OECD. Employment by job tenure interval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

그림 2.2.18. 연도별 주요 국가 근속기간 변화



Ⅰ 정의 및 측정

근속기간(job tenure)은 현재 근로자가 자신의 직장이나 고용주와 함께 근무한 시간으로써, 연간(year)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 정보는 해당 국가의 노동 시장 유동성 수준을 추정하고 노동 시장의 이직이 빠르게 나타나는 영역을 식별하는 유용하다. 현재 자료는 유럽 국가에 대해서만 보고되고 있다.

2-6. 소결

여기서는 자활 지표를 중심으로 OECD 국가들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비교, 유형별 주요 국가의 2001년 이후 2018년 동안의 추이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자활의 세부 지표로는 고용률, 실업률, 교육비 지출 및 GDP 대비 교육비 공공지출 비중,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 노동시장 근속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점인 2009~2010년 OECD 국가의 전반적인 고용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OECD 국가의 자활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회복되었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 평균 고용률은 2007년 66.2%에서 2010년 64.4%로 감소했다가, 이후 2011년(64.8%)부터 2018년(68.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감소증가 유형). 같은 시기 한국의 고용률 역시 2007년 64.1%에서 2010년 63.4%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63.9%)부터 2018년(66.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감소증가 유형). 다음으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실업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먼저 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은 2007년 5.8%에서 2010년 8.4%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8년까지 5.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증가감소 유형).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2007년 3.3%에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3.7%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1년 3.4%, 2012년 3.2%, 2013년 3.1%, 2014년 3.5%, 2015년 3.6%, 2017년 3.7%, 2018년 3.8%로 연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정부의 노동과 복지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대응(예: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주거지원, 서민 금융, 취약계층 지원, 물가안정화 등)에 따른 안정효과로도 분석된다(임완섭 외, 2016).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LMP) 비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LMP 공공지출 비율은 2007년 0.35%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1%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0년(0.61%)부터 2017년(0.64%)까지 매년 소폭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2.15] 참조). 향후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LMP 공공지출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김태완, 2020).

둘째, 한국의 세부적인 자활 지표를 종합해보면, ‘여성 고용률’, ‘청년 실업률’, ‘GDP 대비 교육비 공공지출 규모 감소’ 등의 키워드가 도출된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75% 수준인

반면,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 아래인 50% 내외에 불과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증가율 역시 완만한 기울기를 나타냈다. 또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18년 동안 조금씩 증가하였고, 그래프상 ‘증가감소’ 유형에 해당하는 OECD 평균을 향후 몇 년 내에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청년 여성’ 집단의 자활 및 자립 이슈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까지의 GDP 대비 교육비 공공지출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청년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동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청년 여성은 청년 남성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임금격차, 고용단절, 경력개발 및 일상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학력수준, 혼인상태 등 인구사회적 조건에 따라 청년 여성의 고용 관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회정책 대응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신하영·박수경, 2017).



3. 형평성 지표

3-1. 불평등

2008-0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가장 최근의 지니계수 변화는 지속증가군과 지속감소군, 증가감소군과 감소증가군에 속한 국가의 수가 엇비슷한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난다([그림 2.3.1]).¹⁾ 지속증가군에는 스웨덴,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미국이 포함되어 있다. OECD 평균 지니계수도 지속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크지는 않다. 지속감소군에는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이스라엘, 한국(2011년 이후 변화), 멕시코, 칠레가 속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증가하였다가 최근 감소한 증가감소군에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프랑스, 에스토니아, 스페인, 호주, 그리스, 터키가 해당된다.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증가한 감소증가군에는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영국, 라트비아가 속한다. OECD 평균값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국가들은 모두 유럽권 국가들이다.

한국, 멕시코, 칠레, 터키 등 신흥 국가의 지니계수가 가장 높으며, 특히 멕시코, 칠레, 터키는 분석기간 동안 지니계수가 0.4를 상회한다. 그러나 이들 신흥 국가의 지니계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지니계수는 지속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0.39로 칠레,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최근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금융위기 이후 한 때 증가하였다가 2014년부터 0.25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금융위기 직후에는 지니계수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하는데, 2004년 이후 전체 변화를 보면 지니계수의 변화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구소련에 속했던 슬로바키아와 리투아니아의 지니계수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국가 모두 신자유주의적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보호를 위한 노력의 차이가 [그림 2.3.2]의 지니계수의 변화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윤도현, 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전지구적 위기나 체제 전환과 같은 초국가적 변화에 맞서게 되더라도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1) 불평등도, 빈곤율 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을 정의하는 방법이 2012년부터 바뀌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새로운 정의에 따른 소득을 사용하여 불평등도, 빈곤율을 측정하여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유독 한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가령, 2011년 지니계수의 경우, 바뀌기 전 소득기준으로는 0.311인 반면, 새로 정의된 소득기준으로는 0.388로 약 0.08 포인트 차이가 남). 따라서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2010년 이전의 한국 지니계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은 가능한 한 새로운 소득정의에 따른 지니계수를 제시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혼용하였다.

변수가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새로 정의된 소득에 기반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2011년에는 0.39로 거의 0.4에 근접하였으나 지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0.36이다. [그림 2.3.3]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반 지니계수를 생산가능 연령대와 은퇴이후 연령대별로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소득별, 연령대별 지니계수의 변화는 크지 않다. 생산가능 연령대의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0.35보다 작지만 은퇴이후 연령대의 지니계수는 0.4를 훌쩍 넘는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 지니계수의 차이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다. 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은퇴이후 연령대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이후 집단의 불평등도는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뿐만 아니라 불평등 문제 역시 심각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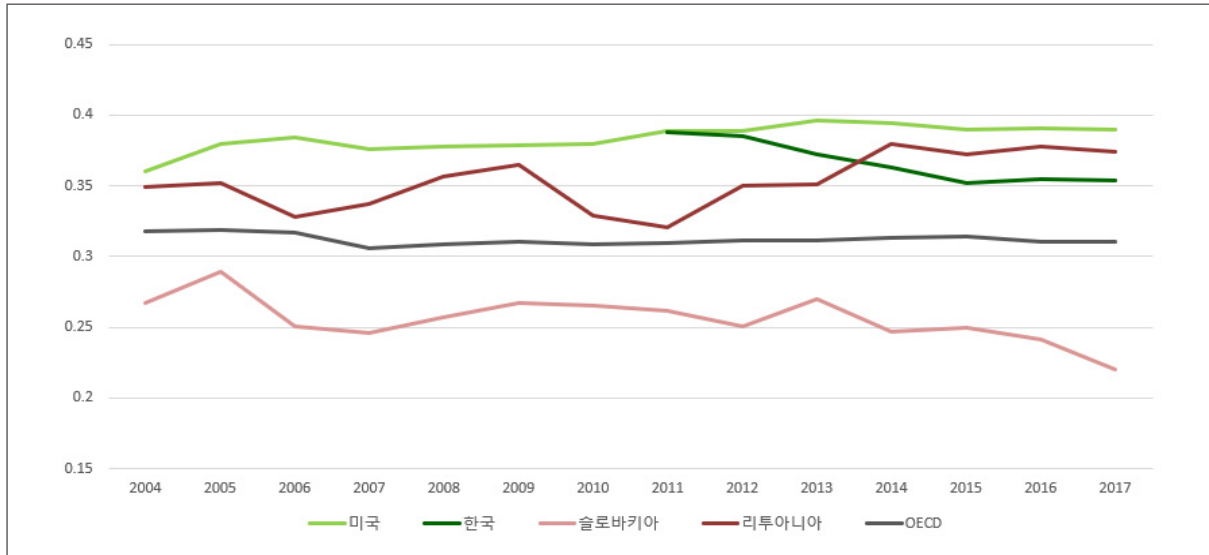
그림 2.3.1.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기반 지니계수



주) 해당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 근접연도 자료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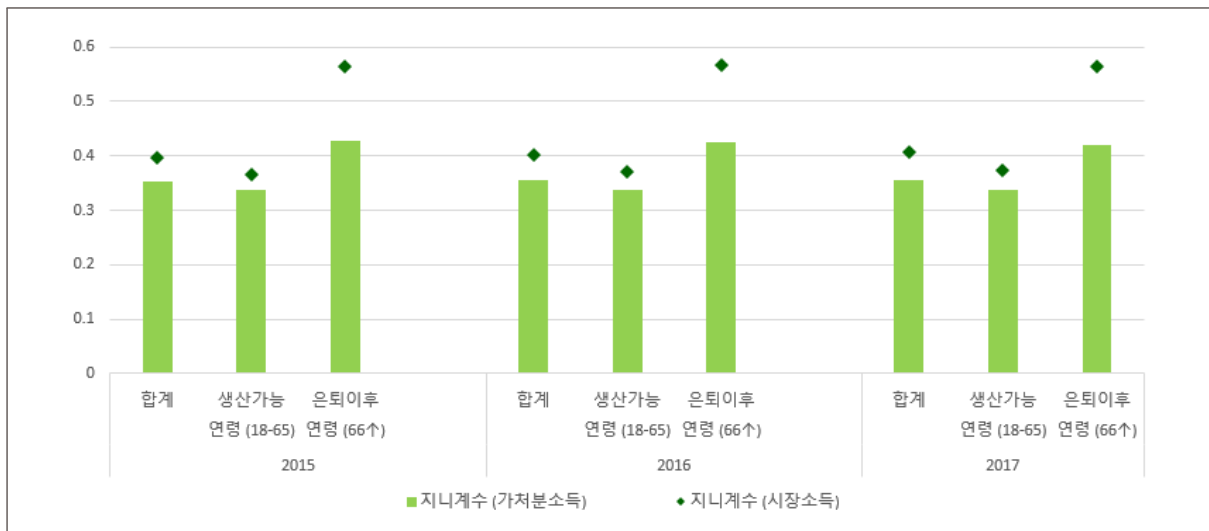
원자료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

그림 2.3.2. 지니계수 장기 변화



원자료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

그림 2.3.3. 한국 연령별 가처분 및 시장소득 지니계수



원자료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

정의 및 측정

지니계수의 값은 “완전한 평등” 상태인 0부터 “완전한 불평등” 상태인 1 사이에 분포한다. 지니계수는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소득(세금 및 사회적 이전 후 소득, 가구 소득을 가구 크기의 제공근으로 나눈 균등화 점수로 상이한 크기의 가구의 필요성의 차이로 조정됨)에 기반하고 있다.

3-2. 빈곤

2008-0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가장 최근의 상대빈곤율 변화는 지속증가군과 지속감소군, 증가감소군과 감소증가군에 속한 국가의 수가 엇비슷한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난다([그림 2.3.4]).²⁾ 지속증가군에는 헝가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OECD 평균 상대빈곤율도 지속증가하고 있다. 지속감소군에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한국(2011년 이후 변화), 칠레, 이스라엘이 속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증가하였다가 최근 감소한 증가감소군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그리스, 일본, 터키, 멕시코가 해당된다.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증가한 감소증가군에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영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미국, 라트비아가 속한다. OECD 평균값보다 상대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모두 유럽권 국가들이다.

이스라엘은 위기 전후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빈곤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다. 다만 새로운 소득정의를 적용한 최근의 자료에서는 18%로 2%p 낮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에 이어 멕시코, 터키, 한국, 칠레 등 신흥 국가들의 빈곤율이 15%를 넘는데, 최근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전후 그리고 최근의 빈곤율이 큰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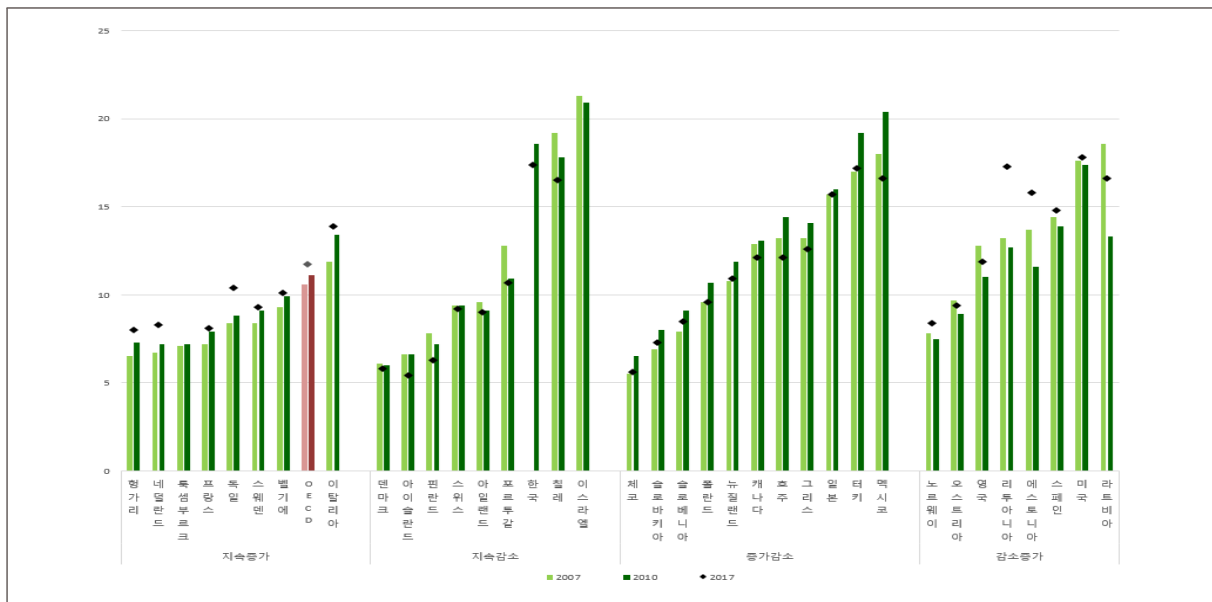
금융위기 전후 그리고 최근의 빈곤율 변화가 눈에 띄는 국가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연안 국가들이다. 세 국가 모두 금융위기 이후 빈곤율이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위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라트비아 역시 빈곤율 변화폭이 크다. 금융위기 전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위기 이후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체코의 빈곤율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이후 상대빈곤율이 6%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다. 영국은 금융위기 전 빈곤율이 점차 상승하다가 2008년부터 오히려 낮아졌다.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면서 OECD 평균 상대빈곤율보다 영국의 빈곤율이 더 높다.

[그림 2.3.6]은 한국의 최근 3년간 연령대별 상대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보여준다. 노인과 아동의 빈곤율이 청년, 성인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전체 연령대에서 대체적으로 빈곤율이 낮아졌지만 노인,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56%로 청년, 성인층의 빈곤율보다 네 배 이상 높다. 빈곤갭 비율은 빈곤선과 빈곤선 아래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나라

2) 각주 1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정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빈곤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2010년 이전의 한국 상대빈곤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은 가능한 한 새로운 소득정의에 따른 상대빈곤율을 제시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혼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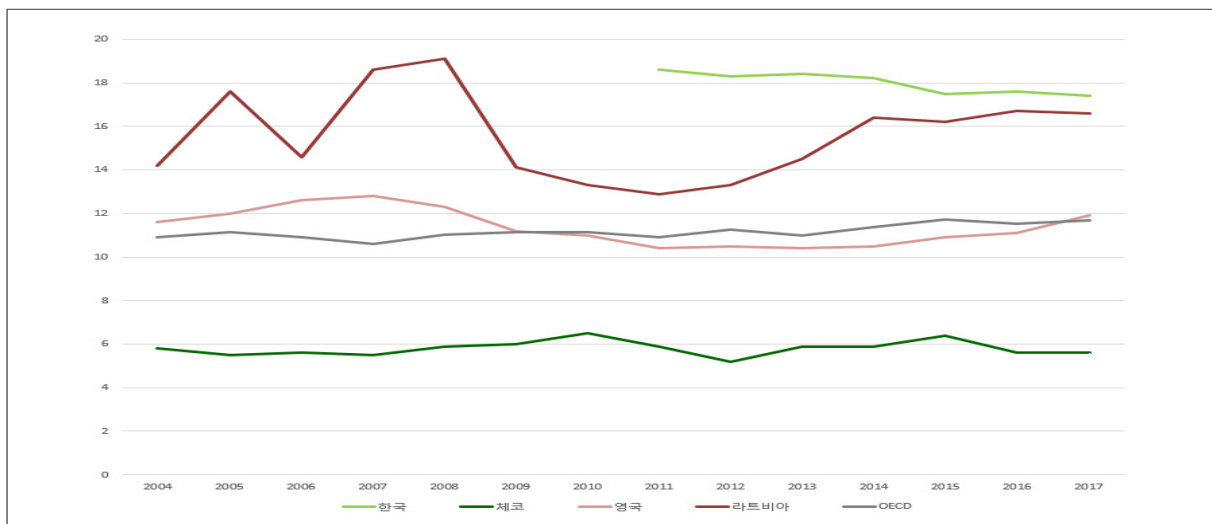
빈곤갭 비율은 35% 내외이다. 2017년 빈곤율이 약간 낮아진 것에 반해 빈곤갭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소득 간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것이다. 빈곤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빈곤의 심도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3.4.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기반 상대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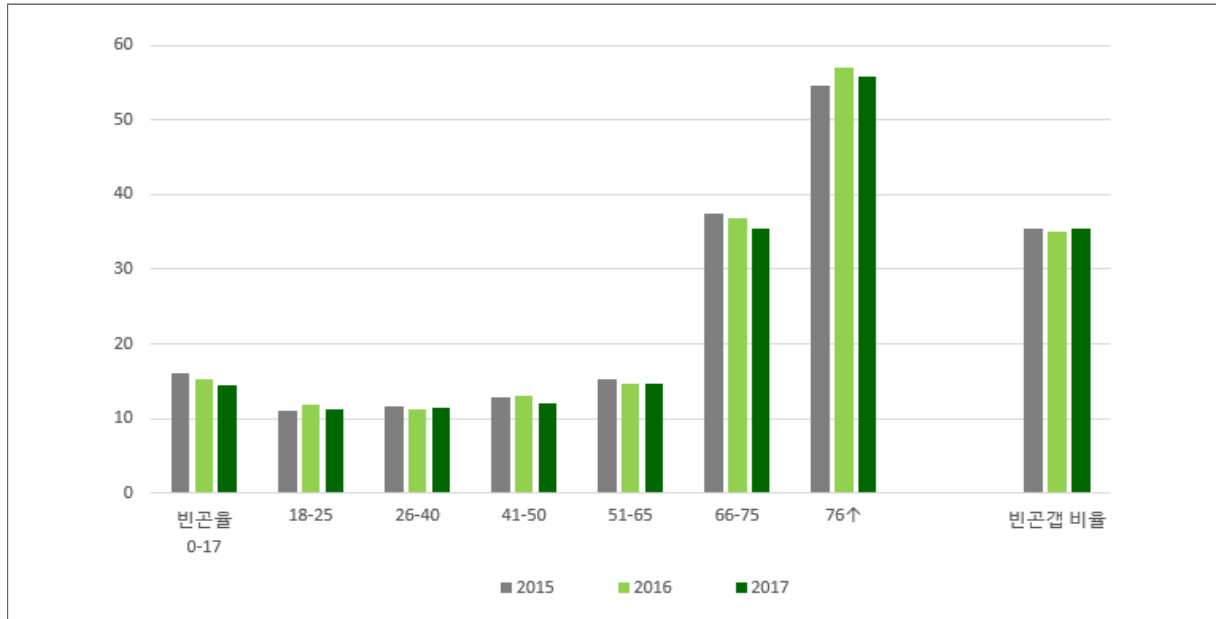
주1) 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주2) 해당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 근접연도 자료를 사용함.
 원자료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

그림 2.3.5. 상대 빈곤율 장기 변화



원자료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

그림 2.3.6. 한국 연령별 가처분소득 기반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원자료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

Ⅰ 정의 및 측정

상대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은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을 기반으로 측정한다. 한 개인의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이 해당국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그 사람은 빈곤한 자로 분류된다. 빈곤갭 비율은 빈곤선(여기서는 중위소득 50%)과 빈곤층의 평균소득 간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눔으로써 계산한다.

3-3. 비경제활동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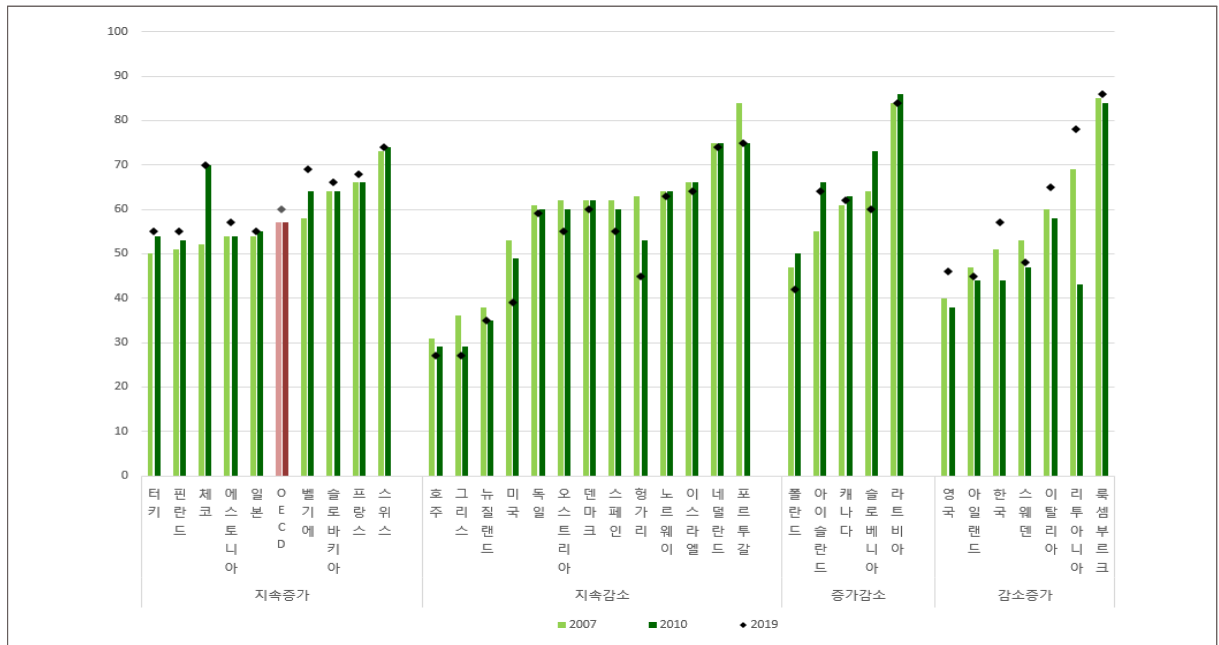
실업 시 유지되는 근로 순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순대체율은 비경제활동 급여의 관대성을 보여준다. 순대체율은 실업 전의 순가구소득 대비 특정 실업의 단계(여기서는 실업급여의 두 번째 달)에서 유지되는 순가구소득의 비율로 측정한다. 2008-0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가장 최근의 순대체율 변화를 보면 지속감소군에 속한 국가가 가장 많다([그림 2.3.7]). 지속감소군에는 호주, 그리스, 뉴질랜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헝가리, 노르웨이,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포함되어 있다. 지속증가군에는 터키, 핀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일본, 벨기에, 슬로바키아, 프랑스, 스위스가 속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순대체율이 증가하였다가 최근 감소한 증가감소군에는 폴란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슬로베니아, 라트비아가 해당된다.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 순대체율이 감소하였다가 최근 증가한 감소증가군에는 영국, 아일랜드, 한국, 스웨덴,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가 속한다. OECD 평균 순대체율은 지속 증가하였다. 순대체율이 OECD 평균값보다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두 유럽권 국가이다(2019년 기준).

그룹별 대표 국가의 장기변화를 살펴보면([그림 2.3.8]), 체코는 순대체율이 5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6%, 2010년 70%까지 상승하였고, 최근까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웃 국가인 헝가리는 2006년 순대체율이 83%까지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다가 최근 다시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순대체율이 체코와 비슷한 수준인 67%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순대체율은 금융위기 이후 낮아지다가 2017년부터 증가하여 2019년에는 57%로 OECD 평균값에 근접했다. 이는 자녀가 없는 독신의 개인을 상정했을 때의 추세인데, 다른 가족유형의 순대체율을 살펴보면 [그림 2.3.9]와 같다. 다른 가족유형에서도 전반적으로 2016-17년부터 순대체율이 증가하였다. 우선 맞벌이 부부에서 한 명이 평균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나머지 성인 한 명이 실직하더라도 이전 근로 시 순소득의 약 80%를 유지한다. 이와는 달리 외벌이 부부에서 소득을 올리던 성인이 실업상태가 되면 자녀유무에 따라 순대체율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순대체율이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2014년부터 변화의 기울기가 달라졌다. 자녀가 있는 경우 2015년 53%로 전년도에 비해 10%p 큰 폭으로 증가한 뒤에도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016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자녀유무에 따라 순대체율의 차이는 11%p 이다. 성인 1인과 자녀 2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순대체율은 다른 가족유형과 달리 2017년 이후 감소세이다.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가계 소득과 자녀 돌봄 및 교육을 홀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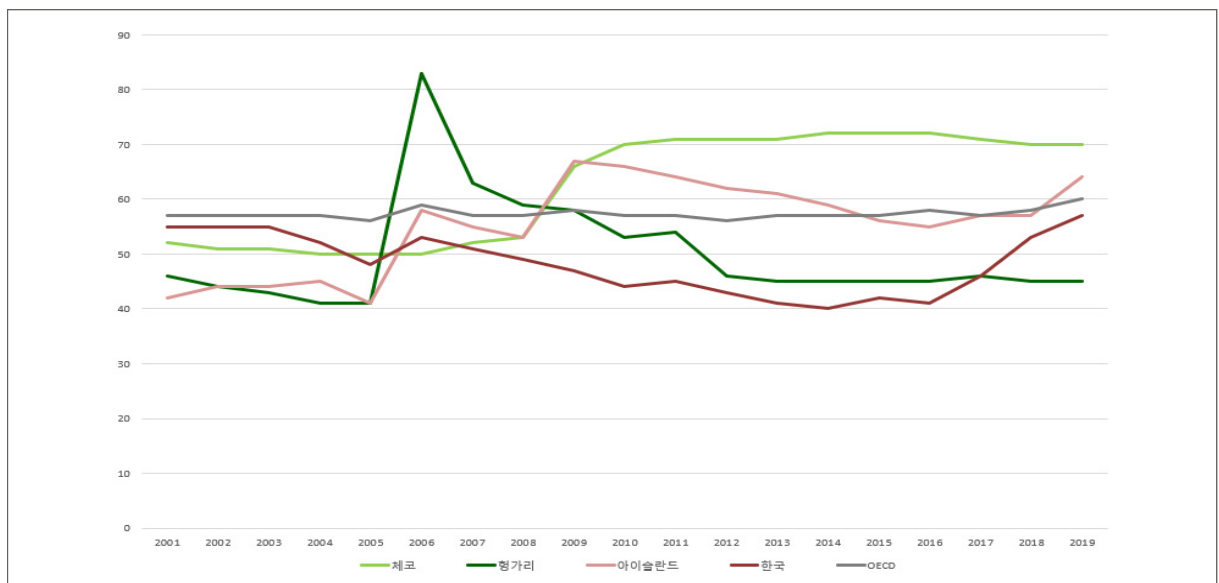
지원이 더 필요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업 시 유지되는 근로소득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이 가족유형에 대한 지원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림 2.3.7. 실업 시 유지되는 근로 순소득의 비율(순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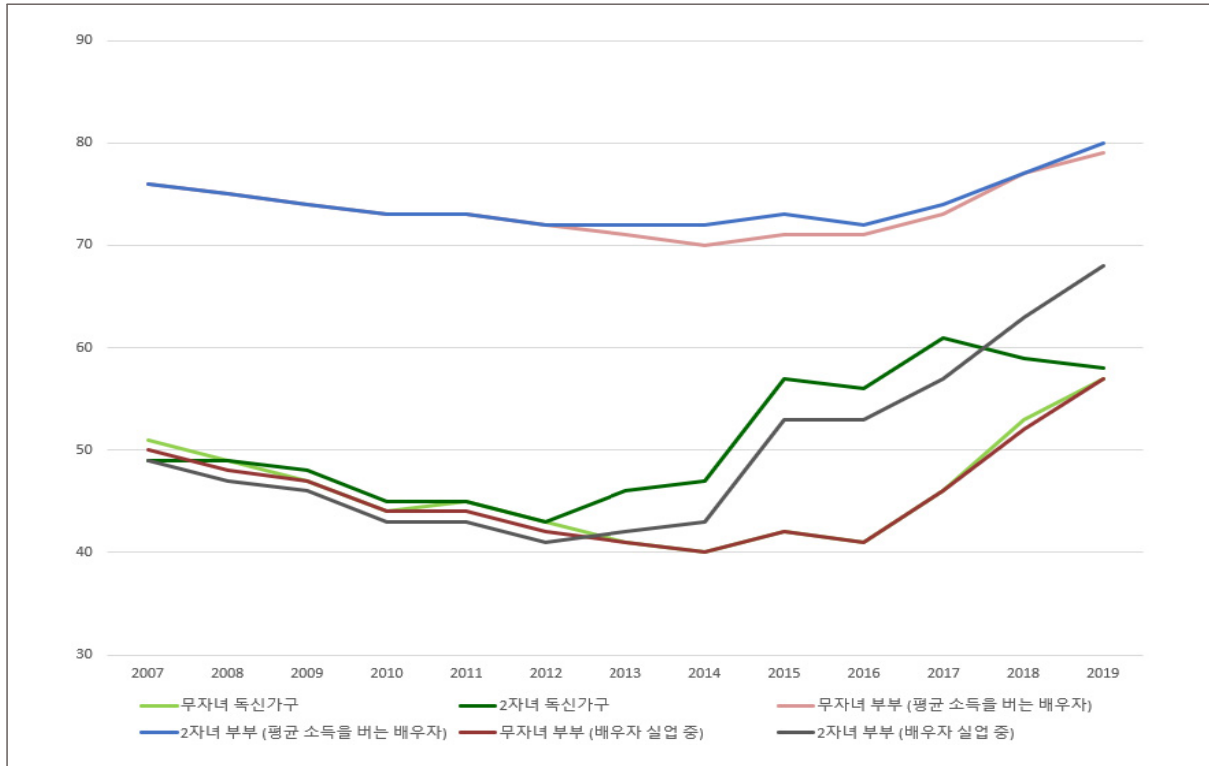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해당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 근접연도 자료를 사용함. 칠레는 자료 없으므로 제외.
 원자료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https://stats.oecd.org/>

그림 2.3.8. 순대체율 장기 변화



원자료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https://stats.oecd.org/>

그림 2.3.9. 한국 가족유형별 순대체율 변화



원자료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https://stats.oecd.org/>

정의 및 측정

순대체율은 실업 시 유지되는 근로 순소득의 부분으로 실업 시 순소득을 근로 시 순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실업 시 유지되는 순소득에는 모든 주요 소득 대체 급여를 포괄하지만 일차적으로 실업보험 급여가 해당된다.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급여는 가구당 한 번만 계산된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제시되는 순대체율은 근로 시 평균 임금의 100%를 버는 자녀가 없는 독신을 가정한다. 실업 시 순소득은 실업의 초기 단계에서(실업급여의 두 번째 달) 측정한다.

3-4. 실업급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벨기에와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위기 전보다 증가하였다. [그림 2.3.10]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했다가 최근 감소한 증가감소군에 속한 국가가 가장 많다. OECD 평균값도 증가 후 감소하였다. 증가감소군에는 슬로바키아, 일본,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미국,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영국, 스위스, 캐나다, 라트비아, 덴마크, 스웨덴,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등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들의 2010년 수치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최근까지 계속 증가한 지속증가군에는 한국, 칠레, 노르웨이,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핀란드가 속해 있다. 벨기에와 독일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지속 감소중이다.

각 그룹별 대표국가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2.3.11]), 아이슬란드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변화가 눈에 띈다. 2009년 수급자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여섯 배 가까이 폭증하였다가 2012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는 2007년부터 지속 증가추세를 보인다. 장기간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독일의 수급자 비율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최근까지 점차 감소세를 유지 중이다. 2000년대 들어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정책이 자리잡아가던 중 금융위기 시 적극 활용한 단축노동제도, 노동구좌제도의 결합 효과로 볼 수 있다(이서원, 2010).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지속증가군에 속하고 있으나 변화 폭이 크지는 않다. 또한 수급자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관대성과도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이 적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성별 수급자 수와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2.3.12]), 2009년 금융위기 시에는 남성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 비율이 여성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대비 2009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이 약 7만1천명, 여성이 약 3만5천명 증가하여, 남성의 증가폭이 여성보다 두 배 더 크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남성 수급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데 여성 수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한다. 2013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수급자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지고 2014년부터는 수급자 수도 여성이 더 많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또한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비율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10. 생산연령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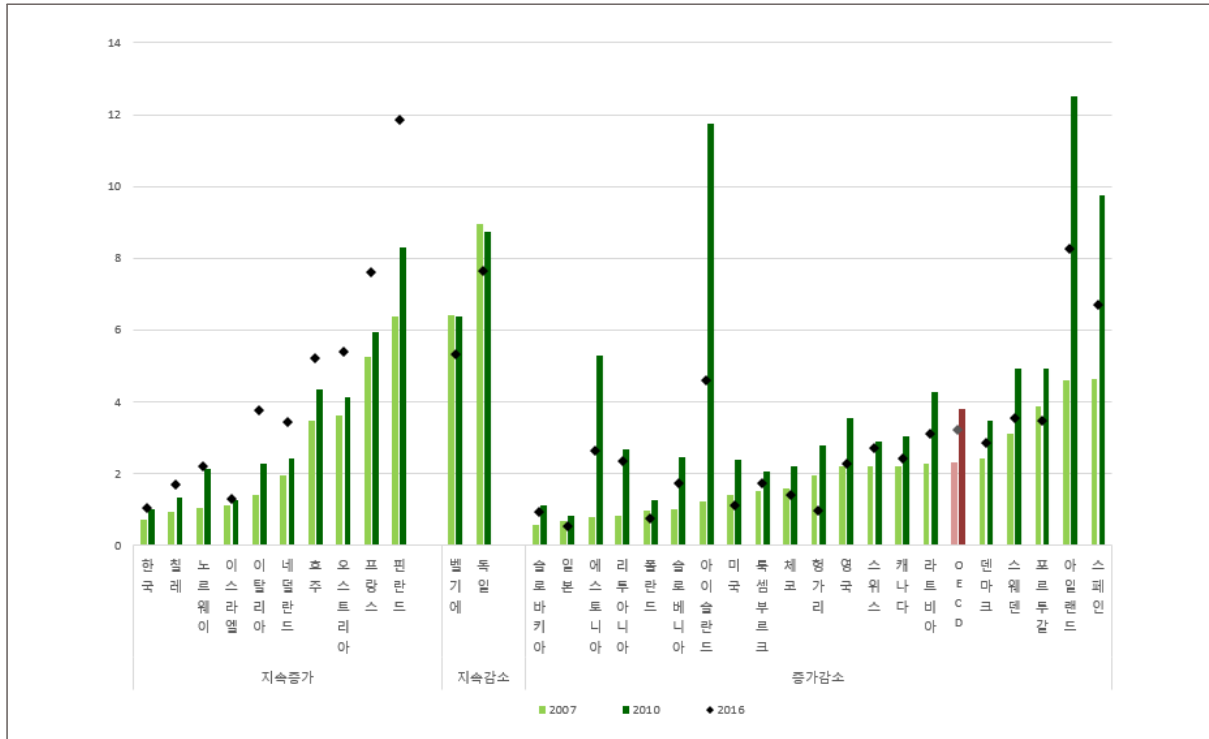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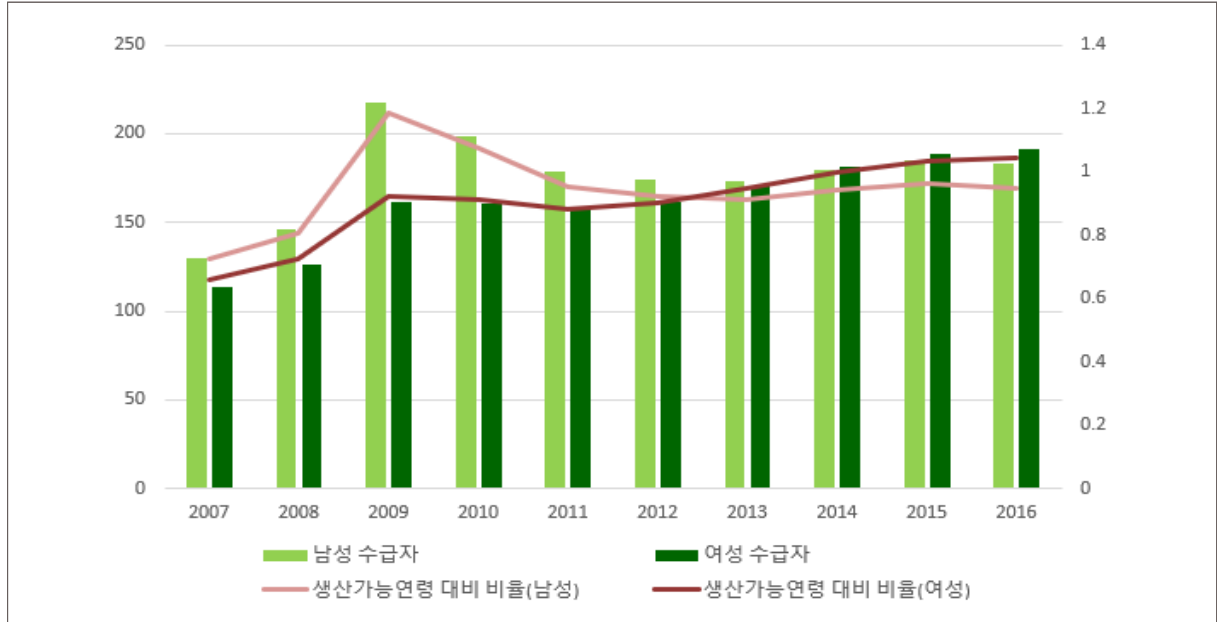


그림 2.3.12. 한국 실업급여 성별 수급자 현황



주) 수급자 수는 왼쪽 축(단위: 천 명),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율은 오른쪽 축(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Social Benefit Recipients Database, <https://stats.oecd.org/>

I 정의 및 측정

일차적 실업급여는 실업 초기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수급하는 급여들이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실업보험이 없는 일부 국가에서는 대신 자산조사에 근거한 실업 지원을 일차적 급여로 운영한다. 일차적 급여의 수급조건은 대개 이전에 고용된 경력이 있거나 보험 기여금을 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급자 비율은 생산연령 인구(15-64세) 중 수급자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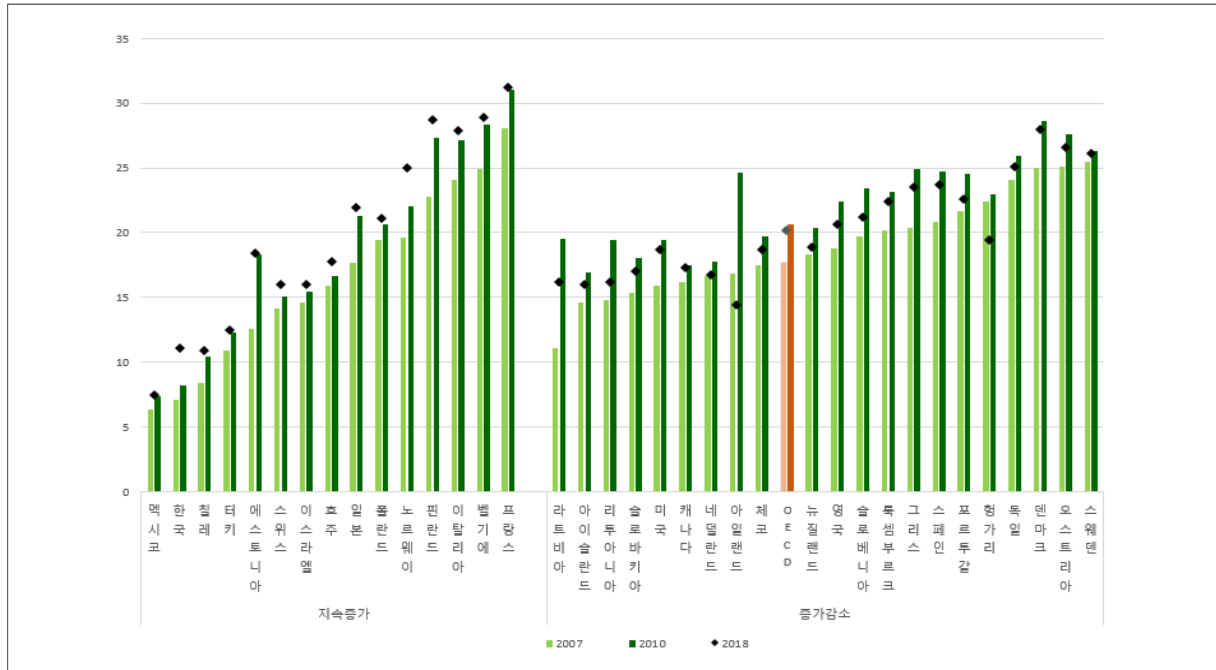
3-5. 사회지출

2008-09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모든 OECD 가입국에서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율이 위기 전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위기 기간 중 실업 증가를 비롯해 경제 위기의 여타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했다. [그림 2.3.13]에서와 같이 15개 국가는 위기 이후 최근까지도 지출을 늘렸지만(지속증가군), 절반 이상 국가들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증가감소군). 지속증가군에는 한국, 멕시코, 칠레와 같은 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신흥국에서부터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와 같이 지출 비율이 가장 큰 국가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증가감소군에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대체적으로 중간 수준의 지출 비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사회지출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구소련 구성국과 아일랜드 등이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다시 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된다. OECD 평균 사회지출도 증가 후 약한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아일랜드는 위기 직후 사회지출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위기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 중 한 곳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난 것이 위기 직후 사회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사회지출 비율이 위기 이전 수준까지 감소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높다. 다른 사회지출 영역에서 지출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GDP의 30% 이상을 공공 사회지출에 배정했다. 이미 가장 큰 비율을 사회지출에 배정하고 있지만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사회지출이 낮은 국가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증가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자유주의 체제의 대표격인 미국 역시 금융위기 이후 사회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약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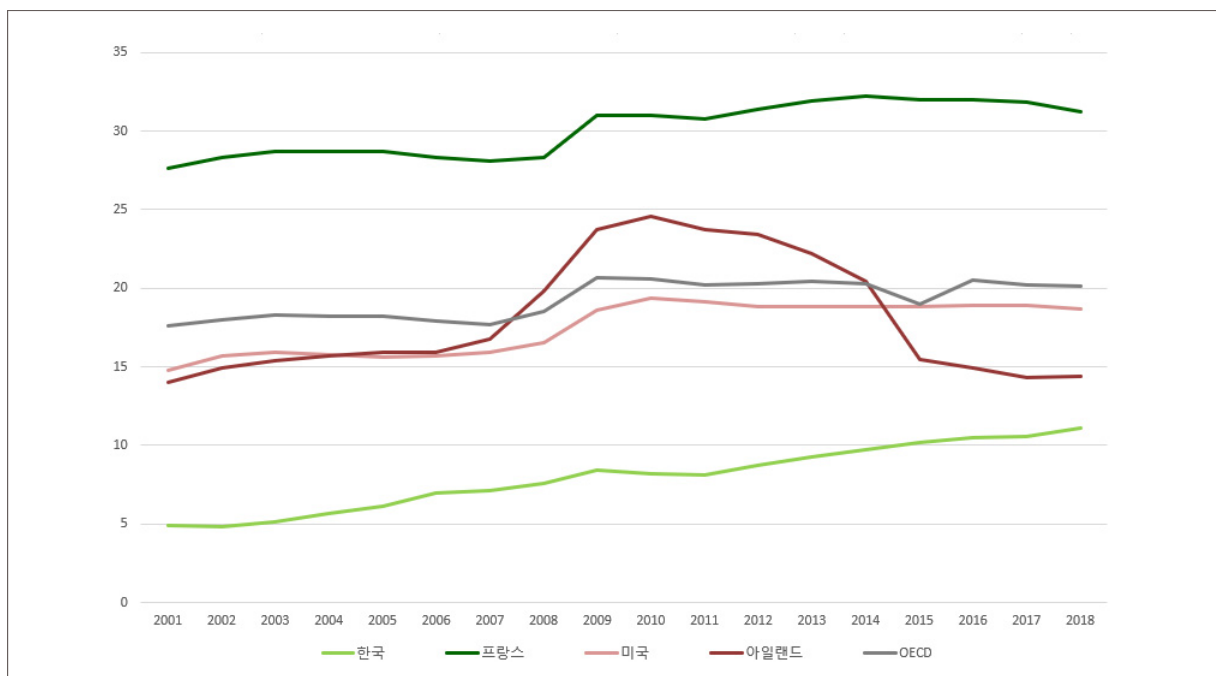
[그림 2.3.15]는 한국의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율을 지출 영역별로 보여준다. 2007년부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모두 증가하였고 현금보다 현물의 비중이 더 크다. 2017년 현금급여 지출은 GDP 대비 4.2%, 현물은 6%이다. 보건의료 지출은 모두 현물에 해당하는데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4.3%로 현금급여 비중보다 크다. 연금지출 비중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 2.8%로 보건의료 다음으로 크다. 반면 실업 지출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0.1%p 증가한 것 외에는 0.3%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13.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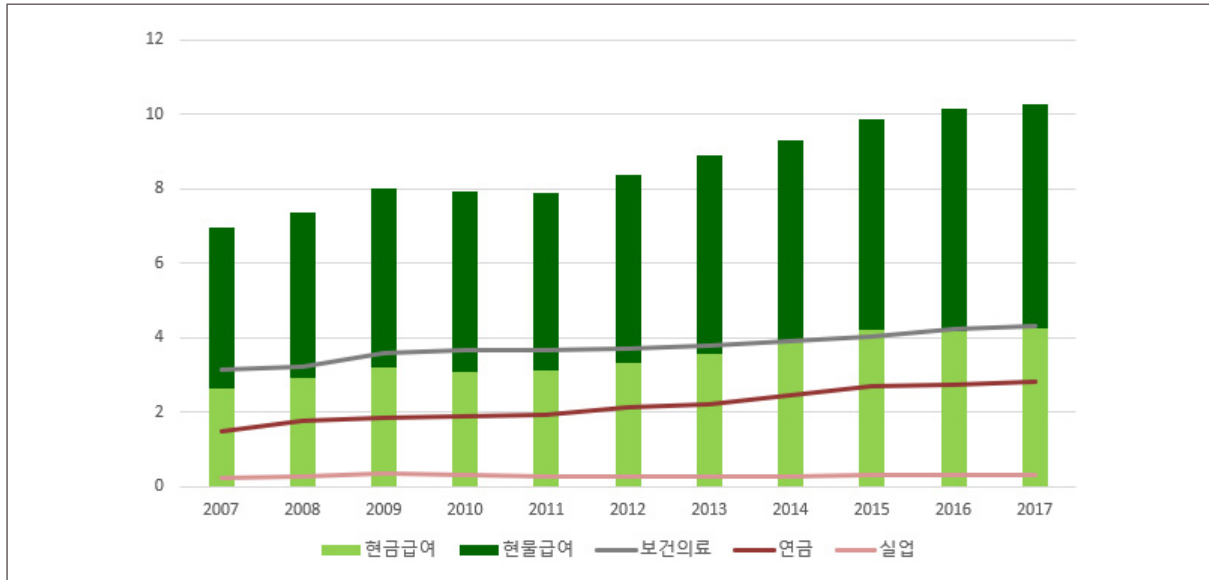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해당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 근접연도 자료를 사용함.
 원자료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stats.oecd.org/>

그림 2.3.14.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액 장기 변화



원자료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stats.oecd.org/>

그림 2.3.15. 한국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세부지표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stats.oecd.org/>

Ⅰ 정의 및 측정

일반정부 부문(일반정부 부문: 정부 부문을 고유의 정부 활동과 정부가 행하는 기업적 활동으로 대별할 때의 전자)이 재정 흐름을 통제할 경우 사회지출은 공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공공 사회지출액은 해당 급여에 부과된 직·간접세를 차감하기 전 그리고 사회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세금 지출을 더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다.

3-6. 소결

불평등, 빈곤, 비경제활동 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공공 사회지출 지표 추이를 보면 2008-09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의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일부 국가에서 위기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 지구적 위기나 초국가적 변화에 맞선 국민국가의 대응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 방식은 국가별로, 정책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Capano et al. 2020). 한국은 ‘모범 방역국가’로 해외 매체에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사회 지표, 특히 형평성 지표에서도 모범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형평성 지표에서 OECD 국가들과 한국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의 평균 불평등과 빈곤 수준이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느린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해 발표하는 2011년 이후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1 근처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평균 상대빈곤율은 2017년 12%에 근접한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각각 0.36, 17%로 OECD 평균값보다 크게 높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중이다. 멕시코, 칠레, 터키 등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에서 불평등과 빈곤 수준이 높았지만 최근 점차 감소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OECD 평균 불평등과 빈곤 수준보다 낮은 국가들은 모두 유럽권이다.

둘째, 비경제활동 급여의 관대성을 보여주는 순대체율과 관련해서, 2001년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값은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지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의 OECD 평균과 한국의 순대체율은 각각 60%, 57%로 거의 비슷하다. 같은 기간 순대체율이 OECD 평균값보다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모두 유럽권 국가이다.

셋째, 금융위기 직후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벨기에와 독일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최근까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한 차례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이후 최근까지 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넷째, 금융위기 직후 한국을 포함한 모든 OECD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지출 비중을 늘렸다. 일부 국가들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사회지출 비중을 줄였지만, 흥미롭게도 한국, 멕시코, 칠레와 같은 신흥국가들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와 같이 지출 비율이 가장 큰 국가들이 위기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속증가군에 속해 있지만 한국의 2018년 사회지출 비중은 프랑스의 약 1/3 수준에 불과한 11.1%이다. OECD 평균 사회지출 비중은 위기 이후 증가하였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였다.



4. 사회통합 지표

4-1. 사회적 지지

첫 번째 사회통합 지표로서 살펴본 것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이다. ‘사회적 지지’는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와줄 이웃이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본 내용은 국가 평균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Gallup World Poll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3년 간격으로 통합한 자료로서,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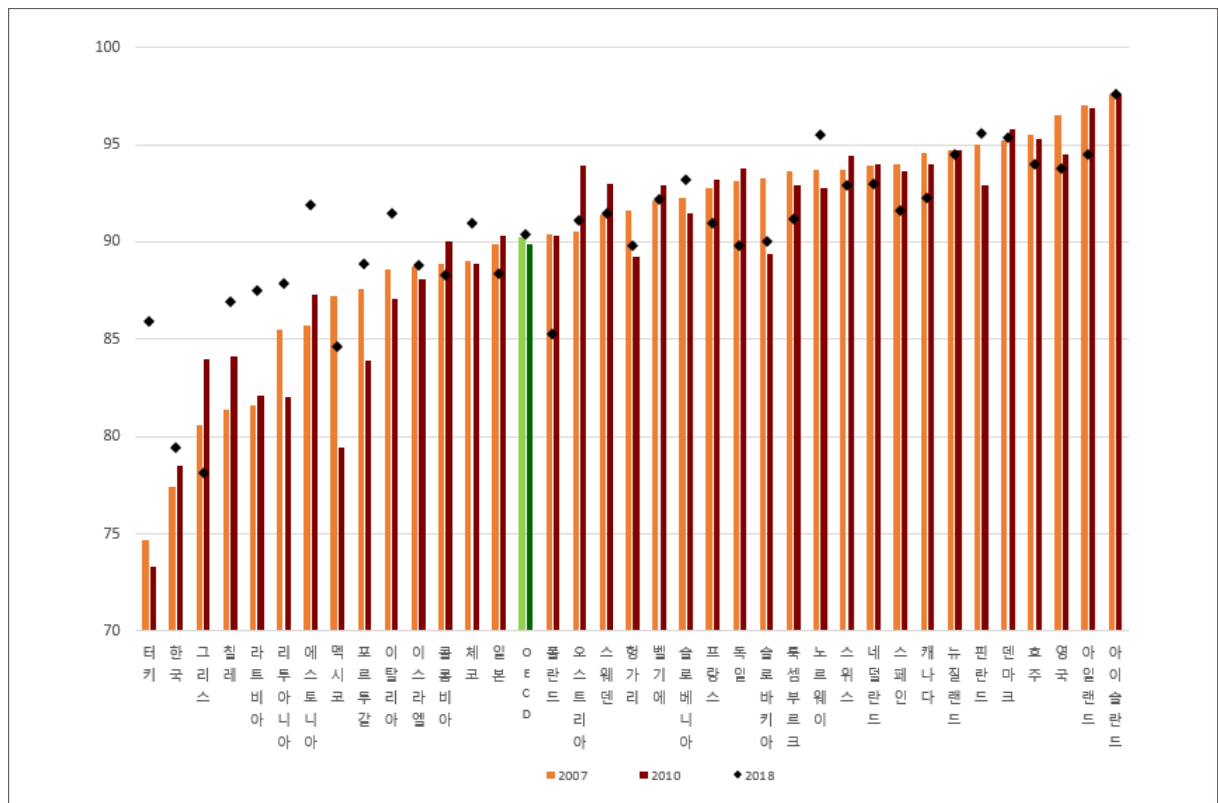
먼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로 OECD 가입국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그림 2.4.1]과 같다. 이는 각 나라별 ‘사회적 지지’ 평균 수치가 낮은 국가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이다. 전체 36개의 OECD 가입국들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평균 89.9%로서,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은 2007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평균 77.7%로 나타나,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터키 79.2%, 그리스 80.2% 등이 하위에 머물고 있다.

OECD 가입국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OECD 평균 2007년 90.3%에서 2010년 89.9%로 떨어져 큰 폭의 변화는 아니나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약간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에 이르러 90.4%를 보임에 따라, 최근 들어 OECD 가입국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다시 회복세에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7년 77.4%, 2010년 78.5%, 그리고 2016년 79.4%로 차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그림 2.4.2]는 OECD 가입국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의 변화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각 국가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각 변화 유형은 ‘지속증가’, ‘지속감소’, ‘유지’, ‘감소증가’, ‘증가감소’의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OECD 평균을 비롯한 몇 개의 국가들은 ‘유지’ 유형에 속하며, 이들 국가들의 평균 ‘사회적 지지’ 수준이 94.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증가’의 유형도 발견되었는데, 한국이 속하는 유형으로서 이들 국가의 평균 ‘사회적 지지’ 수준은 83.5%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지속 감소’하는 유형도 있었으며, 이들은 감소세라 하더라도 평균 ‘사회적 지지’ 수준이 93.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감소증가’의 유형은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감소하였다가 조금씩 회복세에 있는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의 평균 ‘사회적 지지’ 수준은 88.4%이다. 마지막으로 ‘증가감소’의 특성을 보인 유형도 나타났는데, 이에 속한 국가들은 평균 89.8%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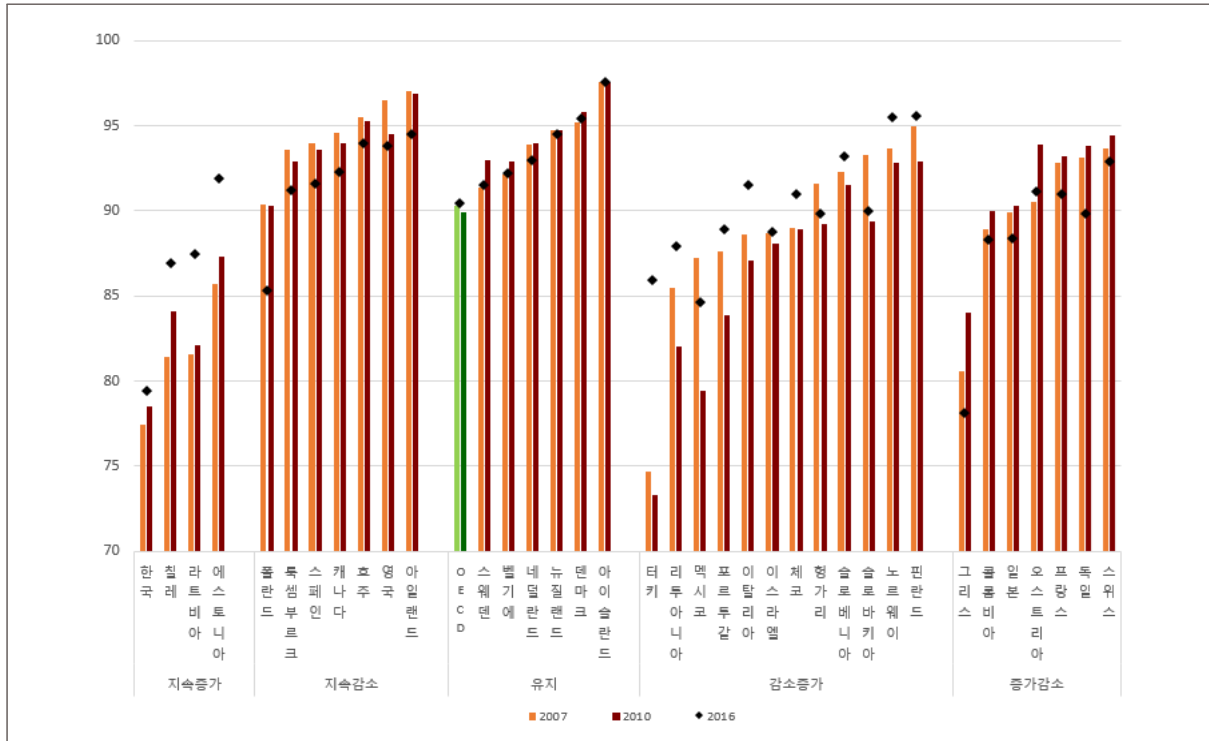
그림 2.4.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사회적 지지 변화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Gallup World Poll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96535>

그림 2.4.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사회적 지지 변화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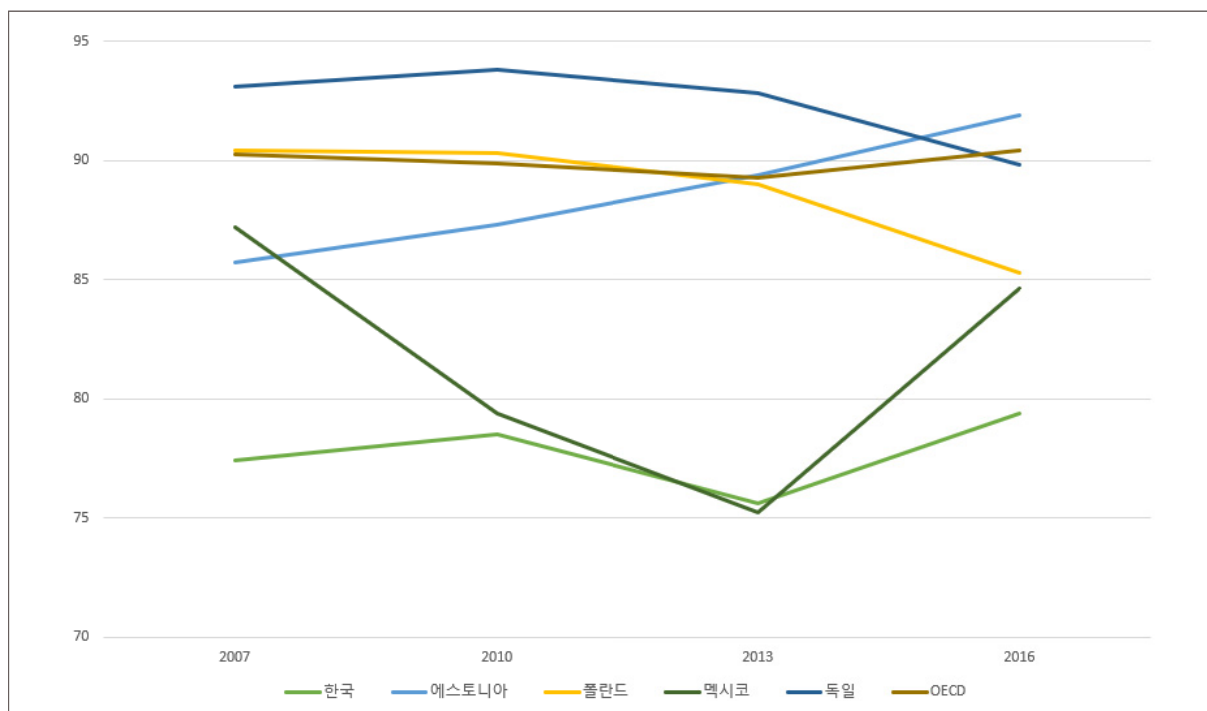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Gallup World Poll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96535>

[그림 2.4.3]은 2007년부터 2016년 동안의 ‘사회적 지지’ 변화 추이에 대해 각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첫째, ‘유지’ 유형은 OECD 평균이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이들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스웨덴, 벨기에,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가 있다. 스웨덴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보면, 2007년 91.4%, 2010년 93.0%, 2013년 91.9%, 2016년 91.5%로 세계금융위기에 별다른 타격 없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유형에 속한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평균 94.1%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둘째, ‘지속증가’의 유형은 한국이 속한 유형으로서, 라트비아, 칠레, 에스토니아가 해당한다. 에스토니아의 경우를 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2007년 85.7%, 2010년 87.3%, 2013년 89.4%, 2016년 91.9%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7년 77.4%, 2010년 78.5%, 2013년 75.6%, 2016년 79.4%로서, 2013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세계금융위기의 타격과 큰 상관없이 ‘사회적 지지’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국가들이다. 해당 유형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평균 84.5%로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 전체 평균 수준인 90.0%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3. 연도별 주요 국가의 사회적 지지 변화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Gallup World Poll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96535>

셋째, ‘지속감소’의 유형은 폴란드, 스페인,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이 속해 있다. 이 중 폴란드의 ‘사회적 지지’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90.4%, 2010년 90.3%, 2013년 89.0%, 2016년 85.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감소 추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보이는 국가들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회적 지지’ 수준 평균이 92.2%를 나타내어, 다섯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OECD 평균인 90.0%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넷째, ‘감소증가’의 유형에는 터키, 이스라엘, 체코, 노르웨이, 핀란드, 멕시코,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해당하였다. 이는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하락하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국가들이다. 멕시코의 경우 2007년 87.2%, 2010년 79.4%, 2013년 75.2%, 2016년 84.6%를 나타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유형에 속한 국가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평균 87.8%로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증가감소’의 유형은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 콜롬비아, 프랑스가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경우, ‘사회적 지지’ 수준이 2007년 93.1%, 2010년 93.8%, 2013년 92.8%, 2016년 89.8%를 나타냈다. 본 유형은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증가하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국가들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유형에 속한 국가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평균 90.0%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유지’ 및 ‘지속감소’, ‘증가감소’ 유형의 국가들은 대부분 당초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유지하며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지속증가’, ‘감소증가’ 유형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국가들이지만, 당초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향되는 경향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Ⅰ 정의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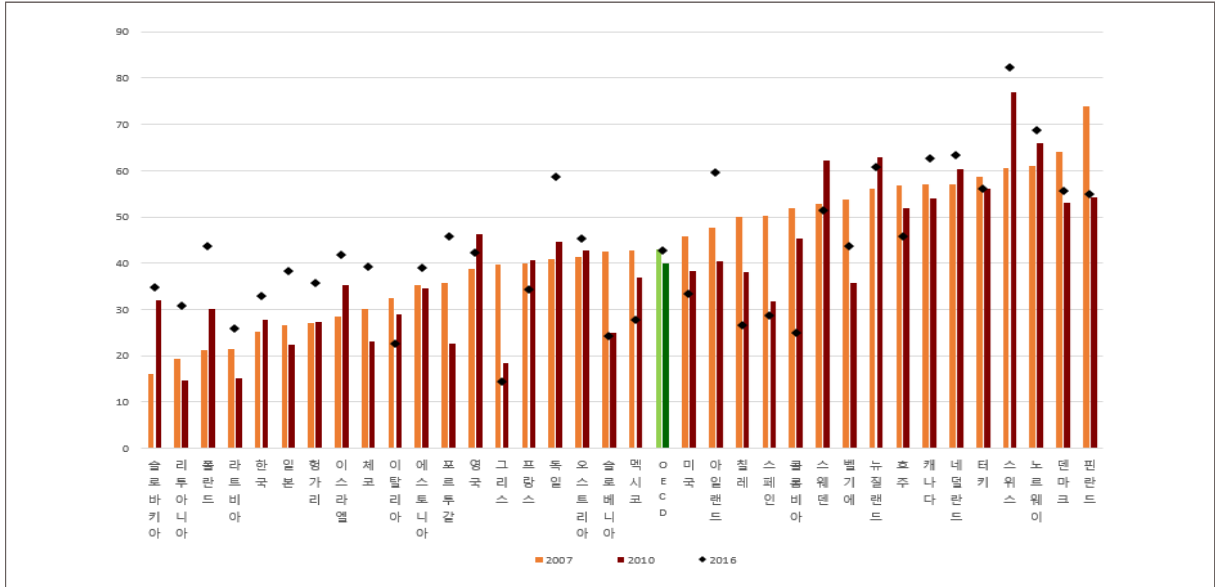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이웃이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것을 조사하여,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는 매년 Gallup World Poll을 통하여 국가별로 15세 이상의 국민(농촌 포함)을 대상으로 약 1,000명의 표본으로 수집하였으며, 국가 평균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3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합한 것이다.

4-2.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 통합분야의 두 번째 지표는 ‘정부에 대한 신뢰(Trust in government)’이다. 통합된 사회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또한 이들 정부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신뢰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사회적 신뢰에 있어서 확신과 부패 문제(Confidence and corruption issues)는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들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가 정부에 대해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모름” 중 응답하도록 하여,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본 내용은 국가 평균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Gallup World Poll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3년 간격으로 통합한 자료로서,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그림 2.4.4]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로 OECD 국가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각 나라별 ‘정부에 대한 신뢰’ 평균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였다. 총 35개국들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평균 41.3%로 절반 이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라트비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 이어 하위 일곱 번째에 머물러 있으며, 2007년에서 2016년까지 한국은 평균 28.9%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2.4.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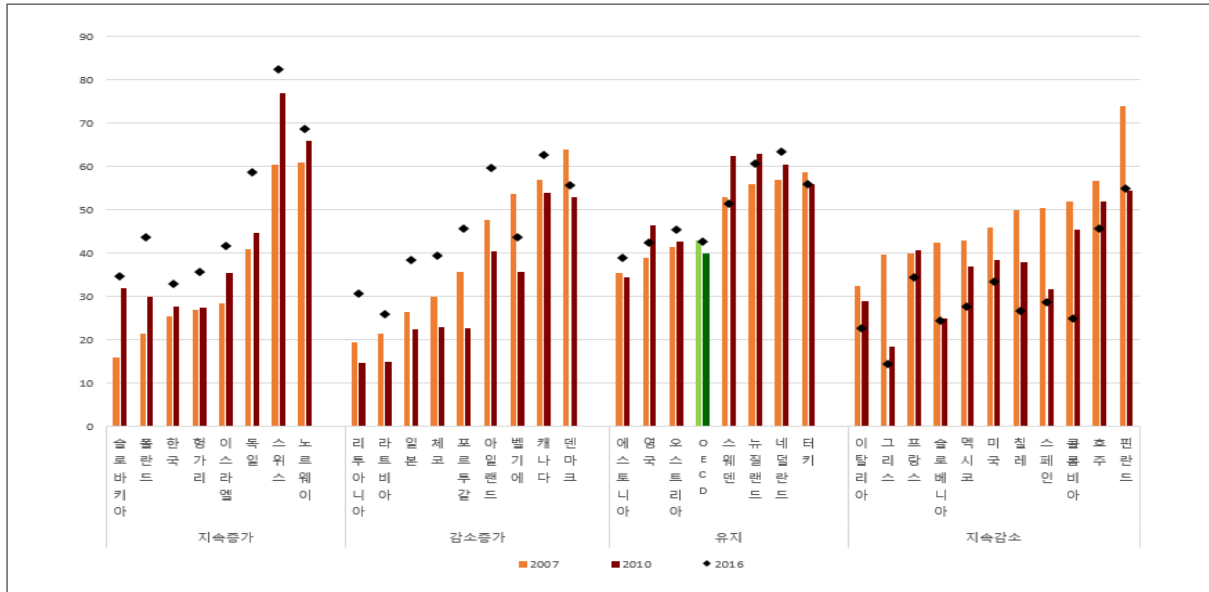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Gallup World Poll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96541>

OECD 가입국들의 전반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OECD 평균 2007년 42.9%에서 2010년 39.9%로 낮아져, OECD 가입국들의 전반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다소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에 이르러 평균 42.7%를 나타냄에 따라, 최근 들어 OECD 가입국들의 전반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다시 회복세에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7년 25.3%, 2010년 27.7%, 그리고 2016년 33.0%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림 2.4.5]는 OECD 가입국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각 국가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 각 변화 유형은 ‘지속증가’, ‘감소증가’, ‘유지’, ‘지속감소’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OECD 평균을 비롯한 몇 개의 국가들은 ‘유지’ 유형에 속하며, 이들 국가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평균 50.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증가’의 유형도 발견되었는데, 한국은 이 유형에 속해 있으며 이들 국가의 평균은 42.9%로 전체에서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속 감소’하는 유형도 있었는데, 이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평균 36.8%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며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국가군이다. 마지막으로 ‘감소증가’ 유형이 있으며, 이들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였다가 조금씩 회복세에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의 평균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38.5%로 네 집단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4.5.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 유형 구분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Gallup World Poll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96541>

다음으로 [그림 2.4.6]은 2007년부터 2016년 동안의 ‘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 추이에 대해 각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첫째, ‘유지’ 유형은 OECD 평균이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이들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영국, 스웨덴, 터키, 네덜란드, 뉴질랜드가 있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을 살펴보면, 2007년 41.3%, 2010년 42.7%, 2013년 42.7%, 2016년 45.3%로 세계금융위기에 별다른 타격 없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유형에 속한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평균 50.1%로 네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둘째, ‘지속증가’의 유형은 한국을 비롯하여, 독일,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가 속해 있는 유형이다. 독일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2007년 40.8%, 2010년 44.7%, 2013년 59.7%, 2016년 58.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25.3%, 2010년 27.7%, 2013년 29.7%, 2016년 33.0%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유형에 속한 국가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평균 44.5%로서, OECD 전체 평균 수준인 41.3%와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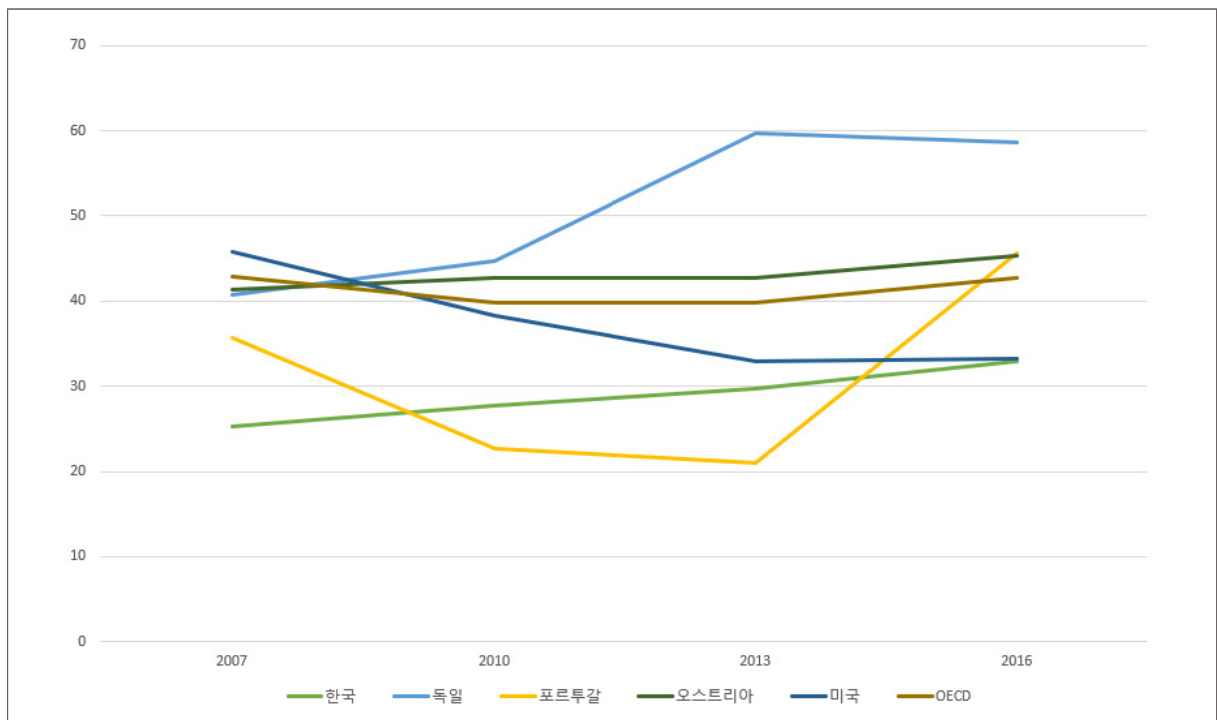
셋째, ‘지속감소’의 유형은 미국, 그리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칠레, 스페인, 콜롬비아, 호주, 핀란드가 속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45.8%, 2010년 38.3%, 2013년 33.0%, 2016년 3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유형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38.3%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넷째, ‘감소증가’의 유형에는 포르투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일본,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가 속해 있다. 이들은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하락하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들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2007년 35.7%, 2010년 22.7%, 2013년 21.0%, 2016년 45.7%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에 속한 국가들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평균은 35.0%로 네 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OECD 전체 평균 수준인 41.3%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유지’ 및 ‘지속 증가’ 유형의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OECD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지속감소’와 ‘감소증가’의 유형은 전반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금융위기 등을 기점으로 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4.6. 연도별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 변화(2007~2016)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Gallup World Poll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96541>

Ⅰ 정의 및 측정

정부에 대한 신뢰(Trust in government)는 “국가 정부에 대해 신뢰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 “모름”의 응답범주로 조사하여, “예”라고 응답한 인구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이 자료는 매년 Gallup World Poll을 통하여 국가별로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약 1,000명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며, 국가 평균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3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합한 것이다.

4-3. 성별 임금 격차

사회통합 분야에서 세 번째로 살펴본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임금 중간 값 간의 차이를 남성의 임금 중간 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적고, 임금이 낮은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낮다. 이에 결과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여성은 빈곤한 상태에 놓여 노년기에 더 많은 사회적 의존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격차의 원인이 자발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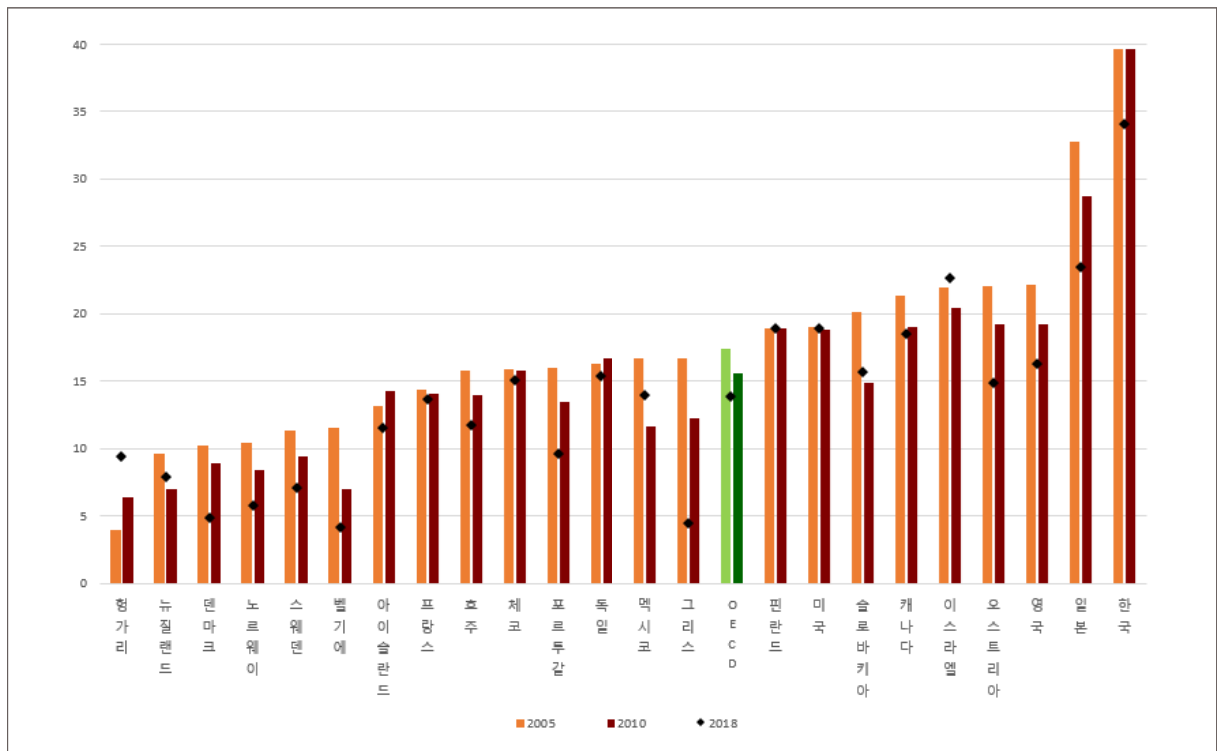
[그림 2.4.7]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OECD 가입국들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을 살펴본 것이다. 각 나라별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였다. OECD 가입국 중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은 평균 15.6%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국은 2000년에서 2018년에 이르는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이 평균 37.2%로 나타나, 전체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일본 27.3%, 이스라엘 21.0%, 캐나다 19.5% 등의 순으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OECD 가입국들의 전반적인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OECD 평균 2005년 17.4%에서 2010년 15.6%로 소폭 하향하여,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 임금 격차의 심화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에는 13.8%를 나타냄에 따라, 최근 들어 OECD 가입국들의 전반적인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이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 39.6%, 2010년 39.6%로 유지되어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18년에는 34.1%로 소폭 감소하여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 중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2.4.8]은 OECD 가입국들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의 변화를 유형별로 구분한 것이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각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에 따라 각 변화 유형은 ‘지속감소’와 ‘유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즉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성별 임금 격차’가 소폭 변화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볼 때 격차가 더욱 심화되기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속감소’ 유형은 OECD 평균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해당된 유형으로서, 이들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16.0%로 OECD 평균 수준인 15.6%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유지’ 유형은 평균 15.1%의 ‘성별 임금 격차’를 나타내어 OECD 평균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국가별로 소폭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각 국가별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그림 2.4.7.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성별 임금 격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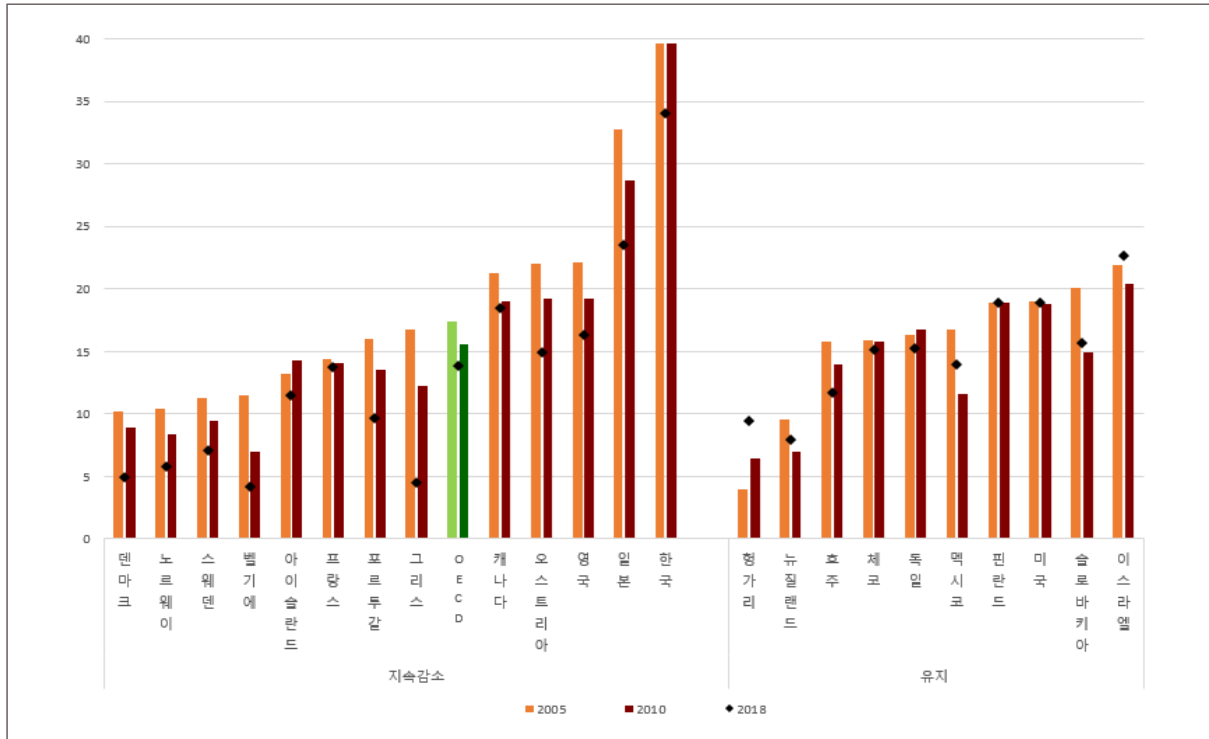


주1) 단위: %

주2)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는 2016년, 벨기에는 2017년 수치임

원자료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51>

그림 2.4.8.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성별 임금 격차 변화 유형 구분



주1) 단위: %
 주2)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는 2016년, 벨기에는 2017년 수치임
 원자료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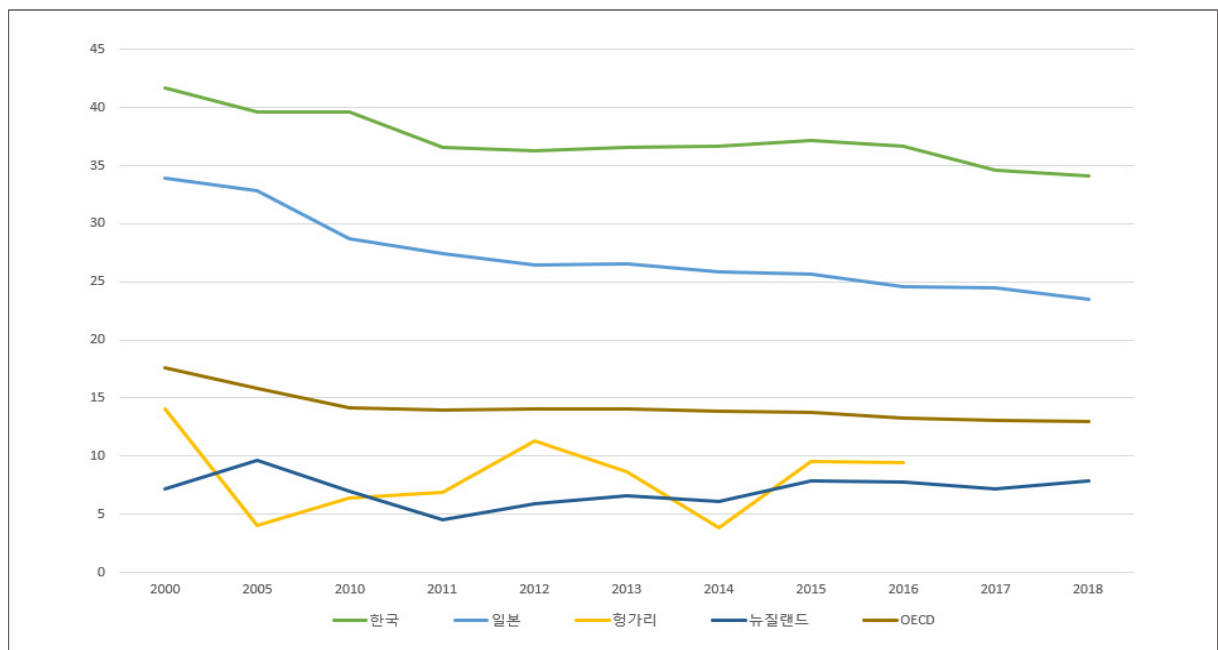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림 2.4.9]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성별 임금 격차’ 변화 추이에 대해 각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첫째, ‘지속감소’의 유형은 OECD 평균이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이들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한국, 일본, 캐나다,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아이슬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가 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년 33.9%, 2005년 32.8%, 2010년 28.7%, 2011년 27.4%, 2012년 26.5%, 2013년 26.6%, 2014년 25.9%, 2015년 25.7%, 2016년 24.6%, 2017년 24.5%, 2018년 23.5%로 차츰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2000년 41.7%로 높은 격차 수준을 보였으나, 2005년 39.6%, 2010년 39.6%, 2011년 36.6%, 2012년 36.3%, 2013년 36.6%, 2014년 36.7%, 2015년 37.2%, 2016년 36.7%, 2017년 34.6%, 2018년 34.1%를 나타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나 차츰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유형에 속한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15.6%로 OECD 평균 수준인 15.4%와 유사하다.

둘째, ‘유지’의 유형은 이스라엘, 핀란드, 독일, 체코, 미국, 멕시코, 호주, 슬로바키아, 헝가리, 뉴질랜드가 해당한다. 헝가리의 경우, 2000년 14.1%, 2005년 4.0%, 2010년 6.4%, 2011년 6.9%, 2012년 11.3%, 2013년 8.7%, 2014년 3.8%, 2015년 9.5%, 2016년 9.4%로 나타나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2000년 7.2%, 2005년 9.6%, 2010년 7.0%, 2011년 4.5%, 2012년 5.9%, 2013년 6.6%, 2014년 6.1%, 2015년 7.9%, 2016년 7.8%, 2017년 7.2%, 2018년 7.9%로 해당 국가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에 속한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15.1%로 OECD 평균 수준인 15.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지속감소’ 유형의 국가들은 ‘성별 임금 격차’가 당초 높은 수준이었다가 차츰 감소하여 평균 수준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며, ‘유지’ 유형의 국가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가운데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각 국가별 평균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9. 연도별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변화(2000~2018)



주1) 단위: %

주2) 헝가리는 2016년 수치임

원자료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51>

I 정의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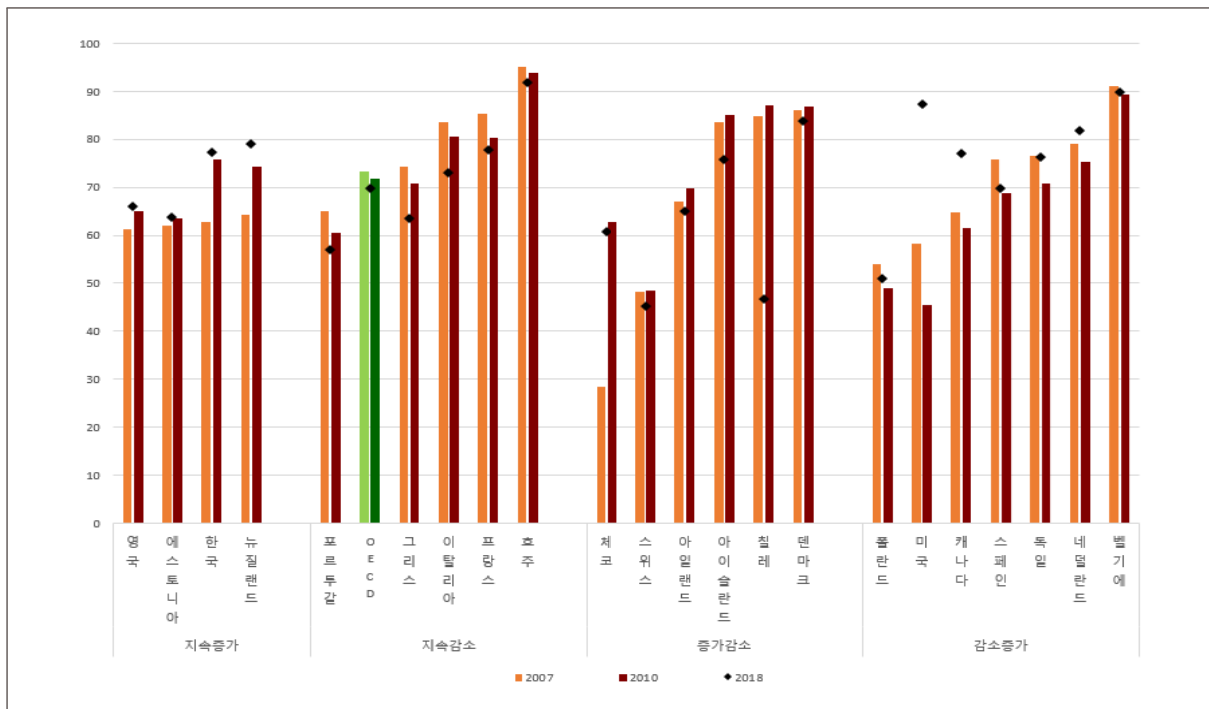
성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는 남성과 여성의 중간 임금 차이를 남성의 중간 임금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본 자료는 정규직 임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4-4. 투표

네 번째 사회통합 지표는 투표로 투표율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투표율은 투표 연령 인구(VAP) 중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2.4.1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최근의 OECD 국가들의 투표율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시점은 국제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전후 시기(2007-2010년)와 최근의 2018년을 설정하였다. 국가별 투표율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점의 자료가 부재한 국가들을 제외한 OECD 소속의 22개의 국가를 분석하였다.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투표율을 지속증가, 지속감소, 증가감소, 감소증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지속증가 유형에는 에스토니아, 한국, 뉴질랜드, 영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속감소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총 5개국으로 호주,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을 포함하였다.³⁾ 증가감소 유형에는 총 6개국으로, 덴마크, 칠레, 체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스위스가 포함되었다. 감소증가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총 7개국으로, 캐나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미국이 포함되었다.

그림 2.4.10.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투표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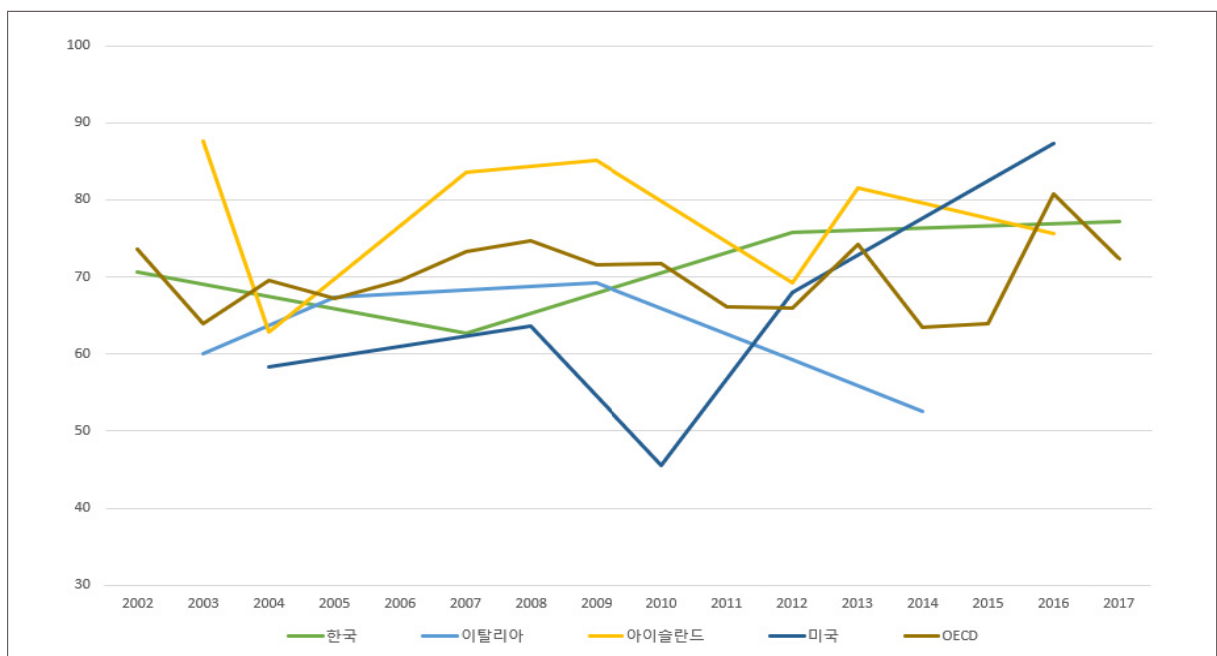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Voters Turnout in region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7627>

3) OECD 전체 평균은 지속감소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들의 결측치가 많아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표국가들의 투표율을 연도별(2002-2017년)로 살펴보면 [그림 2.4.11]과 같다. 참고로 투표율의 자료가 누락된 연도의 경우 다음 자료가 존재하는 연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지속증가 유형인 한국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2.7%의 투표율에서 최근 2017년 77.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지속감소 유형에 속하는 이탈리아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가감소 유형의 아이슬란드는 2007년 83.6%에서 2009년 85.1%로 약간 투표율이 감소했다가 2010년도에 들어서는 반복적인 증가감소의 추이를 나타낸다. 미국의 투표율은 2008년 63.6%에서 2010년 금융위기 후에 45.5%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최근 2016년 87.3%까지 다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11. 유형별 대표국가의 투표율 추이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Voters Turnout in region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7627>

I 정의 및 측정

즉, 투표 연령 인구(VAP) 중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로 회원국의 행정 기록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VAP는 투표 연령에 속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권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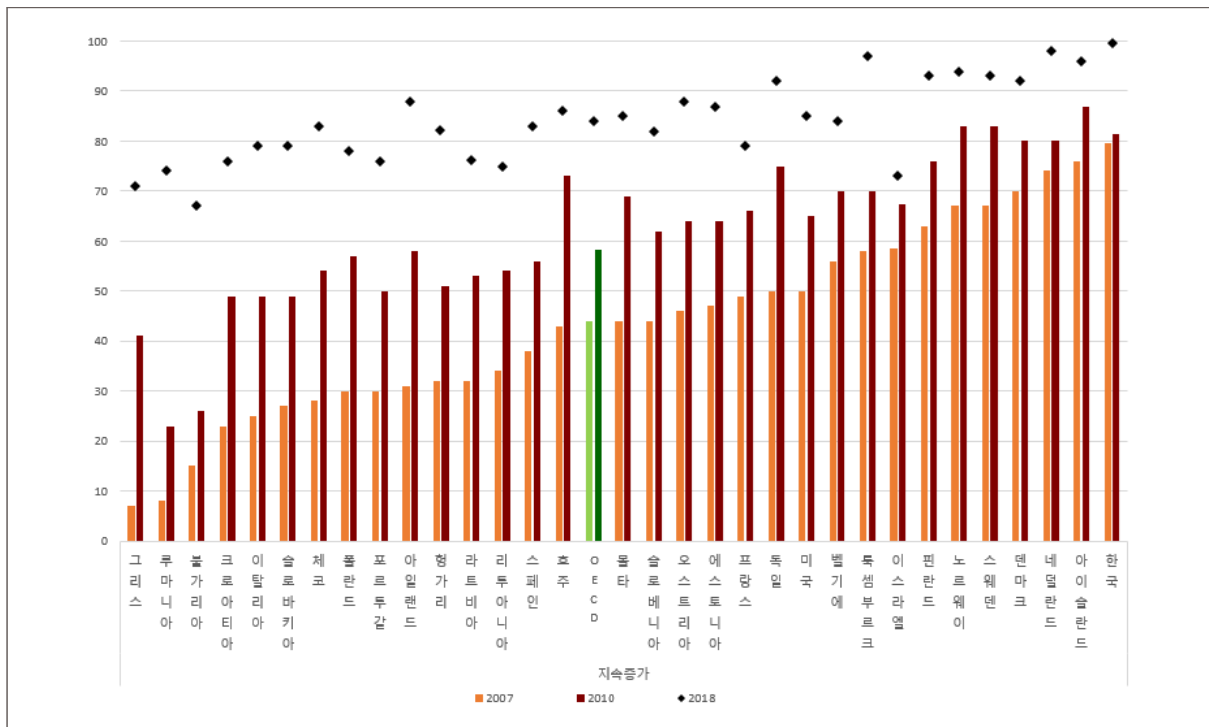
투표율 자료의 국가 간 비교는 법정 투표 연령, 투표 등록 시스템(자동 또는 잠재적 투표자의 조치 요구) 및 투표가 강제적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가마다 제도적 구조 및 지리적 관할지에 따라 선거 유형이 다르다.

4-5. 온라인 활동

다섯 번째 사회통합 지표는 온라인 활동이다. 인터넷 접속률은 해당 국가의 전체 가구 대비 인터넷 광대역 접속이 가능한 가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2.4.12]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와 최근의 OECD 국가들의 인터넷 접속률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시점은 국제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전후 시기(2007-2010년)와 최근의 2018년을 설정하였다. 국가별 인터넷 접속률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점의 자료가 부재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OECD 소속의 32개의 국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인터넷 접속률은 모든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접속률이 각 시점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는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이 돋보였다. 최근 2018년의 인터넷 접속률 기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들은 덴마크(92.0%), 노르웨이(94.0%), 스웨덴(93.0%)의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은 금융위기 이전의 2007년부터 이미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인터넷 접속률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99.5%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1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최근 인터넷 접속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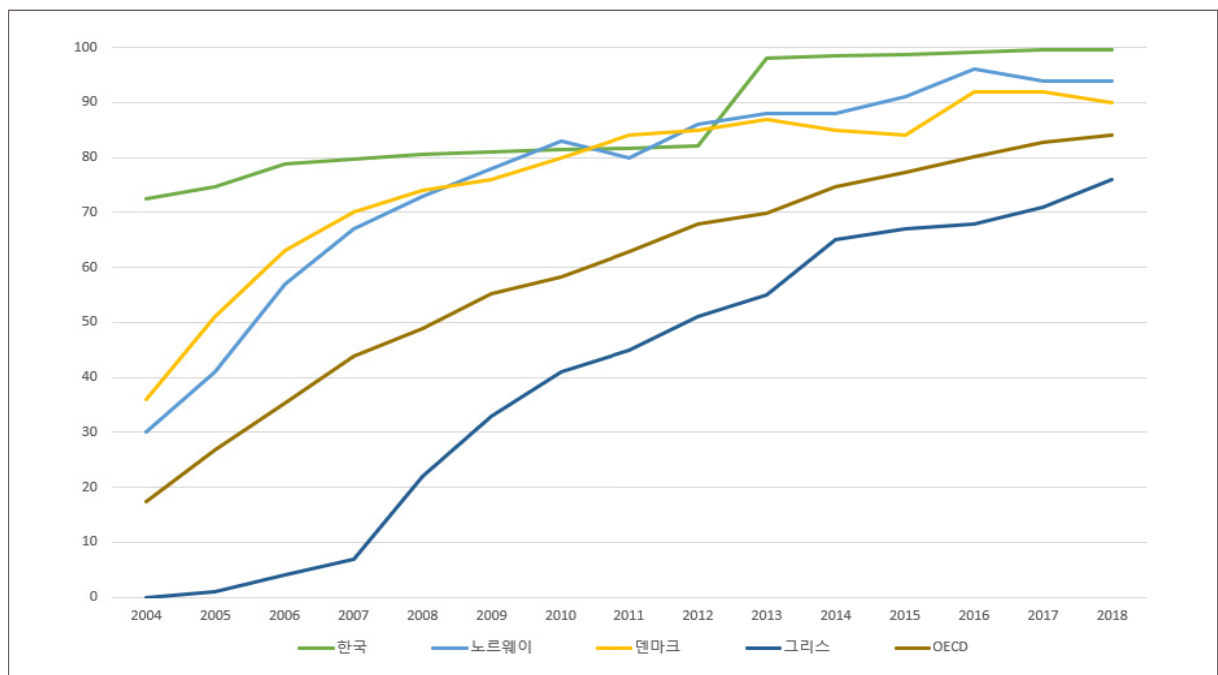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Internet broadband acces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8175>

위 결과를 바탕으로 눈여겨 볼만한 변화 혹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들의 인터넷 접속률을 연도별(2004-2018년)로 살펴보면 [그림 2.4.13]과 같다. 한국은 인터넷 접속률이 2000년대 초반부터 70% 이상으로 타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2년 82%에서 2013년 98%로 큰 상승폭을 한차례 나타냈다. 2017년도부터는 99.5%의 인터넷 접속률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2004년도에 인터넷 접속률이 30%대였으나 금융위기의 영향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부터는 90%를 돌파하였다. 인터넷 접속률의 급성장을 보이는 그리스는 2004년도 시점에 0%로 시작하였으나 2007년의 금융위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2018년 76%까지 도달하였다.

그림 2.4.13. 주요 국가의 인터넷 접속률 추이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Internet broadband access(database), <https://stats.oecd.org/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8175=68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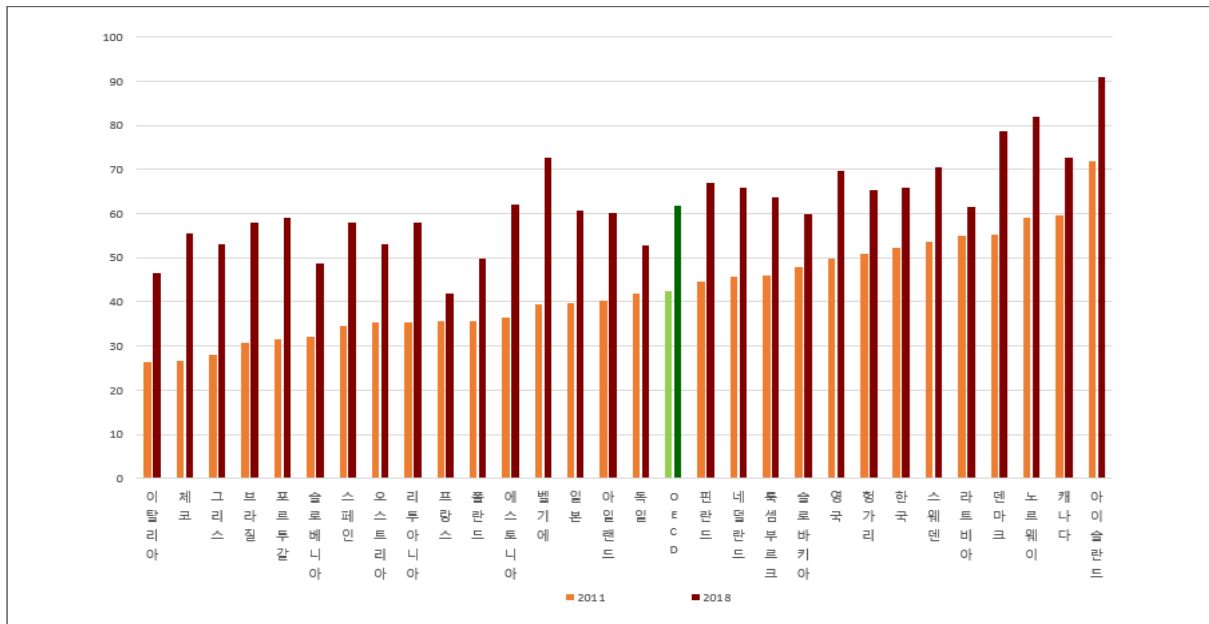
I 정의 및 측정

인터넷 사용 자료는 OECD 가구 및 개인의 ICT 접근 및 이용에 관한 모델 조사(OECD Model Survey on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http://oe.cd/hhind>)의 두 번째 개정 본을 기초로 하여 선택된 지표를 제공하는 가구 및 개인별 ICT 접근 및 이용(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인터넷 사용자는 3개월의 회상 기간 동안 정의된다.

다음으로 SNS(Social Networking Sites) 접속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인종 등의 장벽을 넘어 대표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지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SNS 접속률은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개인이 SNS 접속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용자의 비율이다. 해당 지표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0년대에서야 측정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하기 어려웠고 확보 가능한 2011년과 최근 2018년의 시점으로 비교하였다. [그림 2.4.14]는 확보 가능한 OECD 29개국의 SNS 접속률을 비교한 결과로서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 접속률이 각 시점별 큰 변화 폭을 보이는 국가로는 벨기에와 체코, 그리스, 브라질 등이 있었다. 인터넷 접속률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던 한국은 SNS 접속률에서는 타 국가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인터넷 접속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SNS 접속률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이슬란드는 2011년과 2018년 각 시점에서 OECD에서 가장 높은 SNS 접속률을 나타낸 국가였다.

그림 2.4.14. SNS 접속률 변화(2011년과 201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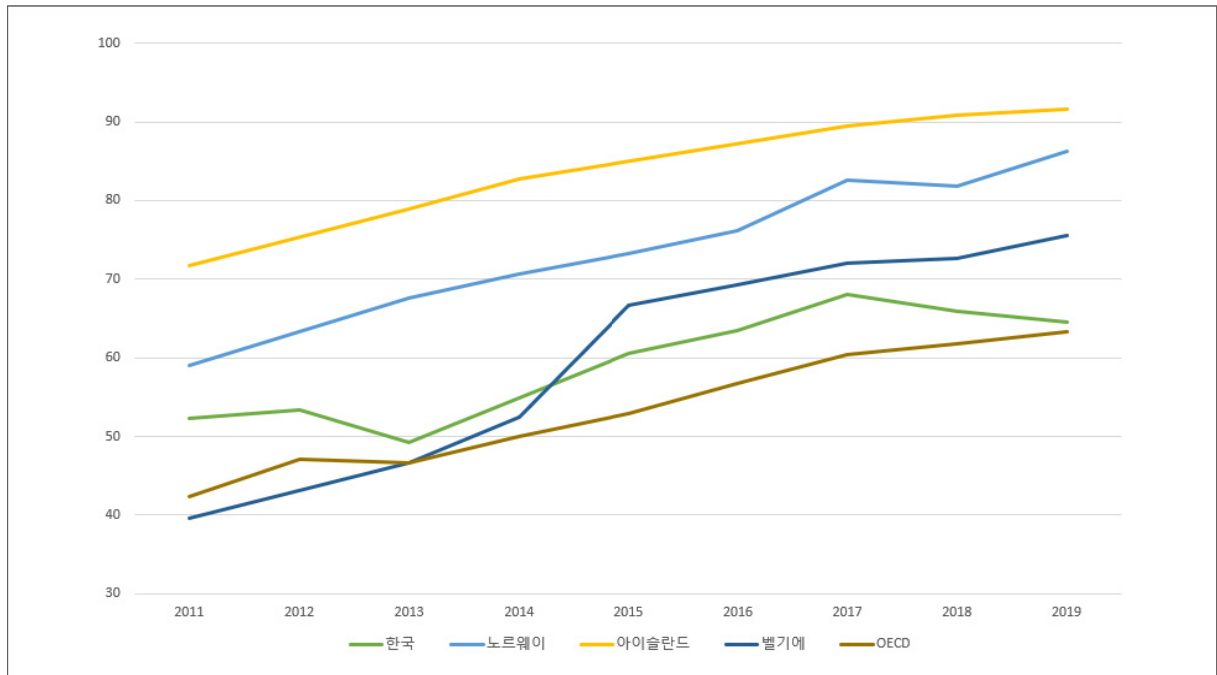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2702>

위 결과를 바탕으로 눈여겨 볼만한 변화 혹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들의 SNS 접속률을 연도별(2011-2019년)로 살펴보면 [그림 2.4.15]와 같다. SNS 접속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는 2011년부터 약 70%의 수치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다 2018년에 90%를 넘겼다.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도 타 OECD 국가보다 높은 60%의 SNS 접속률에서 최근 2019년 86%까지 증가하였다. 한국의 SNS 접속률은 2010년대 초반에 다소 하락했다가 2017년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벨기에는 2011년 약 40%의 SNS 접속률이었으나 가파른 상승세로 현재는 한국을 넘어서 2019년 약 76%에 이르렀다.

그림 2.4.15. 주요 국가의 SNS 접속률 추이



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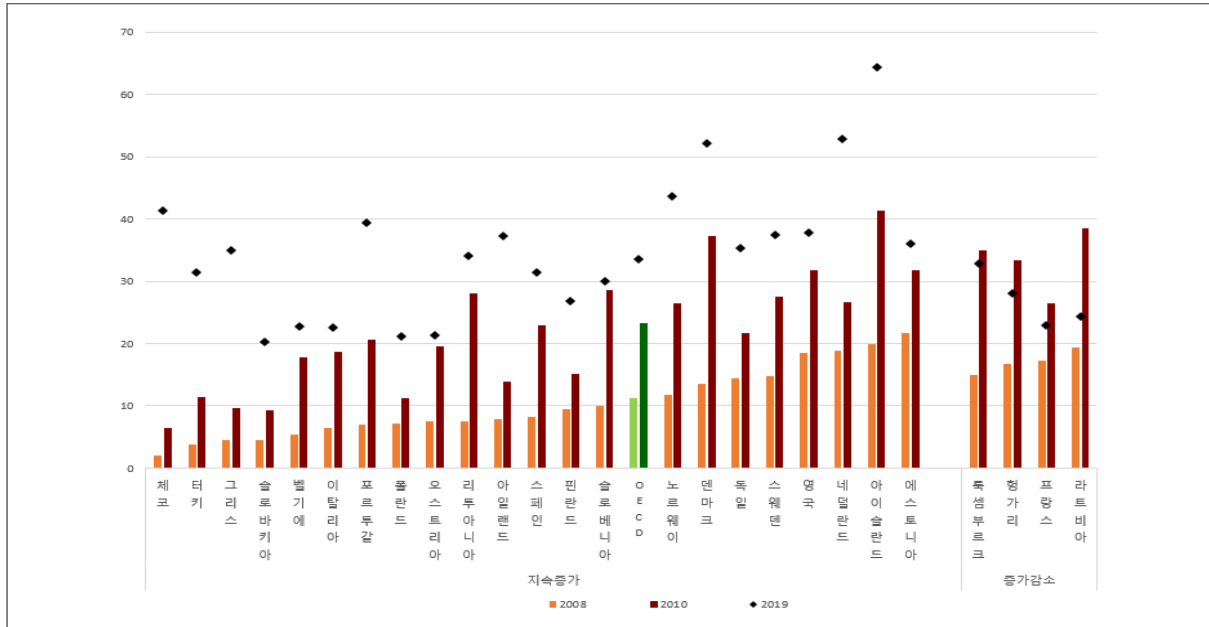
원자료 출처: OECD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2702>

마지막으로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역할에서 온라인에서의 개인은 창작자로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은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개인이 웹사이트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유튜브와 같은 웹사이트에 공유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사용자의 비율이다. [그림 2.4.16]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와 최근의 OECD 국가들의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시점은 국제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전후 시기(2008-2010년)와 최근의 2019년을 설정하였다. 국가별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점의 자료가 부재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OECD 소속의 26개의 국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프랑스, 헝가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에서는 증가감소의 유형을 보였다.

특히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이 각 시점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는 체코, 그리스, 터키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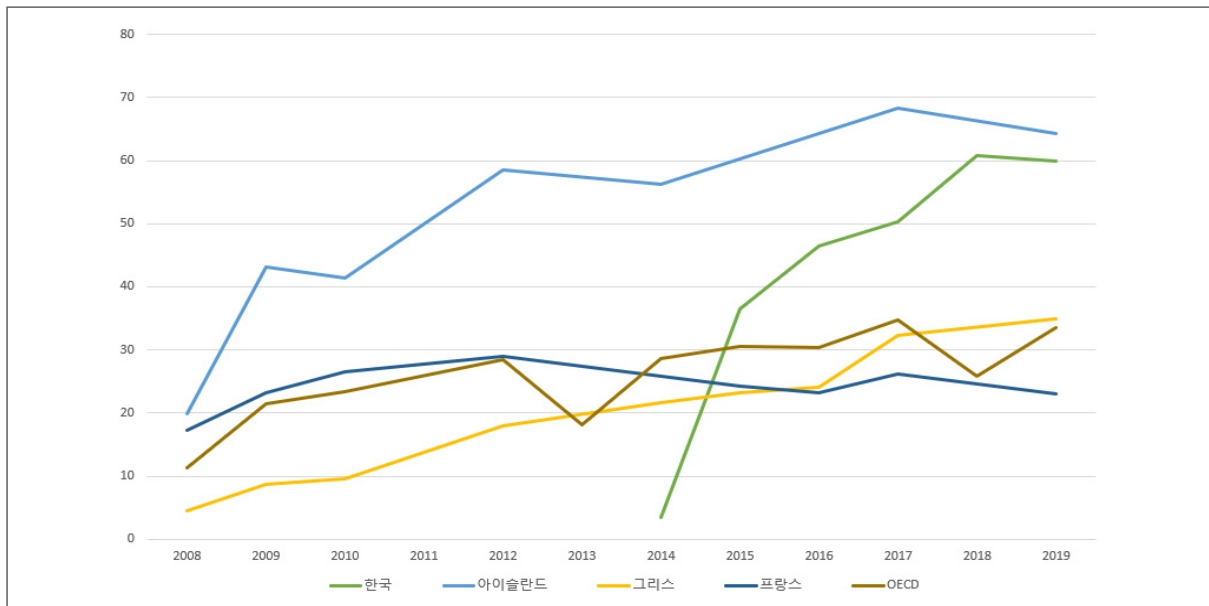
돋보였다. 상위권의 지속증가 유형의 국가로는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와 네덜란드, 아이슬란드도 나타났다.

그림 2.4.16.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 변화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2702>

그림 2.4.17. 유형별 대표국가의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 추이



주) 단위: %
 원자료 출처: OECD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2702>

위 결과를 바탕으로 눈여겨 볼만한 변화 혹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들의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을 연도별(2008-2019년)로 살펴보면 [그림 2.4.17]과 같다.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는 2011년부터 약 20%의 수치에서 2017년 68%에 도달했다가 최근 2019년 약간 감소를 나타냈다. 그리스는 2008년 4.5%로 시작하여 지속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반면, 증가감소 유형에 포함된 프랑스는 2012년까지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이 상승하다 이후 감소와 상승을 반복하였다. 한국은 관련 수치가 2014년 이전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위의 유형별 구분 [그림 2.4.16]에서는 누락되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타 OECD 국가들 보다 뒤늦게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활동이 시작되었으나 급상승세를 나타내며 2018년에는 60%에 도달하였다.

4-6. 소결

이 절에서는 사회적 지지, 정부에 대한 신뢰, 성별 임금 격차, 투표,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사회통합 지표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세계금융위기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한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OECD 평균 89.9%로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은 평균 77.7%에 그쳐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 OECD 가입국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은 소폭 하락한 뒤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다시금 증가하는 모습을 띄기는 하나, 여전히 모든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는 OECD 전체에서 평균 41.3%의 수준을 나타내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평균 28.9%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12.4%p 낮았으며, 라트비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 이어 하위 일곱 번째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귀하가 속한 국가 정부에 대해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말한다.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OECD 가입국들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은 하락하였다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면에 한국은 소폭으로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 금융위기 시점의 감소 현상을

드러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그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셋째,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한 사회의 젠더 불평등의 현실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성별 임금 격차’는 남녀 각각의 임금 중간 값의 차이를 남성의 임금 중간 값으로 나눈 수치(%)를 뜻한다. OECD 가입국들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은 평균 15.5%를 나타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37.3%를 보여 OECD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OECD 가입국들의 ‘성별 임금 격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으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즉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은 ‘성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남녀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는 추세에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이 감소세에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OECD 주요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OECD에서 해당 지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한국은 1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한국의 인터넷 접속률은 지난 약 20년간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99.5%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사실상 소수의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구축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가와 연관된다. SNS를 활용하여 물리적, 심리적 장애물을 뛰어넘어 소통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자에서 창작자로 변모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1위이나 활용도에 있어서는 평균이하를 보이고 있다(권혁민, 2020). 본 연구에서도 한국은 SNS 활용과 개인 미디어 콘텐츠 공유 등의 활동이 타 국가보다 늦었으며 성장추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위권의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갑수(2020)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ICT 접근성에서는 OECD 평균 이상이었지만 학업에서의 활용에 서는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ICT 기술 활용도를 높이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ICT 전문가 양성 독려 및 활용영역의 확대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장

한국의 사회지표별 분석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 OECD에서는 사회지표를 크게 일반 지표, 자활 지표, 형평성 지표, 보건 지표, 사회통합 지표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 지표를 제외한 4개 사회지표 영역을 중심으로 OECD 가입국 및 각 국가별 시계열 추이를 종단 분석하였다. 사회지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정책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주요 지표들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열위에 있는 세부지표는 ‘출생률과 인구성장률’, ‘고용’, ‘노인빈곤’, ‘사회적지지’ 등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OECD 국가들의 지표변화 추이와 함께 한국의 지표변화 추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회개발 성장을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1. 일반 지표

1-1. 지표 변화 추이

일반 지표 중 인구 관련은 출생률, 이민, 가족, 인구 추이, 노인부양비가 포함된다.

첫째, OECD 52개 국가의 평균 출생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증가했으나 그 후 감소 추이를 보였다. OECD 평균 출생률은 2000년 대비 2007년에 약 2%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출생률은 지속해서 감소해, 2007년 대비 2018년 출생률은 약 5% 감소하였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초산연령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한국은 1995년 26.5세에서 2017년 31.6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 첫 출산하는 국가이다. 일본과 남유럽 국가들도 출산연령 지연이 두드러진 국가에 속한다.

둘째, OECD 30개 국가의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출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전체 출생자의 14.7%는 외국인출생자들이다. 특히 룩셈부르크(48%)와 스위스(30%)는 이민자 비중이 지난 10년간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와 최근(2018년) 이민자 비율이 제일 낮은 국가이고 칠레, 슬로바키아, 헝가리, 핀란드 등이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셋째,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35개국 OECD 전역에서 혼인율과 이혼율이 평균적으로 감소하였다. 혼인율은 2007년 5.3건에서 2017년 4.8건으로,

이혼율은 2007년 2.2건에서 1.9건으로 감소했다. 결혼 감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로 2007~2018년 사이에 약 2%가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한국은 약 1.8%의 혼인율이 감소하였다.

넷째, OECD 37개 국가의 인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지속감소’ 유형 국가인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2008년(0.76%), 2011년(0.77%)에 가장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2018년에는 0.37%까지 감소하였다.

다섯째, OECD의 평균 노년부양비는 2005년 0.2%에서 2018년 0.26%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5년 기준 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노년부양비를 나타냈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유일한 ‘감소증가’ 유형국가인 룩셈부르크는 2007년 0.207%에서 금융위기 이후 2010년 0.203%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최근 2018년 0.206%로 상승하였다.

1-2. 한국의 지표 변화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출생률이 1.7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자 정부는 1996년에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출생률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 처음으로 출생률이 1.5 미만인 1.45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에는 1.3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출생률은 더욱 낮아져 2005년 1.076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소 불규칙하게나마 출생률이 증가하여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3미만이 지속되어 이른바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한국의 인구 감소현상은 심각하다. 2018년 합계 출생률은 1.0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서 합계 출생률이 1.0 이하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80년 후인 2100년에는 2천만 명 이하로 예상된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출생률 급감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결혼연령의 연기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2005년 5월 18일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이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5년간(2006~2010년) 42조2000억 원, 제2차 5년(2011~2015년) 동안에는 투입 규모(109조9000억 원)를 두 배 이상 증가시켰다. 이후 3년 동안 116조80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13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68조9000억 원을 투자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저출산에 대한 기본 관점을 노동력·생산력에 초점을 둔 국가 발전 전략에서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과 개별 사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영아 수당' 도입,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 신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일자리 지원 등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여러 대책이 제시됐으나 단편적인 정책에 가깝다.

한국은 혼인은 줄고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혼인과 이혼은 가구의 구성뿐만 아니라 출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혼외 출산은 2% 이하로 출산의 절대 다수는 혼인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출산이란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은 깊게 연관되어 있고, 결국 혼인 기피 현상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그 후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서 2020년에는 이미 15%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이어서 2025년에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0%)에 도달한 후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져서 2050년에는 인구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인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67년 45%로 감소하고, 유소년인구(0-14세)도 향후 50년 후에는 8%까지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67년에는 47%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한국은 일본과 함께 '세계 제1의 초(超)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전국 3482개의 읍·면·동 중에서 40%가 소멸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전광희, 2020). 20~64세 성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인 상대적 노인인구 비율은 2014년 현재 20%로 OECD 평균 28%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대로 갈 경우 2060년 한국의 상대적 노인인구 비율은 79%에 달해 일본과 함께 OECD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15~29세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0%에서 2060년 13%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가장 청년층이 희박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한국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크게 왜곡되어 젊은 연령층이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과잉상태로 되면서 사회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힘들어 질 것이다. 인구정책은 일차적으로 인구증감이나 인구분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의미하지만 인구정책의 파급효과는 여성·조세·노동·주택·교육·연금·지역 정책과도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 현상이 노후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우해봉·장인수, 2017). 최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보면 노인부양비는 2017년에는 18.8명에 그쳤지만 2027년 33.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2067년에는 102.4명으로 5.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3.1. 한국의 일반지표 변화 추이

세부 지표	지표 (단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출생률	합계출생률 (명)	1.3 (1.7)	1.2 (1.8)	1.1 (1.7)	1.2 (1.7)	1.2 (1.7)	1.3 (1.7)	1.2 (1.7)	1.2 (1.7)	1.2 (1.7)	1.2 (1.7)	1.1 (1.7)	1.0 (1.6)
	이민	외국 출생자 비율 (%)	-	-	-	-	-	-	-	-	-	-	(13.0)
가족	혼인율 (천 명당 건)	7.0 (5.3)	6.6 (5.2)	6.2 (4.9)	6.5 (4.9)	6.6 (4.7)	6.5 (4.8)	6.4 (4.7)	6.0 (4.8)	5.9 (4.9)	5.5 (4.8)	5.2 (4.8)	-
	이혼율 (천 명당 건)	2.5 (2.2)	2.4 (2.1)	2.5 (2.0)	2.3 (2.1)	2.3 (2.1)	2.3 (2.1)	2.3 (2.1)	2.3 (2.1)	2.1 (2.0)	2.1 (2.0)	2.1 (1.9)	-
인구 추이	인구성장률 (%)	0.5 (0.8)	0.8 (0.8)	0.5 (0.7)	0.5 (0.7)	0.8 (0.5)	0.5 (0.6)	0.5 (0.6)	0.6 (0.6)	0.5 (0.6)	0.5 (0.6)	0.4 (0.6)	0.4 (0.6)
	노년부양비 (%)	0.1 (0.2)	0.1 (0.2)	0.1 (0.2)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	0.2 (0.3)	0.2 (0.3)

주 1) OECD의 원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은 '-'로 표기
 주 2) 괄호 안은 OECD 평균값임
 원자료 출처: OECD Stats, <https://stats.oecd.org/>

1-3. 향후 과제

코로나19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표출됐고 급기야 이는 저출산에도 직격탄이 되었다. 우선 비혼 현상이 심화되었다. 취업난으로 결혼식은 미루어지고 결혼에 대한 당위성도 낮아지는 등 부정적인 결혼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한 젊은 부부들도 육아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는 우리나라가 사상 초유의 최저 합계출생률을 기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19년 0.92로 지켜오던 출생률 0.9의 벽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3월에 0.8 이하로 떨어져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를 초래했다.

코로나19는 조만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통해 종식될 수 있는 일시적인 유행성 감염병이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문제이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20~30대 젊은 층 감소, 결혼포기 풍조 등을 들고 있다. 주요인은 교육 및 주택비 부담,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다(통계청, 2020).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청년층에서는 자발, 비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 이렇듯 탈가족과 더불어

탈노동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삶의 질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부가 계획한 출산을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마련하여 한 줄 세우기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같이 인구정책이 국가·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향후 세대별 다양한 삶의 형태를 노동, 여가, 교육, 돌봄 등 요소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난 15년간 세 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의 고질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1960년대 초부터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승자의 저주’가 되어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하고 있다.

향후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은 첫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기초연금 확대 등을 더욱 강화하여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분야에 정부 저출산 대책의 역점을 두었으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시대를 맞아 학교교육은 물론 시민 대상 사회교육에 가족의 중요성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저출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서상목, 2020). 셋째, 가족에 관한 새로운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가족을 고려한다면 혼인 기회가 만연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 자활 지표

2-1. 지표 변화 추이

자활 지표 중 고용 관련 세부지표에는 고용, 실업, 교육비,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 근속기간이 포함된다.

첫째,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전반적인 고용률은 감소하였다. OECD 38개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2007년 66.2%에서 2010년 64.4%로 감소하다가 2018년 68.3%로 회복하였다. 한국은 2002년 63.4%, 2009년 63.0%, 2010년 63.4%에서 2018년 66.6%까지 회복하였으나 전체적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75%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고용률 수준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51.0%에서 57.2%로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의 전반적인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OECD 평균 실업률은 2007년 5.8%에서 2010년 8.4%로 증가했다가 2018년 5.5%로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산인구의 실업률이 5~8%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12~17%의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01~2018년 사이 2001년 10.2%에서 2018년 10.5%로 미미한 수준에서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반면 그리스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0% 수준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다가 2018년 기준 39.9% 수준까지 하락했다.

셋째, 27개국 OECD 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는 2005년 6,200달러, 2010년 8,268달러, 2015년 9,214달러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한국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교육비 지출이 상승하여 2010년 9,123달러, 2018년 11,688달러로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2005~2015년까지 10년간 교육비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은 2009년 이후부터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2010년 이후부터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넷째, 연도별 OECD 주요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관련 공공지출 변화 추이는 31개 OECD 국가의 평균 지출 비율이 2007년 1.11%에서 2010년 1.55%로 소폭 상승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다시 감소하는 ‘증가감소’의 특성을 보였다.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관련 공공지출 규모가 많은

아일랜드는 OECD 평균과 유사하지만 가파르게 증감한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실업률 증가로 노동시장정책 관련 공공지출 비율 역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26개 OECD 국가의 노동시장의 이동성 수준을 보여주는 근속기간(job tenure)은 평균적으로 2007년 9.59년, 2010년 9.89년, 2018년 10.15년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중에서 가장 근속기간이 긴 국가로는 이탈리아(2005년 11.57년, 2007년 12.06년, 2018년 13.16년)와 그리스(2007년 12.21년, 2010년 12.50년, 2018년 13.05년) 등 남부 유럽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기준 에스토니아(7.96년), 라트비아(8.32년), 리투아니아(7.02년) 등 동유럽 국가의 근속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노동 시장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한국의 지표 변화

세계 금융위기 직후부터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한국은 유럽이나 영미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보다 취업하고 있지 않은 청년의 비율, 즉 유희율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실업률이 취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높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많은 경우 실업률은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은 2020년 기준 10.7%로 치솟아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통계청, 2020).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7%로 1999년 6월(11.3%)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정식 일자리를 처음 구하는 시기인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33만8000명)이 유일했다. 15~29세 청년층(△17만 명), 30대(△19만5000명), 40대(△18만 명), 50대(△14만6000명) 등 나머지 연령층에서 모두 일자리가 감소했다(통계청, 2020).

60대 이상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영향이 크며, 청년 고용 사정이 나쁜 이유는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한국 청년의 18.4%는 취직을 하지 않거나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족인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기준). 독일(9.3%)·일본(9.8%) 등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니트족 비율은 이들의 약 2배다. 한편, OECD 36개 회원국 중 터키(27.2%)·이탈리아(25.2%)·그리스(22.4%)·멕시코(21.3%) 등 경제위기를

겪거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률은 2017년 기준 66.6%로 OECD 평균(67.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고용시장은 15~29세 청년층과 30~49세의 여성 고용률이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경제 내 일자리 창출력 저하, 질 좋은 일자리 부족,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적절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표 3.2. 한국의 사회지표 변화 추이

세부 지표	지표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용	고용률 (%)	64.1 (66.2)	64.0 (66.1)	63.0 (64.5)	63.4 (64.4)	63.9 (64.8)	64.3 (65.0)	64.6 (65.2)	65.6 (65.7)	65.9 (66.3)	66.1 (67.0)	66.6 (67.7)	66.6 (68.3)
실업	실업률 (%)	3.3 (5.8)	3.2 (6.1)	3.6 (8.2)	3.7 (8.4)	3.4 (8.0)	3.2 (8.0)	3.1 (7.9)	3.5 (7.4)	3.6 (6.9)	3.7 (6.4)	3.7 (5.9)	3.8 (5.5)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 비율 (%)	0.4 (1.1)	0.5 (1.1)	0.8 (1.6)	0.6 (1.6)	0.5 (1.4)	0.6 (1.4)	0.7 (1.4)	0.7 (1.4)	0.7 (1.3)	0.7 (1.3)	0.6 (1.2)	-
근속기간	근속기간 (년)	5.9	6.2	6.6	6.4	6.6	6.8	7.1	7.2	7.3	7.4	7.6	7.8 (10.2)

주 1) OECD의 원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은 '-'로 표기

주 2) 괄호 안은 OECD 평균값임

원자료 출처: OECD Stats, <https://stats.oecd.org/>

2-3. 향후 과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잠재되어 있던 취약구조를 밖으로 드러내면서 고용불안과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취약구조에는 협소한 임금섹터(넓은 자영업섹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 그리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 조기강제퇴직제도 등이 포함된다(방하남, 2009).

우리 사회는 기술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저성장 지속으로 인한 경기 불안 요소, 국내외 정치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부문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직도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항공·여행·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요 경제기관들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실업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으로는 먼저 노동수요와 공급이 모두 둔화되어 실직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제 조치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었는데 직종과 산업에 따라 상이한 재택근무 가능비율은 새로운 사회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이 고용 불확실성을 인식하게 되어 향후 생산과정에서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노동시장에서 실직의 장기화, 재택근무와 생산성, 자동화와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 등의 이슈를 제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재택근무제는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 직장유지율(retention rate) 증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과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로 인해 반복적 업무(routine task)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된다면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혜진, 2020).

앞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70% 이상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육성,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과 같은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현금제공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 전체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근로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간 부문에서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업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고용정책은 시계열적 실업률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대응보다는 열악한 고용구조를 개선하려는 장기적 투자와 노력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고용 중심의 성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형평성 지표

3-1. 지표 변화 추이

형평성 지표에는 불평등, 빈곤, 비경제활동 급여, 실업급여, 사회지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재정적 자원의 측면에 국한하여 불평등, 빈곤, 비경제활동 급여, 실업급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모든 OECD 국가는 자원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비상사태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사회지출 지표로 요약된다. 한국과 OECD 평균을 중심으로 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은 지니계수, 빈곤은 중위소득 50% 빈곤선을 활용한 상대빈곤율로 측정하였다.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특히 2008-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느린 속도로 높아져 가장 최근인 2017년 각각 0.31, 12%이다. 한국의 경우가 OECD와 반대인데, 2011년 이후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은 점차 낮아져 2017년 0.36, 17%이다.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값보다 크게 높으며, 특히 66세 이상 연령층의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은 여타 연령대에 비하여 특히 높아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비경제활동(실업) 시기 동안 유지되는 근로 순소득의 비율, 즉 순대체율의 변화도 OECD와 한국은 다른 추이를 보인다. OECD 평균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9년 60%이다. 여기서 제시된 값은 자녀가 없는 독신가구에서 실업의 초기 단계에서 유지되는 소득의 비율인데, OECD 국가 평균적으로 해당 가구가 실업하더라도 이전 근로 순소득의 60%가 유지된다. 한국은 이 순대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크게 상승하여 가장 최근에는 OECD 평균에 근접했다. 다만, 가구유형을 달리 하여 살펴봤을 때 자녀가 있는 독신가구의 순대체율이 최근 감소하여 다양한 가구형태에 대한 실업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독일과 벨기에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금융위기의 타격이 컸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였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성별 간 실업급여 현황에서 최근 여성 수급자가 더 많아진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은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경제 대침체 기간 동안 공공 사회지출은 OECD 평균 GDP의 22%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위기로 인한 타격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사회보호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9년 이후 지출액은 조금씩 감소해왔다. 한국은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2001년 이후 꾸준한 지속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11.1%로 현금과 현물급여 모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3-2. 한국의 지표 변화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는 빈곤인구를 양산하고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빈곤관련 지표들은 1999년에 최악의 수준에 도달한 후 개선되다가, 2003년부터 다시 악화되어 2009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6년 기준으로 0.355로서, OECD 평균은 0.310이다.

한국은 실업급여와 복지급여 등 실직자의 생계보호 기능은 취약하다. 40살 독신 기준 실업 초기 단계(1개월째)의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으로 OECD 평균(58%)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장기 소득대체율(60개월째)은 16%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수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지급하는 주거 및 생계급여 등을 합산한 수치인데 이들 급여 수준은 빈곤선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한국의 소득 격차 수준은 최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김낙년, 2012). 이에 더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자산 정도와 학력 수준에 따른 사회계급화(meritocracy) 현상마저 나타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균형 문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GDP에서 공공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6개 회원국의 사회지출 비중은 평균 21%인데 반해, 한국은 10.4%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지출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될 것을 예상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현 정책과 지원이 유지된다면 총 공공사회지출은 2050년까지 OECD 평균인 22%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했다(고경환, 2018).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해마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43.4%로, 2017년(44%)보다 0.6%p 감소하였다.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도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2019년 0.406으로, 2018년의 0.419보다 감소했다.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노인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빈곤 및 불평등 증가요인은 다양하다. 생산기술의 발전,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 인구고령화 등의 거시적인 요인과 건강의 악화, 낮은 교육수준, 빈곤문화 등의 미시적인 다양한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김미곤, 2014).

표 3.3. 한국의 형평성지표 변화 추이

세부 지표	지표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불평등	지니계수	-	-	-	-	0.388 (0.309)	0.385 (0.312)	0.372 (0.311)	0.363 (0.314)	0.352 (0.314)	0.355 (0.310)	0.354 (0.310)	-
빈곤	상대 빈곤율(%)	-	-	-	-	18.6 (10.9)	18.3 (11.3)	18.4 (11.0)	18.2 (11.4)	17.5 (11.7)	17.6 (11.5)	17.4 (11.7)	-
비경제활동 급여	실업 시 유지되는 근로 순수소득 비율 (%)	51 (57)	49 (57)	47 (58)	44 (57)	45 (57)	43 (56)	41 (57)	40 (57)	42 (57)	41 (58)	46 (57)	53 (58)
실업 급여	생산연령 인구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0.7 (2.3)	0.8 (2.4)	1.1 (3.7)	1.0 (3.8)	0.9 (3.4)	0.9 (3.4)	0.9 (3.6)	1.0 (3.4)	1.0 (3.3)	1.0 (3.2)	-	-
사회 지출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액 비율(%)	7.1 (17.7)	7.6 (18.5)	8.4 (20.7)	8.2 (20.6)	8.1 (20.2)	8.7 (20.3)	9.3 (20.4)	9.7 (20.3)	10.2 (19.0)	10.5 (20.5)	10.6 (20.2)	11.1 (20.1)

주 1) OECD의 원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은 '-'로 표기

주 2) 괄호 안은 OECD 평균값임

원자료 출처: OECD Stats, <https://stats.oecd.org/>

2008-09 글로벌 금융위기가 사회위기를 촉발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공중보건 위기가 사회위기로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국사회를 형평성 지표 중심으로 거칠게나마 전망하자면, 첫째, 빈곤과 불평등을 보여주는 수치들은 최근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빈곤과 불평등의 악화는 이미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UN, 2020; World Bank, 2020).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읽힌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하위 20%의 근로·사업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8.0%, 15.9% 감소했다. 나머지 80%와 비교해 하락폭이 가장 크다. 하위 20% 중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코로나19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국민일보, 2020. 10. 6).⁴⁾

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79359&code=61141111>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위축이 지속되면서 삶의 질의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장기화된 학교 폐쇄의 결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구인회, 2020). 성별 불평등의 문제는 더 큰 관심을 요구한다. 고용률과 취업자 감소폭은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코로나19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정아, 2020; 전기택, 2020).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중에서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월별 고용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9월 실업급여 신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여성은 5만 명이 넘으며, 남성보다 약 3천 명 더 많다(한국고용정보원, 2020).

둘째,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미 통계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고용노동부, 2020; 통계청, 2020), 이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의 실업률이 비교적 크게 높아지긴 하였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그 정도가 작았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은 몇 차례 위기 때마다 주로 개인 수준에서 실업에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실업과 조기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4-50대 화이트칼라들이 일종의 실업대책으로 자영업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자영업자가 증가한 바 있다. 정부 또한 마땅한 소득보장 수단이나 고용보장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영업을 일종의 실업대책이나 노후대책으로 적극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다(김도균, 2015; 2018).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상황이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 중인 자영업자의 증가는(경향신문, 2020. 9. 8)⁵⁾ 개인 수준에서의 실업대책마저 이번 위기 시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한다.

셋째,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이 더 빠르게 커질 것이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지출은 현금과 현물급여 모두에서 증가하였지만, 현금급여의 증가폭이 더 크다.⁶⁾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들에서 현물급여의 증가폭이 더 큰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보건의료 지출의 확대에 이어지면서 현물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업 지출은 0.3%대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역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지출의 하위 분야 대부분에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빈곤과 불평등 악화의 우려 속에서 다행인 점은 한국은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에 대해 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빈곤 완화(더 정확히는, 빈곤 악화의 완화) 효과를 기대해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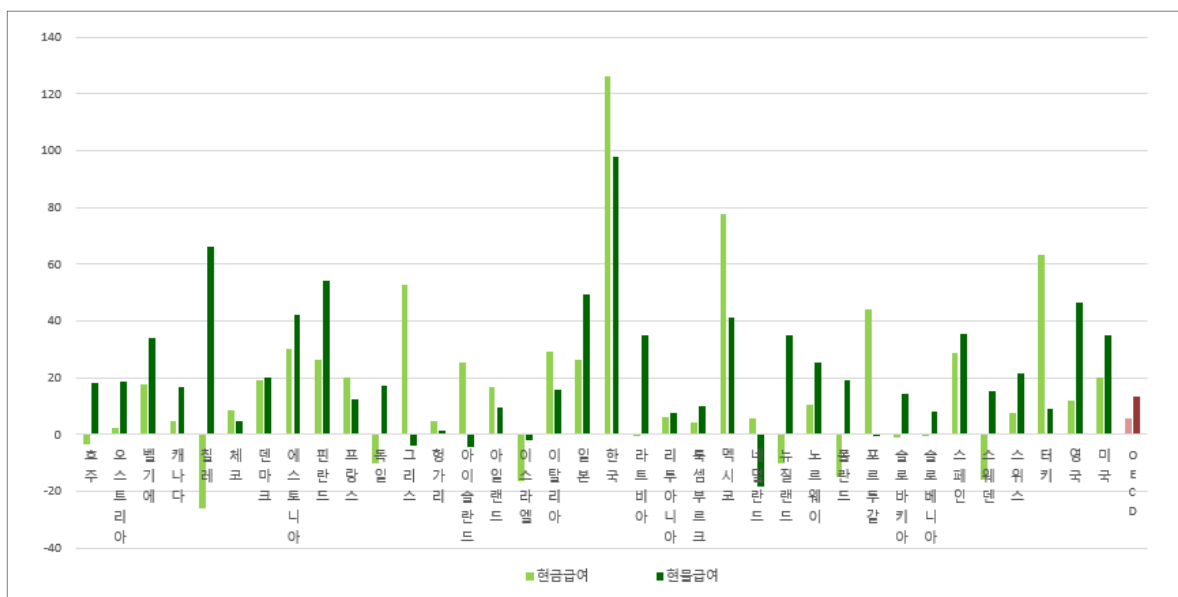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082051015

6) 아래 그림은 2001년 대비 2015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증가폭이다.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막대그래프가 한국이다. 현금급여 증가는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자격조건 완화, 급여수준 확대 등의 모수적 개혁보다는 구조적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는 소득보장체계에 혁신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담론 조성에 일부 기여하였다. 전국민고용보험 또는 기본소득 등 주로 단일 제도에 대한 담론이 제시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보장 체계(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체계)의 전반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홍경준(2020)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둘째,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2.3.9]의 가족유형별 순대체율 변화 그래프에서 나타났듯이 자녀가 있는 독신 가족유형의 순대체율은 다른 가족유형과는 달리 최근 들어 감소하였다.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가계 소득과 자녀 돌봄 및 교육을 홀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더 필요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업 시 유지되는 소득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한부모가정의 가구주가 대부분 여성인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의 노동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봉쇄에 따른 가족 내 교육·보육 부담이 증가한 점을 상기한다면 유자녀 독신가정 생계 현황과 지원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자산조사를 거쳐 매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라도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과 돌봄 부담 완화와 나아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빈곤과 불평등은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한데서 기인한다(구인회, 2020). 사회지출 수준이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제일 잘 보여주는 대리변수는 아니지만 다수 연구들에서 프록시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OECD 자료를 활용한 단순상관분석에서도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지출 수준과 강한 부적관계를



7) 전국민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원화(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일원화, 사회적 진출권에 기초한 보편적 사회계좌, 참여소득제 등 다섯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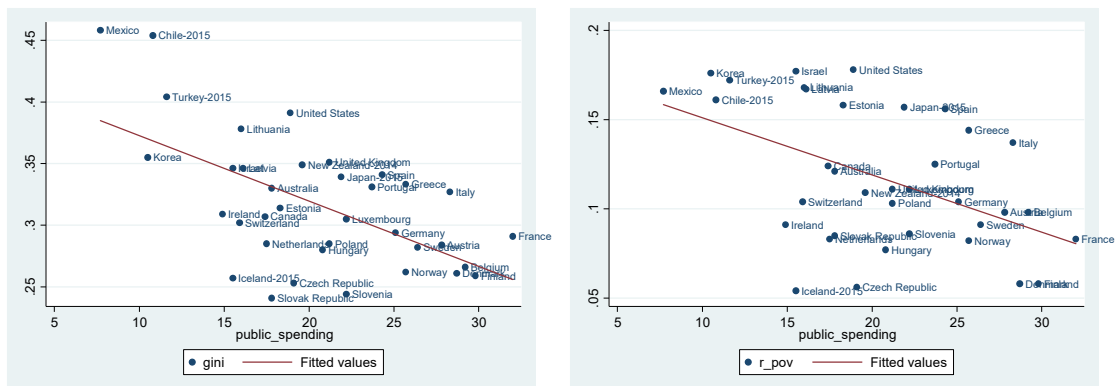
가진다.⁸⁾ 한국의 사회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출 수준이 낮고, 반대로 빈곤과 불평등은 감소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강력한 사회지출 확대를 실시하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지출 확대가 경기 회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임완섭, 김현경, 김인춘, Papadopoulos, 박형준, 2016)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넷째, 포스트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신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일부 또는 전면 봉쇄에 따른 신신사회위험 대응도 필요해졌다. 기존 신사회위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지 않았던 보건 위기와 감염 확산방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에 따라 서비스 분야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도 출현, 확장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보호 역시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급선무이다. 신신사회위험을 예측하고 새로운, 그리고 혁신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OECD는 ‘한 눈에 보는 사회 2014’ 보고서를 내면서 ‘위기와 그 영향’을 특집 테마로 다루었다(OECD, 2014). 보고서는 말미에 정부는 다음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는데, 채 10년이 지나기 전에 금융위기보다 더 강력한 위기가 닥쳤다. 이번 팬데믹 위기 상황은 한국이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대응도 잘 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많은 수의 국가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매해의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교한 예측보다는 거시적 전망과 그에 기반하여 대응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8) 2016년 OECD 36개 가입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과 지니계수 간 상관계수는 $-0.5879(p < .001)$, 상대빈곤율 간 상관계수는 $-0.4876(p < .01)$ 이다(아래 그림 참조). 칠레, 아이슬란드, 일본, 터키는 2015년, 뉴질랜드는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3-3. 향후 과제

한국의 빈곤 및 불평등 향후 전망, 특히 단기 전망은 개선될 여지 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9년 월킨슨과 피켓(Wilkinson & Pikett, 2009)은 불평등의 증가가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사회이동을 저하시키는 기제임을 밝히고, 소득불평등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문제 감소와 희망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지난 20여년의 소득불평등 추이로부터의 정책적 함의는 세계화와 기술변화라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경제 내 생산성 차이를 줄이는 동시에 수준을 높이고, 개인의 적응력을 높일 것인지, 고령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로 요약된다(윤희숙, 2017). 이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제도교육 정상화, 직업훈련 강화, 노후소득보장과 노인경제활동 지원, 최저임금제도, 고용지원, EITC 등의 근로연계소득보조정책, 실업소득 보장강화 등 광범위한 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되는 이슈이다. 정책영역에 따라 정책방향과 구체적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사후적 소득재분배에 그치기보다 개인과 기업의 역량축적을 지원해 적응능력을 높이는 방향의 사전적 재분배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추세이다(Esping-Andersen and Myles, 2009).

한국 정부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미흡한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연금급여의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노인 소득보장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다. 노인빈곤을 줄이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소득보장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일을 할 수 있는 고령층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에도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점과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에서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고령층의 숙련된 기술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노인세대의 지속적 일자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김태완, 2019).

인구문제 또한 향후 빈곤 및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50년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노인인구 비율 증가는 시장소득기준 빈곤 및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고, 더욱이 국가의 역할이 미약하면 가처분 소득기준 빈곤 및 불평등조차도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개인과 시스템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조정이 교착되거나 그나마 진행되는 변화들의 부정적 영향이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과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 정책적 개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4. 사회통합 지표

4-1. 지표 변화 추이

사회통합 지표에는 사회적 지지, 정부에 대한 신뢰, 성별 임금 격차, 투표, 온라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36개국 OECD 평균 89.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한국은 77.7%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터키 79.2%, 그리스 80.2% 등이 하위에 위치하였다.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는 35개국 OECD 평균이 41.3%의 수준이었으며, 한국의 평균은 28.9%로 라트비아, 그리스 등에 이어 하위 일곱 번째에 위치하였다.

셋째, ‘성별 임금 격차’는 23개국 OECD 평균이 15.5%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2005년 17.4%에서 2010년 15.6%로 소폭 하향하여,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 임금 격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의 평균은 37.3%로 OECD 국가 중 남녀 간 가장 높은 임금 격차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28.3%, 이스라엘 21.7%, 캐나다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33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2.7%의 투표율에서 최근 2017년 77.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탈리아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감소하였고, 아이슬란드는 2007년 83.6%에서 2009년 85.1%로 감소했다가 2010년부터 반복적인 증가감소 추이를 나타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최근 2016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온라인 활동’ 관련, 한국의 인터넷 접속률은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2018년에는 99.5%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1위이나 활용도에 있어서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4-2. 한국의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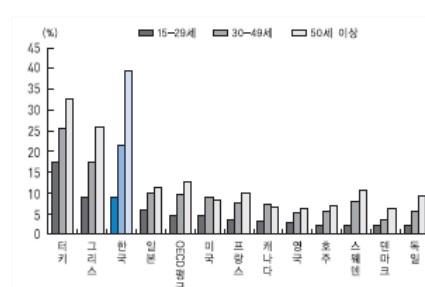
한국은 사회적 지지, 정부에 대한 신뢰, 성별임금격차 지표에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척 혹은 친구들이 있는가”로 사회관계의 통합성 측면을 평가하는데, 한국은 사회관계망 형성이 미약하여 사회적지지 수준이 매우 낮아 불안이 높은 사회이다. 한국은 모든 연령에서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청년층은 7번째로 낮았고 30~49살 중장년층도 3번째로 낮았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불과 6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들의 사회관계망 수준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불안감과 고립감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소외와 고립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사회적 신뢰의 하락, 사회적 참여의 위축과 함께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자본의 위기를 나타내는 증상으로 많이 언급된다. 지난 10년간 독일, 미국, 일본에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5-12%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은 편이다. 2019년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⁹⁾에 따르면, 한국은 15-29세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비율이 6.7%에 불과하지만, 50세 이상에서는 39.1%로 무려 32.4%p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나, OECD 전체 평균은 가장 낮은 연령대와 높은 연령대간 차이가 10%p가 안 된다. 이처럼 국제비교에서 한국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과 함께 연령대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은, 특히 사회적 지지 결여의 측면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한국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한 사회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는 사회의 질서를 위한 법과 규제에 대해 낮은 순응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들은 좀 더 위험

9)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OECD 국가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그림 참조). 15-29세, 30-49세, 50세 이상으로 비교한 결과, OECD 평균 4.8%, 9.7%, 12.9%를 나타냈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 결여 수준이 증가하며, 가장 낮은 연령대와 높은 연령대 간 차이가 약 10%p이다. 반면 한국은 15-29세에서 6.7%, 50세 이상에서 39.1%로 32.4%p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며 투자와 혁신, 고용 증대와 같이 국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저하될 수 있다(OECD, 2013). 또한 정부 신뢰가 낮은 경우 정부의 정책 수행에 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이 요구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의 국가발전을 염두에 둔 정책 설계가 아닌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전략을 선호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이우진·하솔잎, 2016).

한국은 2010년~2018년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장기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이 갖는 사회경제적 지위도 상승하였다. 실제로 여성 일자리의 질과 여성의 경제적 역할도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성별 임금격차 비율은 2011년 36.6%로 최근 2018년 34.1%로 소폭 개선되었을 뿐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급기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권고 받기도 했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임금 분포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평등법을 개정하여 250인 이상 사업장에 남녀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는 기업이 정부의 임금 격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임금불평등이 2012년 이후 저학력 저임금 부문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경력단절, 유리천장 등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불평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 한국의 사회통합지표 변화 추이

세부 지표	지표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	77.4 (90.3)	77.4 (90.3)	77.4 (90.3)	78.5 (89.9)	78.5 (89.9)	78.5 (89.9)	75.6 (89.2)	75.6 (89.2)	75.6 (89.2)	79.4 (90.4)	79.4 (90.4)	79.4 (90.4)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25.3 (42.9)	25.3 (42.9)	25.3 (42.9)	27.7 (39.9)	27.7 (39.9)	27.7 (39.9)	29.7 (39.8)	29.7 (39.8)	29.7 (39.8)	33.0 (42.7)	33.0 (42.7)	33.0 (42.7)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	-	-	39.6 (15.6)	36.6 (15.1)	36.3 (15.2)	36.6 (15.4)	36.7 (15.0)	37.2 (14.8)	36.7 (14.2)	34.6 (13.9)	34.1 (13.8)
투표	투표율 (%)	62.7 (73.3)	-	-	-	-	75.8 (66.0)	-	-	-	-	77.2 (72.4)	-
온라인 활동	인터넷 접속률 (%)	79.7 (43.9)	80.5 (48.9)	81.1 (55.3)	81.5 (58.3)	81.6 (63.0)	82.1 (68.0)	98.1 (69.9)	98.5 (74.8)	98.8 (77.2)	99.2 (80.2)	99.5 (82.7)	99.5 (84.0)

주 1) OECD의 원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은 '-'로 표기

주 2) 괄호 안은 OECD 평균값임

원자료 출처: OECD Stats, <https://stats.oecd.org/>

4-3. 향후 과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상호 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적 지지는 주위 사람에 대한 신뢰를 넘어 규범과 가치를 실현하는 대인 관계망의 구성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사회적지지 구축은 건강 수명 연장 같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면서 사회통합지표들 중 일부는 악화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다.

한국은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이 필요하다. 2019년 세계가치관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10명 중 9명은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3년 86.9%에서 2016년 87.7% 그리고 2019년 9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 경제 수준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3년 43.9%에서 2016년 38.8% 그리고 2019년 34.6%로 감소한 반면,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3년 50.9%에서 2016년 53.1% 그리고 2019년 59.8%로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서상목, 2020). 또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갈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고, 2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3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4위 '부유층과 서민층 간 갈등', 그리고 5위 '기업가와 근로자 간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Gallup, 2019). 따라서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 형평성, 이념 갈등 등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노동자 지위 향상,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 형성, 공평한 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 통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타인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도 지표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가치관조사(WVS)를 바탕으로 집계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갤럽 조사결과를 사용한다.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6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p 가까이 낮았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75)였다. 한편 한국인의 정부 신뢰도는 더 낮았다. 정부 신뢰도는 0.28에 불과했고 청년층의 정부 신뢰도는 0.17로서 이보다 더 낮았다. 정부 신뢰도 1위 국가는 스위스였다.

2019 세계번영지수는 한국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진단했다.¹⁰⁾ 한국은 세계 167개국 중 28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상위의 종합지수에 랭크됐지만, 구성원 간 상호신뢰나 협조,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사회적

10) 레카툼연구소는 영국의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로 '세계번영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번영지수는 경제적 기반, 통치자배 구조, 개인의 자유(표현의 자유), 교육, 건강과 사회자본, 건강 수준, 행복 수준 등 9개 부문을 종합해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세계 지수이다.

자본 부문은 145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을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어릴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통한 학습이 중요하다.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게 하며, 개별 근로자에게는 임금격차가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진명구, 2020). 이를 위해 사용자가 성별, 직종, 직급/직무별 임금액 등 임금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임금공시제’¹¹⁾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대면(Untact) 활동이 일상화되고, 소비·투자 패턴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활동의 범위가 재택근무,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다.

11) 성별 임금분포공시제는 2018년 공공기관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2월에는 민간기업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임금분포공시제 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계의 반발로 민간기업 임금정보 공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와 고양시가 소속 출연·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제4장

마무리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스마트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통해 'ICT 기술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며, 기존 세상에서의 생산, 유통, 소비, 거래, 교육, 의료 등 대다수의 일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할 것이다(성경룡, 2020). 특히, 출생률, 노인 빈곤율, 실업률 등 각종 사회지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저고용 시대가 장기화되고, 향후 AI, 로봇,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구사하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기술·경제적으로 고도화되고 첨단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정치적 측면에서는 더욱 분열되고 수많은 갈등에 봉착할 수도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 갈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은 모든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기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전통적 사회복지제도 이외에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장영신, 2020).

한국은 1990년대 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 속도 둔화와 성장잠재력 약화, 둘째,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고조, 셋째, 초저출산 시대와 고령화로 복지재정 위기, 넷째, 분배 정의 차원에서 정치권의 경제정책 개입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 다섯째, 보수와 진보 세력 간 사회적 갈등 심화다(서상목, 2020). 이러한 새로운 사회문제가 사회지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정책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주요 지표가 OECD 국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열위에 있는 지표는 '출생률과 인구성장률', '고용', '노인빈곤', '사회적지지' 등이다.

첫째, 코로나19로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표출됐고, 급기야 이는 저출생에도 직격탄이 되었다. 우선 비혼 현상이 심화되었다. 청년 취업난으로 결혼식은 미루어지고 결혼에 대한 당위성도 낮아지는 등 부정적인 결혼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한 젊은 부부도 육아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는 우리나라가 사상 초유의 최저 합계출생률을 기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19년 0.92로 지켜오던 출생률 0.9의 벽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3월 0.8 이하로 떨어져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를 초래했다.

코로나19는 조만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통해 종식될 수 있는 일시적인 유행성 감염병이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문제이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20, 30대 젊은 층 감소, 결혼 포기 풍조 등을 들고 있다. 주요인은 교육 및 주택비 부담,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다(통계청, 2020).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청년층에서는 자발·비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 이렇듯 탈가족과 더불어 탈노동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개인의 삶의 질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부가 계획한 출산을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마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같이 인구정책이 국가·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향후 세대별 다양한 삶의 형태를 노동, 여가, 교육, 돌봄 등 요소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난 15년간 세 차례에 걸친 저출산기본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음에도 세계 최저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의 고질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1960년대 초부터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승자의 저주’가 되어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보육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분야에서 정부 저출산 대책의 역점을 두었으나, 이제부터는 혼외출산을 금기시하는 등의 가치관 재정립 문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출산 억제에 기본 논리는 ‘아이를 적게 낳아 잘 살아보자’라는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정책 기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시대를 맞아 학교교육은 물론 시민 대상 사회교육에 가족의 중요성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저출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서상목, 2020).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한국 복지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정이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점을 고려한다면 혼인 기피가 만연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일본의 이른바 8050 문제나 무연고 1인 가구 문제 등이 향후 우리나라에서 예상보다 심각하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은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잠재되어 있던 취약구조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불안과 실업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취약구조에는 협소한 임금섹터(넓은 자영업섹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격한 임금 격차로 인한 이중구조, 그리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 조기 강제퇴직제도 등이 포함된다(방하남, 2009).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통계상 실업률이 낮은 나라이며 이는 IMF 경제위기 때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사회는 기술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저성장 지속으로 인한 경기(景氣) 불안 요소, 국내외 정치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부문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직도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항공·여행·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현재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실업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으로는 먼저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어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조치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재택근무가 확대되었는데 직종과 산업에 따라 상이한 재택근무 가능비율은 새로운 사회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기업은 고용불확실성을 인식하여 향후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70% 이상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육성,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 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바, 기존의 현금 제공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 전체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근로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간 부문에서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업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가장 높다.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2017년 44.0%보다 0.6% 포인트 감소하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다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도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2019년 0.406으로, 2018년 0.419보다 감소했다.¹²⁾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노인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미흡한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노인 대상 소득보장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다. 노인빈곤을 줄이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소득보장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일 할 수 있는 고령층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에도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점과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에서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고령층의 숙련된 기술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에 대한 사례

12) 한겨레신문. [경제] “노인 기대여명은 높는데 빈곤율은 OECD 최고”, 2020년 9월 28일자 기사.

연구를 통해 노인세대의 지속적인 일자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되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김태완, 2019).

인구문제 또한 향후 빈곤 및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50년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김미곤, 2014).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노인인구 비율 증가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 및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고, 여기에 국가의 역할이 미약하면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 및 불평등조차도 높은 상태로 유지시킬 것이다.

넷째, 사회적지지 지표는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사회관계망 형성이 미약하여 사회적지지 수준이 매우 낮아 불안감이 높은 사회이다. OECD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척 혹은 친구들이 있는가?”로 사회관계의 통합성 측면을 평가한다. 한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청년층은 일곱 번째로 낮았고 30~49세 중장년층도 세 번째로 낮았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응답이 불과 6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들의 사회관계망 수준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불안감과 고립감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소외와 고립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사회적 신뢰의 하락, 사회적 참여의 위축과 함께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자본의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언급된다. 지난 10년간 독일, 미국, 일본에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5~12%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2006~2018년 평균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30대 이하가 6.7%인데 비해 50대 이상이 39.1%로 연령대별 격차가 OECD에서 가장 높다. 한국에서 사회적 고립은 2016~2018년 중 사회적 접촉이나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공히 증가 하는 추세이다. 사회적 고립이 높은 60대 이상에서는 고립이 완화되는 반면 20대에서는 고립이 늘어나고 있어 연령대별 격차 역시 2015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고립이 심하지만 학력별 격차 역시 최근 줄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주관적으로 고립감이 높을 뿐 아니라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면서 사회지표 중 일부는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지표들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사설] ‘코로나 폐업’ 벼랑 몰린 자영업, ‘착한 임대’로 숨통 터줘야. 2020년 9월 8일자 기사.
- 고경환(2018). 국제 수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보건복지 현황과 통계 생산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6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2020).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0월 노동시장 동향 보도자료.
- 구인회(2020). 양극화와 사회연대.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9-32.
- 국민일보. 그나마 선방한 한국… 숫자로 본 ‘코로나가 망친 경제.’ 2020년 10월 6일 기사.
- 권혁민(2020). 한국 ICT 산업 현황과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 김갑수(2020). PISA 2018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학생들의 ICT 접근성과 교과 활용도 분석. 24(1), 39-48.
-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정세분석』, 한국은행.
- 김도균(2015). 자영업 부채의 이중성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채 증가. 경제와 사회, 108, 73-107.
- 김도균(2018). 연령별 자영업 경험과 소득계층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5(2), 281-304.
- 김미곤(2014). 빈곤·불평등 추이 및 전망. 보건복지포럼 제21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나(2014). 가구유형별 빈곤과 배제의 특성 연구. 한국가족학회 26(1), 237-265.
- 김안나·노대명·김미숙·신호성·홍인옥·김태완·강민희·이소정(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2019). 노인빈곤 현상과 노인빈곤 완화 방안: 제31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태완(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진(2020). 코로나19의 노동시간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BOK 이슈노트 제 2020-13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 Gallup(2019).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 박찬희(2019). 노인부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3), 328-335.
- 방하남(2009). “한국의 실업: 구조와 동향”, 2009년 제3차 정책포럼 발제자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성경룡(2020). 한국판 뉴딜정책 5가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서상목(2020). 사회적 가치 시대를 연다: 경제적 가치 시대를 넘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송다영·백경훈(2020).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기본계획 평가와 대안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6(1), 175-209.

- 신유리(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2), 299-323.
- 신하영·박수경(2017). 청년여성 고용지원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마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우해봉·장인수(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도현(2013). 동유럽 복지국가에서의 사회정책의 차이: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35, 279-304.
- 윤희숙(2017).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논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의 대비, 응용경제 19(4), 5-41.
- 이동선(201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 43(1), 259-284.
- 이서원(2010). 독일 경제가 위기에 강한 이유. LGERI 리포트, 1-18.
- 이우진·하솔잎(2016). 정부신뢰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응용경제, 18(3), 81-104.
- 이정아(2020). 노동시장 변동 추이와 코로나19 확산. 고용동향 브리프, 2020(3), 14-20.
- 이지원(2017).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3), 167-195.
- 임완섭·김현경·김인춘·Theo Papadopoulos Antonios Roumpakis·박형준(2016).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원혁·이태준·이용수·나정현·김선진·정성진·이인영·윤혜민·이준호(2018). 국민중심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신뢰도 제고방안 연구. KDI 한국개발연구원.
- 장영신(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방향. 복지저널. Vol 14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전광희(2020). 한국 인구 무엇이 문제인가?, 인구문제론집 32, 20-27.
- 전기택(2020). 코로나19 확산과 여성고용. 젠더리뷰, 여름호, 70-77.
- 진명구(2020).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 정책과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0(3), 27-49.
- 통계청(2020). 2020년 10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 통계청(2020). 2020년 고령자 통계.
- 한겨레신문. 2019년 9월 30일자 기사.
- 한겨레신문. [경제] “노인 기대여명은 높는데 빈곤율은 OECD 최고”, 2020년 9월 28일자 기사.

- 한국경제연구원(2020).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2.
- 한국고용정보원(2020). 2020년 9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성별임금격차 감소,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중하위층 여성에만 나타나는 한계. KWDI Brief, 제48호.
- 한준(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 홍경준(2020). 밀린 과제와 닦친 도전: 한국 사회보장 혁신 방향의 모색.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413-436.
- 황명진(2020). 인구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와 커뮤니티 케어. *공공사회연구*, 10(2), 5-28.
- Capano, G., Howlett, M., Jarvis, D. S. L., Ramesh, M. and Goyal, N. (2020). Mobilizing policy (in)capacity to fight COVID-19: Understanding variations in state responses. *Policy and Society*, 39(3), 285-308.
- Esping-Andersen & Myles(2009). Economic in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Mathieson, J., Popay, J., Enoch, E., Escorel, S., Hernandez, M., Johnston, H., & Rispel, L. (2008). Social exclusion meaning, measurement and experience and links to health inequalities. A review of literature. *WHO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 Background Paper*, 1, 1-91.
- Ochiai, E.(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lism in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36, 219-245.
- OECD(2014). 한 눈에 보는 사회 2014: OECD 사회지표.
- OECD(2016). 한 눈에 보는 사회 2016: OECD 사회지표.
- OECD(2019).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 OECD 사회지표.
- Sainsbury, D.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UN(1997).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67, New York.
- UN(2020). Goal of the Month|May 2020.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goal-of-the-month-may-2020/>.
- Wilkinson & Pikett(2009).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Dysfunc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5, 493-511.

World Bank(2020). COVID-19 to Add as Many as 150 Million Extreme Poor by 2021.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0/10/07/covid-19-to-add-as-many-as-150-million-extreme-poor-by-2021>

World Economic Forum(202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Geneva: World Economic Forum.